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움

일시 2011. 9. 21(수) 13:00 ~ 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C O N T E N T S

05 프로그램

07 인사의 말씀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0 축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3 조사 개요

23 **세션 I :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25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55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외인식 변화”

이상신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93 “차기 대선과 대북정책”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113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박정란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157 **세션 II :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준비의 재점검**

159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161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

163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9 이주철 (KBS 남북교류협력단 연구원)

171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175 최진이 (림진강 발행인)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일시 : 2011년 9월 21일 (수) 13:00 ~ 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P R O G R A M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사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3:40 ~ 13:50	축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3:50 ~ 15:40	세션 I :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사회	김병섭 (서울대학교 교수 행정학회 회장)	
발표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외인식 변화”	이상신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차기 대선과 대북정책”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박정란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15:40 ~ 16:00	휴식	
16:00 ~ 17:50	세션 II :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준비의 재점검	
사회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패널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철 (KBS 남북교류협력단 연구원)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최진이 (림진강 발행인)	
17:50 ~ 18:00	폐회사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운찬 위원장님은 이전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실 때 우리 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하셨고 또 통일학 연구비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기엔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 바쁜 가운데서도 사회와 발제, 토론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저희 연구원이 매년 수행하는 '통일의식조사'의 2011년도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통일이라는 과제가 우리 모두의 희망하는 바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지향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물론이고 그 시계열적 변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연구원이 개원하면서부터 시작한 작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조사(social survey)는 학술적 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권의 후보선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뉴스에서도 여론조사 내용들을 접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설계에 기초하여 '현재'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종합적인 양적 자료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여 조사한 자료들이 일회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조사자료가 학계 내부에서 잘 공유되지도 않으며 자료의 질과 결과해석을 놓고 열린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이 조사가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한 집합적인 의식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누적적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사의 방법론적 엄밀성과 문항의 비교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학계에서 함께 공유하고 토론할 자료가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적인 경향을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일부 문항만 선택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편향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의 연구기관에서도 이 통일외식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중요하게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 5년 동안의 조사와 분석을 해 오면서 두가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하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어떤 의식의 정형성 같은 것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남북관계가 변화하며, 국내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큰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남북문제와 관련한 문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응답패턴이 매년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응답의 정형성은 어떤 점에서 우리사회 구성원이 공유한 집합적인 의식형태,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항심'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 생각의 모양, 희망의 방향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은 장차 근거 있는 예측과 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변화의 흐름이 확인된다는 사실도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의 조사를 잘 살펴보면 정형성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 확인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변화를 너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찬반 태도 중심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 흐름은 이런 차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틀로서만 판단하기 어려운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종합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분단조건이 형성된 20세기 중반과 통일을 지향하는 21세기의 시간적 차이, 전쟁과 기근에 시달렸던 신생국가 한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화를 성취한 현대 한국의 차이, 전쟁과 민족이산의 경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세대의 정서와 개방적이고 개성적인 젊은 세대의 감각 간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냉전시대의 한반도상황과 급변하고 있는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세가 얼마나 다른지도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통합적인 제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여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의 마음과 의지가 확립되고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확장시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인의 좀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의 구조와 변하고 있는 흐름 양면을 정밀하게 고찰하고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일의 전망과 소통능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이 조사결과와 해석을 통해 우리 사

회가 좀 더 높은 수준의 통일준비역량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때마침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새로이 취임하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움틀 것을 기대하는 정서를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이전과는 다르지만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진전될 것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남북관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이라는 중요한 해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또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구상과 정책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201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우리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이런 답답한 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흐름을 반응하는 새롭고도 영향력 있는 변화가 한반도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박 명 규

축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명규
원장님, 그리고 사회와 발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는 이 가을에 통일이라는 매우 엄중하고도 긴요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에
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통일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
다보니 통일 그 자체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부지불식간에 후일의 과제로 미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이란 화두는 미루어 없습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전환이 그랬고,
독일의 통일이 그랬듯이 한반도의 상황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
니다. 더구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역할을 더욱 능동적으로 수
행해야 할 한국으로서 분단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통일한반도를 이룩 하는 것
은 피할 수 없는 미래전략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통일 논의 활성화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 8.15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 통일 구상을
강조한 이래,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남북관
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통일에 대한 깊은 숙고와 정책적인 구상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
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각종 도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이

우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변국들이 인정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통일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야 할 일차적 역량과 책임은 우리 대한민국이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더불어 기업, 민간단체, 시민사회, 종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는 특히 이 중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한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조적인 지혜와 사고, 혁신의 정신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 재직 시 현재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을 설립하였던 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민족적 과제인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 때 심은 나무가 어느덧 크게 자라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주신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통일평화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균형있는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자,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균형있는 동반성장은 질적인 발전과 양적인 성장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생각하면 '동반성장'은 남과 북 사이에서도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 격차는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 동력을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세기 한반도는 남과 북이 동반성장할 때 더욱 크게 번영할 것이며 그 통일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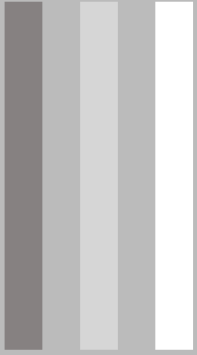
통일을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과 꿈, 미래에 대한 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주체로서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담들을 감당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통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해온 국민들의 통일의식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움이 이러한 과제들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들이 통일을 견실하게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 운 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통일의식조사(2007년 - 2011년) 조사개요



I. 조사 목적

II. 주요 조사 내용

III. 조사의 기본 설계

IV. 자료처리 및 가중치

V. 응답자 특성

I.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북핵, 탈북자 증가, 남북 경제교류 확대 등의 대북 관련 문제와 이로 인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 통일 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망 등을 조사하여 통일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통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대북 사안별 시급성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이익 정도 (남한/자기자신) ○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 ○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2009-2011)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체제
북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 남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2007-2008) ○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2007-2008) ○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2009-2011) ○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 북한 사회 인지도 ○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2008-2011) ○ 한반도 전쟁 가능성(2007-2010)

구 분	내 용
대북 지원에 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2007-2010) ○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2008-2011)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2008-2011) ○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 (2008) ○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인식 ○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 주변국 비협조 시 남북한 통일 가능성 (2007) ○ 중국과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2011) ○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2007-2010) ○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 1970년대 경제 발전에 대한 견해 (2007-2008) ○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반미정서 우려 수준 평가 (2007-2010)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 정치적 성향 ○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2007-2010) ○ 촛불 시위의 역할에 대한 견해 (2008-2009) ○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신뢰도 (2010) ○ 천안함 사건 해결 방안 적절성 평가 (2010)

구 분	내 용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사건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2010) ○ 2007년 대선 시 투표한 후보(2007-2010) ○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 (2010) ○ 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 (2011) ○ 한반도 전쟁 가능성 (2011) ○ 지지정당 (2011) ○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 (2011) ○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2011)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2011)
응답자 특성 (Demographic Vari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16개시도, 지역, 지역크기, 결혼 상태, 종교, 교육수준, 직업, 소득 수준, 응답자가 느끼는 상대적 소득수준, 사회계층, 생활 수준 개선도,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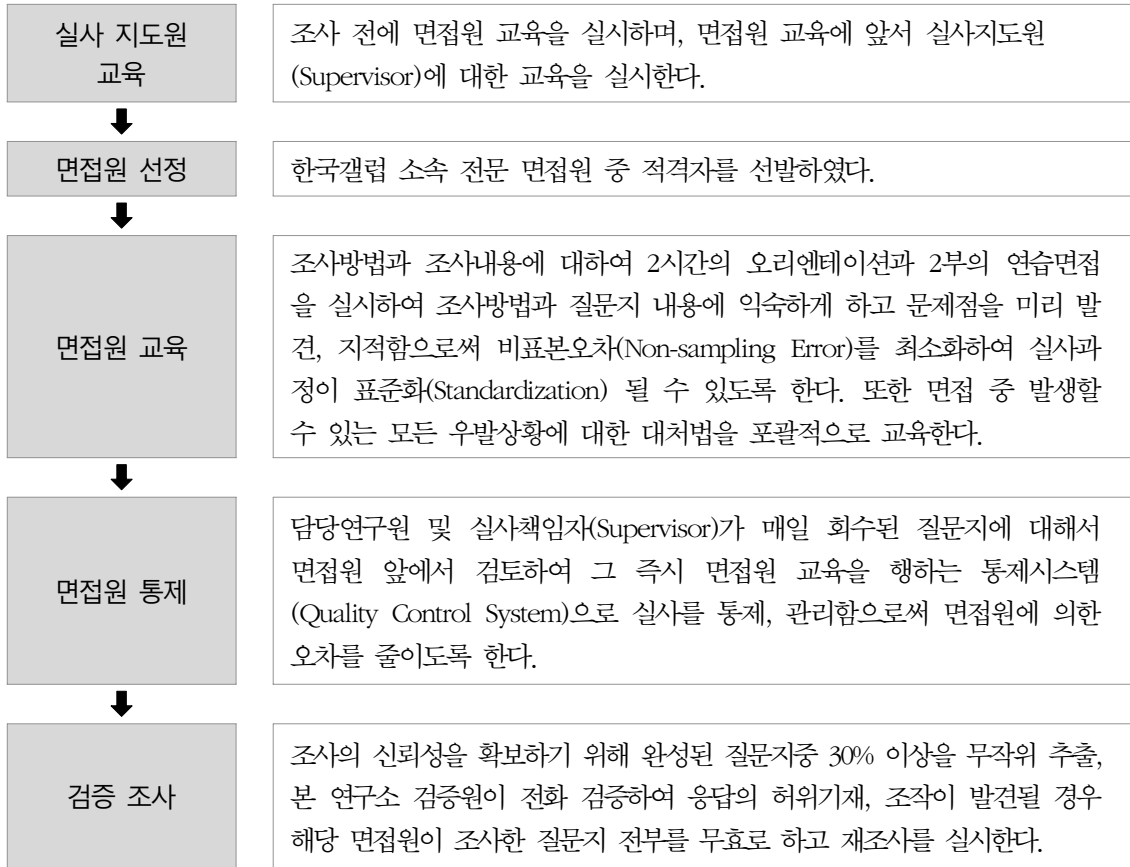
Ⅲ.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 분	내 용
1)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
2) 표본 크기	2007 년 1,200 명 (유효표본)
	2008 년 1,213 명 (유효표본)
	2009 년 1,203 명 (유효표본)
	2010 년 1,200 명 (유효표본)
	2011 년 1,201 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주1>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4) 표본 오차	± 2.8% (95% 신뢰수준)

주1) 전국 인구현황(2005년 인구총조사, 통계청)에 따라 조사표본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배분하고 난 후, 각 지역별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지점(통반)을 추출함.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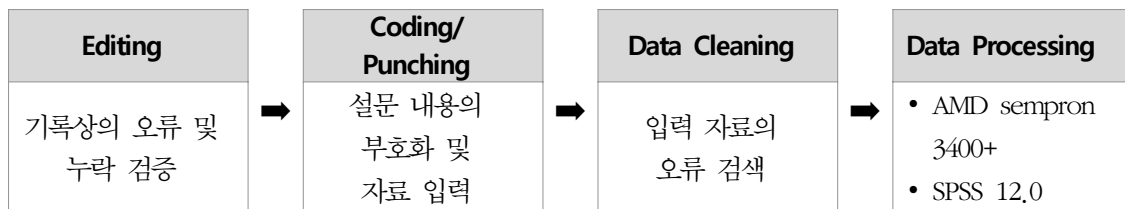
3. 조사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사 방법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기간	2007년 7월 04일 ~ 7월 20일 (13일간) 2008년 8월 21일 ~ 9월 10일 (15일간) 2009년 7월 15일 ~ 8월 05일 (16일간) 2010년 7월 12일 ~ 7월 27일 (12일간) 2011년 7월 26일 ~ 8월 15일 (20일간)

IV. 자료 처리 및 가중치

1.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AMD sempron 3400+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를 하였다.



2. 가중치

조사 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단(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분포에 맞게 가중치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V. 응답자 특성

구 분	조사표본 : 사례수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체	1200 (100%)	1213 (100%)	1203 (100%)	1200 (100%)	1201 (100%)	
지역별	수도권	591 (12.3%)	575 (47.4%)	593 (49.3%)	590 (49.2%)	606 (50.5%)
	중부권	118 (2.5%)	128 (10.6%)	118 (9.8%)	118 (9.8%)	117 (9.7%)
	호남권	119	130	119	119	116

구 분		조사표본 : 사례수 (%)				
		2007	2008	2009	2010	2011
		(2.5%)	(10.7%)	(9.9%)	(9.9%)	(9.7%)
	영남권	323 (6.7%)	330 (27.2%)	324 (26.9%)	324 (27%)	314 (26.1%)
	강원	36 (0.7%)	36 (3%)	36 (3%)	36 (3%)	35 (2.9%)
	제주	13 (0.3%)	14 (1.2%)	13 (1.1%)	13 (1.1%)	13 (1.1%)
성별	남자	603 (50.3%)	605 (49.9%)	604 (50.2%)	603 (50.3%)	611 (50.9%)
	여자	597 (49.8%)	608 (50.1%)	599 (49.8%)	597 (49.8%)	590 (49.1%)
연령별	19~29세	302 (6.3%)	269 (22.2%)	303 (25.2%)	303 (25.3%)	259 (21.6%)
	30대	314 (6.5%)	302 (24.9%)	313 (26%)	312 (26%)	290 (24.1%)
	40대	305 (6.3%)	348 (28.7%)	305 (25.4%)	305 (25.4%)	306 (25.5%)
	50세 이상	279 (5.8%)	294 (24.2%)	282 (23.4%)	280 (23.3%)	346 (28.8%)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51 (3.2%)	150 (12.4%)	132 (11%)	104 (8.7%)	112 (9.4%)
	고졸	505 (10.5%)	567 (46.7%)	492 (40.9%)	462 (38.5%)	510 (42.5%)
	대재 이상	537 (11.2%)	496 (40.9%)	579 (48.1%)	634 (52.8%)	565 (47.0%)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4%)	33 (2.7%)	26 (2.2%)	32 (2.7%)	16 (1.4%)
	자영업	291 (24.3%)	220 (18.1%)	261 (21.7%)	260 (21.7%)	335 (27.9%)
	블루 칼라	235 (19.6%)	243 (20%)	250 (20.8%)	233 (19.4%)	247 (20.6%)
	화이트 칼라	217 (18.1%)	239 (19.7%)	228 (19%)	239 (19.9%)	252 (21.0%)
	전업 주부	237 (19.8%)	311 (25.6%)	248 (20.6%)	247 (20.6%)	211 (17.6%)
	무직 / 기타	187 (15.6%)	167 (13.8%)	190 (15.8%)	189 (15.8%)	140 (11.6%)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79 (5.8%)	235 (19.4%)	224 (18.6%)	202 (16.8%)	207 (17.2%)
	200~299만원	370 (7.7%)	400 (33%)	354 (29.4%)	315 (26.3%)	287 (23.9%)

구 분		조사표본 : 사례수 (%)				
		2007	2008	2009	2010	2011
	300~399만원	297 (6.2%)	336 (27.7%)	352 (29.3%)	332 (27.7%)	384 (31.9%)
	400만원 이상	246 (5.1%)	224 (18.5%)	268 (22.3%)	348 (29%)	311 (25.9%)
	모름 / 무응답	8 (0.2%)	18 (1.5%)	5 (0.4%)	3 (0.3%)	13 (1.1%)
정치적 성향	진보적	303 (25.3%)	289 (23.8%)	299 (24.9%)	398 (33.2%)	335 (27.9%)
	중도	568 (47.3%)	583 (48.1%)	581 (48.3%)	541 (45.1%)	578 (48.1%)
	보수적	327 (27.3%)	341 (28.1%)	323 (26.8%)	261 (21.8%)	289 (24.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발표 1 :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I. 문제제기

II. 통일의식 1. 통일의 필요성 2. 통일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3. 통일에 대한 기대

III. 북한 인식 1. 북한의 존재 인식 2.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 4. 북한위기의식

IV. 맺음말

I. 문제제기

국민들의 통일의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을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느냐, 통일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며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통일의식과 대북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의 지형을 파악함으로써 갈등해소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통일의식과 대북인식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2011년 통일의식조사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단연 북한의 연평도 폭격 사건일 것이다. 작년의 조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천안함 사건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한 충격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6.2지방선거에도 반영되었듯이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정치적 논쟁에 휘말림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의 조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연평도 사건은 6.25전쟁 이후 최초의 남한본토 공격이라는 점에서 안보불안을 극도로 자극하면서 북한변수에 압도당하는 이른바 북한효과가 최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변수를 고려하면서 2011년 국민들의 통일의식과 북한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변화의 특징과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II. 통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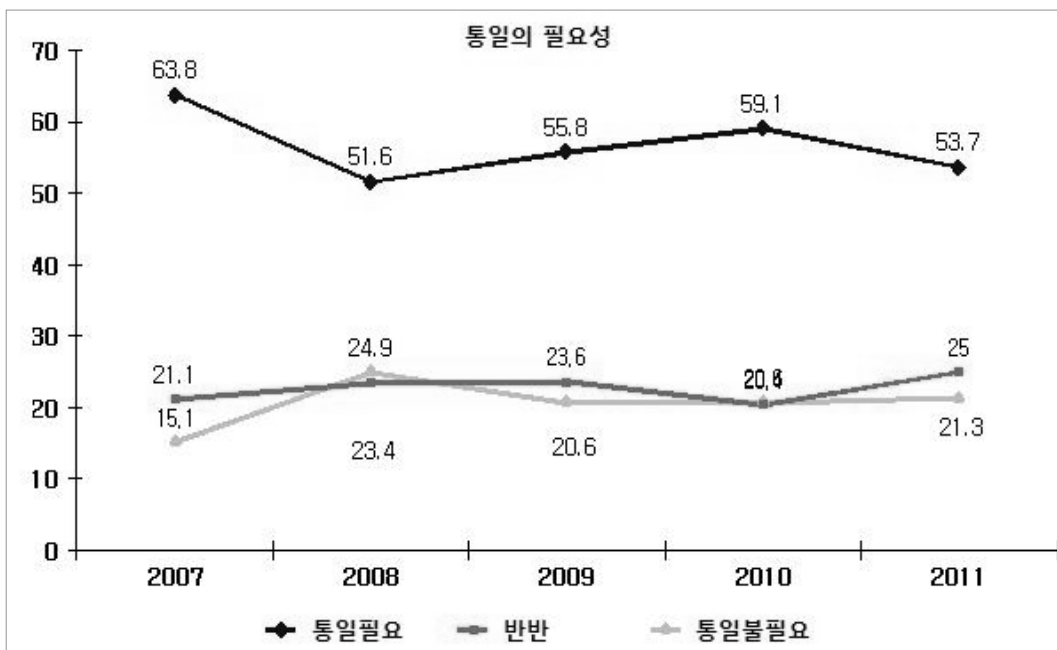
1. 통일의 필요성

1)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식 약화

2011년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작년에 비해 5.4% 낮아진 53.7%를 기록하였다. 즉 53.7%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1.3%, '반반 또는 그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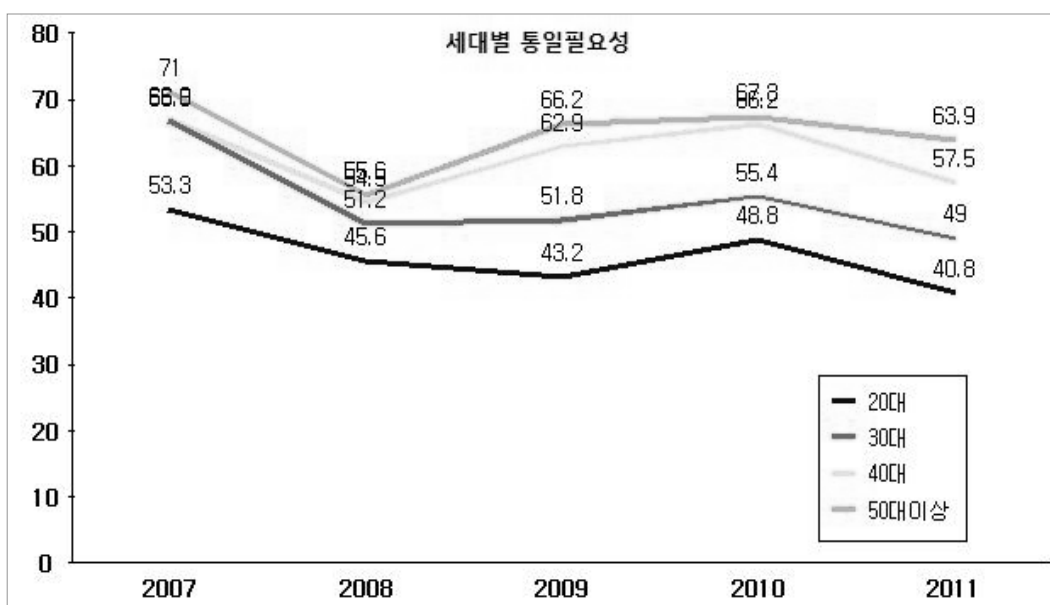
렇다'는 응답은 25.0%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8년에 63.8%에서 51.6%로 12.2% 포인트 급락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라는 담론으로 정부의 통일공론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서 통일·대북 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통일·대북 인식은 정부주도의 의식화 교육보다는 남북관계라는 환경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공론화 사업도 대북정책의 집행과 병행하여 추진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 1> 통일의 필요성 인식



조사결과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자는 60.7%인 반면에 여자는 46.4%에 불과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통일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통일의식의 격차는 13~14% 포인트로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더 높게 응답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0대는 40.8%, 30대는 49%, 40대는 57.5%, 50대 이상은 63.9%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응답하였다.

<그림 2> 세대별 통일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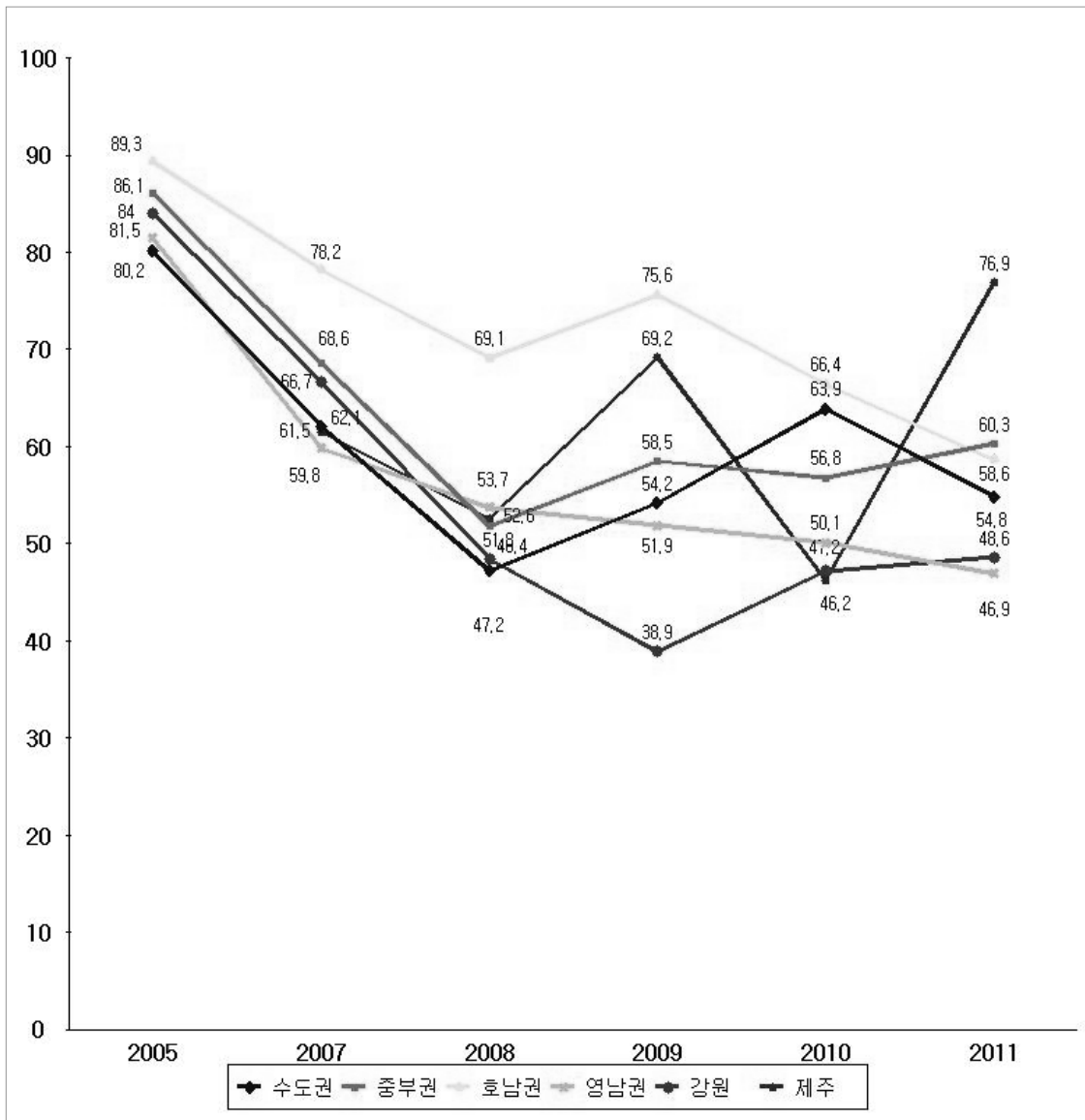
지역별 차이를 보면, 충청권(60.3%)과 호남권(58.6%), 제주(76.9%)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나 통일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영남권(46.9%)과 강원(48.6%)은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나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5년의 추이를 보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비교적 안정적 패턴을 유지한 반면, 여타 지역은 통일의식이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났다. 통일의식의 지역별 차이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져 2009년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 이후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는 호남권의 통일 필요성 의식 하락과 충청권, 강원, 제주 지역의 통일 필요성 의식 상승이 지역간 차이를 좁히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간 차이가 다시 좁혀지고 있는 이유는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즉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 한편으로는 통일의 당위성 의식을 약화(호남)시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의 필요성 의식을 강화(충청, 강원)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호남권은 군사적 위기 고조로 인해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데 반해, 충청, 강원은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변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은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05년에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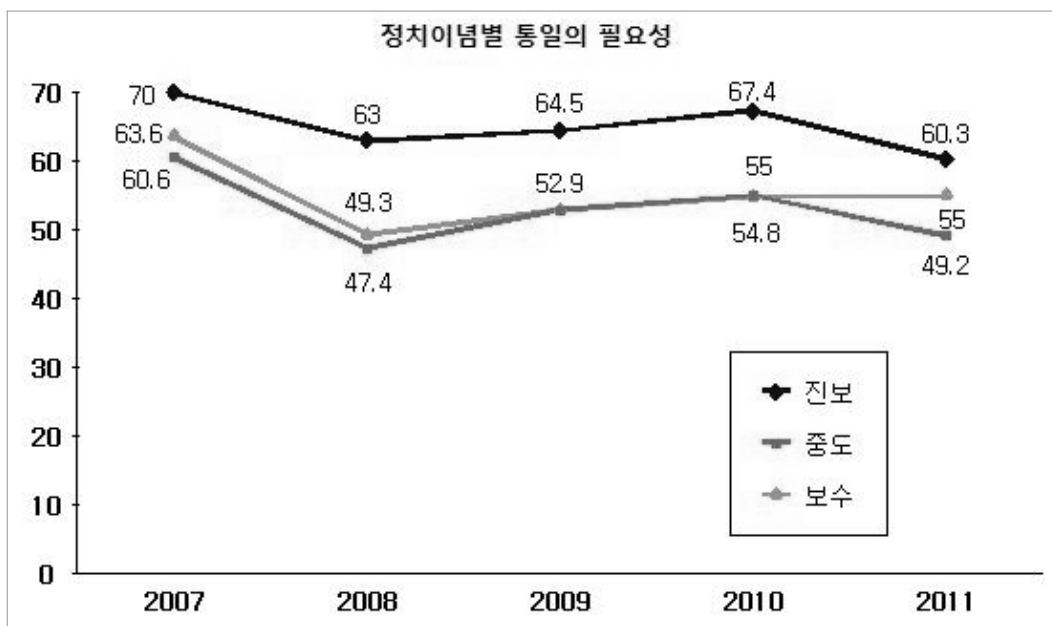
권의 통일외식은 낮은 편이었으나, 2008년 이후 급상승하여 2010년에는 가장 높은 호남권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상승세가 한풀 뒀다. 충청권도 2008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높은 통일외지를 형성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충청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통일외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수도권과 제주도는 2010년과 2011년에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즉 수도권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일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한 유일한 지역이었으나, 연평도 사건의 영향이 반영된 2011년 조사에서는 통일외지가 약화되었다. 반면, 다소 예외적이긴 하나 제주도는 2010년에 20% 포인트가 떨어졌다가 2011년에는 25% 포인트가 상승하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그림 3> 지역별 통일필요성



정치적 성향 별로 보면, 여전히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적,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진보와 중도에서는 약 8~9% 포인트가 떨어졌지만, 보수성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진보와 중도는 천안함 사건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연평도 사건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반면, ‘보수’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안함 사건은 이념집단의 통일의식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연평도 사건은 진보와 중도 성향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본 연구원의 조사 이래 진보-보수간 통일의식 차이가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정치성향별 통일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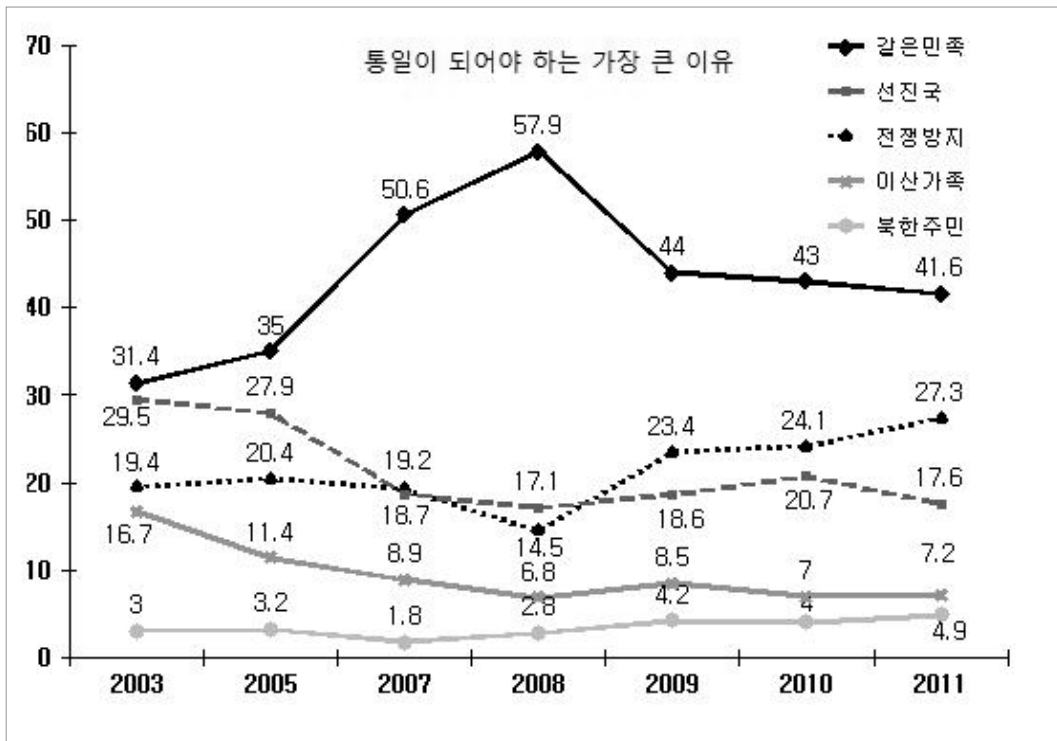


2) 통일의 이유 : 전쟁방지 비중 증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 까’(41.6%)를 꼽아 ‘민족의식’이 여전히 통일의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 반면, ‘전쟁방지’(27.3%)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17.6%), ‘이산가족 고통해소’(7.2%),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4.9%)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약간 줄어든 반면, “남북한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은 24.1%에서 27.3%로 높아졌다. 북한의 연평도 폭격

으로 북한의 공격이 본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쟁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방지'에 대한 응답은 지난 5년의 추이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2008년까지 '전쟁방지' 보다 '선진화'를 통일의 이유로 더 많이 꼽았으나, 2009년부터는 '전쟁방지' 응답이 '선진화'를 추월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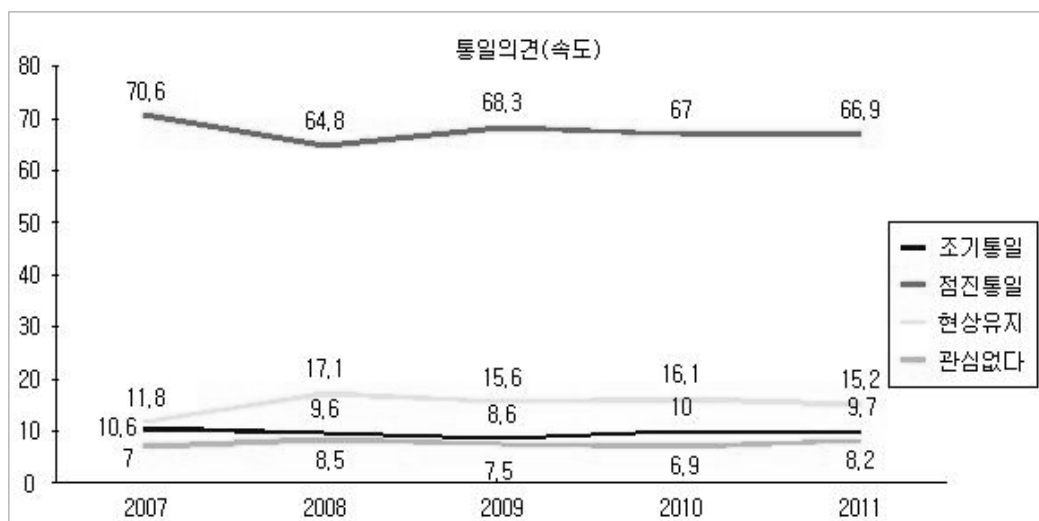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같은 민족 때문' 응답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52.9%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는 39.5%, 41.1%로 중간이었고, 20대는 29.5%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쟁방지'와 '선진화' 이유에 대해서는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전쟁방지' 응답에서 20대는 34.9%로 30대(27.1%), 30대(26.0%), 50대(22.9%)에 비해 높았고, '선진화' 응답에서도 22.8%로 다른 연령층(30대 19.3%, 40대 18.2%), 50대 11.8%)에 비해 높았다. 이는 20대 젊은층의 통일외식을 특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20대가 전쟁과 선진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민감함을 의미한다. 즉 남북관계를 이념적 틀로 보지 않고 전쟁의 방지와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매우 실용적이며 독립국가적 사고의 틀로 보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속도 : 안정적 패턴 유지

국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조기통일(9.6%)보다 점진적 통일(66.9%)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조기통일론은 10% 미만인데 비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진통일론이 67%로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현상유지’는 15.3%,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없다는 응답도 8.2%를 차지했다. 이러한 패턴은 지난 5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6> 통일의 속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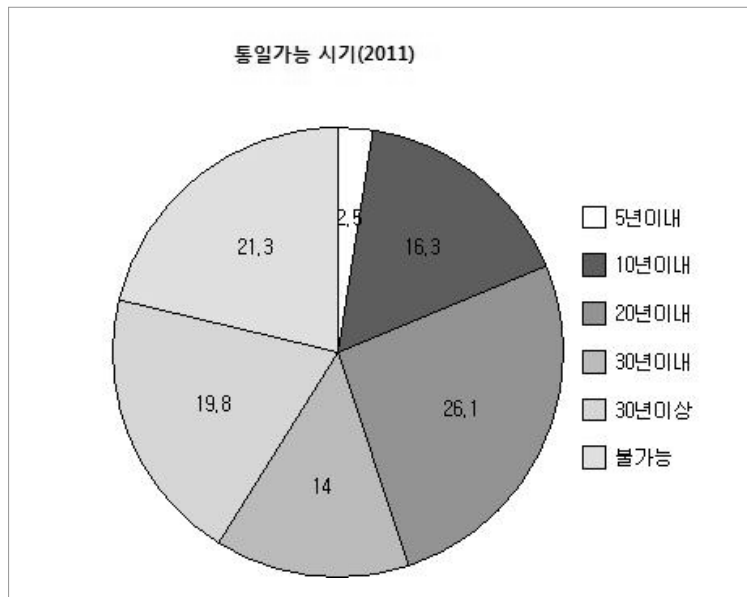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점진통일’에 대해 다른 연령층(68~71%)에 비해 낮은 58.9% 응답률을 보인 반면, ‘현상유지’와 ‘관심없다’ 쪽으로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의 응답자들이 ‘점진통일’에 대한 의견은 가장 낮은 반면, ‘현상유지’에는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 점진통일에 대해 영남권은 54.8%로 수도권(71.5%), 충청권(77.4%), 호남권(64.9%)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현상유지’는 22.6%로 수도권(14.3%), 충청권(9.4%), 호남권(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호남권은 ‘조기통일’ 선호도(15.2%)가 2009년(19.3%)과 2010년(17.6%)에 비해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다른 지역(수도권 9.1%, 충청권 7.7%, 영남권 10.0%, 강원 2.9%, 제주 7.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 절반 이상(55.1%) 20년 이내 통일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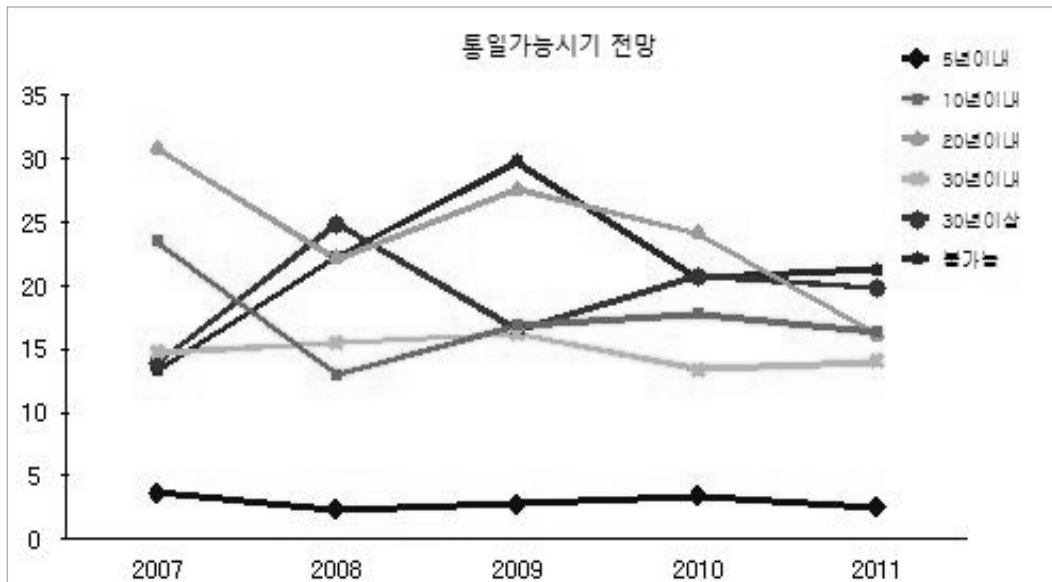
2011년 통일외식조사에서 통일을 5~10년 이내로 보는 단기적 전망보다는 20년 혹은 30년의 장기적 전망이 많았으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5년, 10년 이내로 보는 견해는 각각 2.5%, 16.3%였고, 20년, 30년 이내로 보는 의견은 각각 26.1%, 14.0%였으며, 30년 이상,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각각 19.8%, 21.3%나 되었다.

<표 1> 통일가능시기 전망(2011)



2011년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지만 지난 5년의 추이를 보면 상당한 변화를 겪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5~10년 이내로 예측했던 단기 통일가능 의견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30년 이상, 불가능 등의 의견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히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13.3%(07년)→22.3%(08년)→29.8%(09년)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10년부터 20.6%(10년)→21.3%(11년)로 안정화되고 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09년 개성근로자 억류 사건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통일외식을 강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통일가능시기 전망



3. 통일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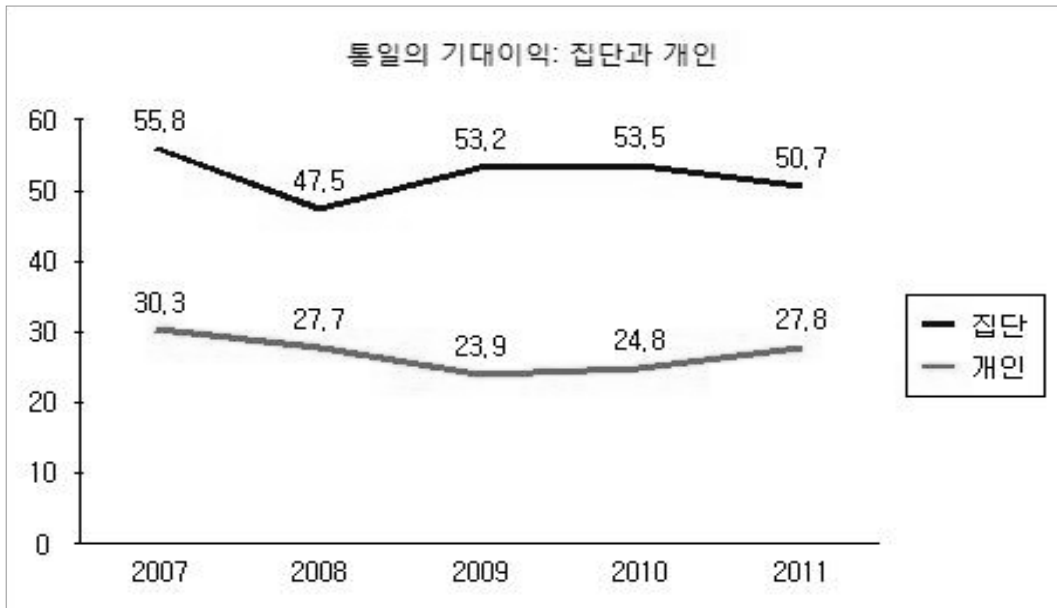
1) 통일의 집합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50.7%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49.3%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통일이 자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7.8%만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72.2%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통일의 집합적 이익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집합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 인식에서 나타난 연령별 특징은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될 것이라는 응답에서 20·30·50대가 각각 49.2%, 47.8%, 45.6%인데 비해 40대는 60.3%라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도 다른 연령층이 22.9%(20대), 27.5%(30대), 25.7%(50대이상)인데 비해 40대는 34.6%의 비교적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른바 386세대로 불렸던 진보적 세대의 통일의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으나, 일부 영역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통일이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개인적 기대감에 서는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통일세 등 통일비용 분담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비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기대감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이 가져올 지리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이익이 국가와 사회에 주는 이익 못지않게 개개인의 삶에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통일정책을 준비해야만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통일의 기대이익 : 집단과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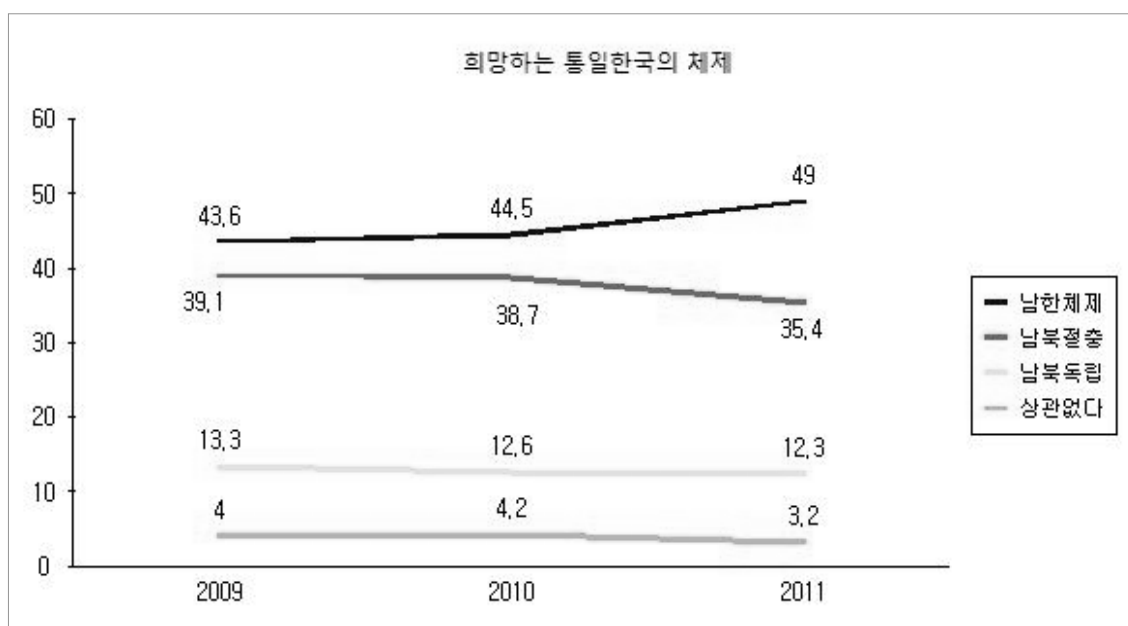
2)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 절충형은 줄고 남한의 현체제 희망은 증가

통일한국의 이념체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0년의 44.5%에 비해 4.5% 증가한 것이다. 반면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35.4%로 2010년의 38.7%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와 '어떤 체제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각각 12.3%, 3.2%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늘어나

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감소한 현상은 우리 국민이 현실적으로 연합제 또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보다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최근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증가에 의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북한권력이 김정 일 이후의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이 확실히 되는데 따른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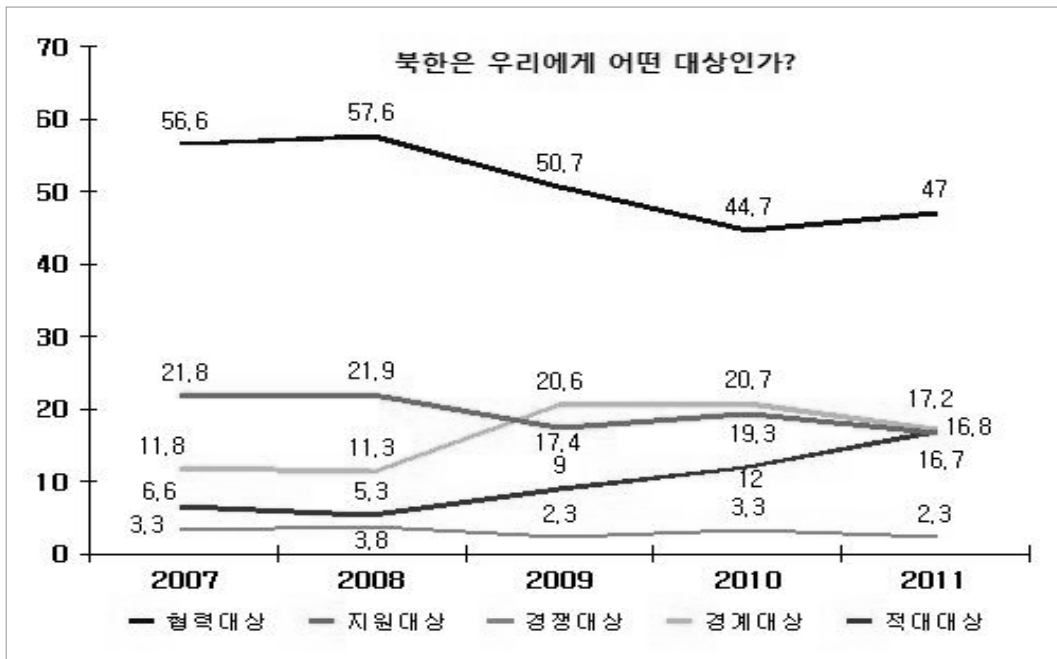
Ⅲ 북한인식

1. 북한의 존재 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의 존재인식을 묻는 질문에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7.0%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17.2%, 지원 대상 16.7%, 적대대상 16.8%, 경쟁대상 2.3%로 각각 응답했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협력대상’ 응답은 57.6%(08) → 50.7%(09) → 44.7%(10) → 47.0%(11)으로 2008년 이후 2년 연속 13%가 감소하던 상태에서 2011년에 2.3%가 증가함으로써 반전되기 시작했다

다. 그와 동시에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의견은 2.6% 감소하고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3.5%, 4.8% 높아졌다. 작년까지는 ‘협력대상’이 감소하는 만큼 ‘적대대상’ 혹은 ‘경계대상’이 증가하는 상반된 관계를 보여 왔는데, 2011년에는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이 동반 상승하는 특이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작년까지 지속되던 비판적·부정적 대북인식의 흐름이 2011년을 기점으로 양극화되는 양상으로 달라진 것이다.

<그림 10> 북한 대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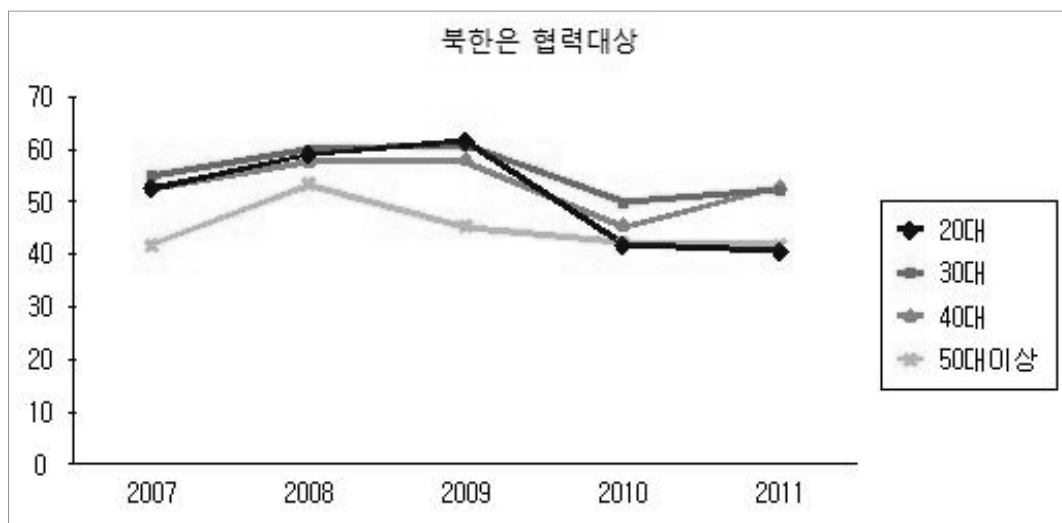
이처럼 대북인식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사건 등 남북간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같은 무력충돌을 겪으면서 한편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식이 성장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남북관계의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는 의식이 함께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대북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희망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40대와 20대·50대 이상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30·40대와 20·50대의 두 집단으로 정확히 구분되었다.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6.0%, 17.4%로 낮게 나온 반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23.8%, 26.2%로 높게 나왔다.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은 30대가 40대로부터 분리되어 40대에서만 독특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20대와 30대, 50대 이상에서는 지원대상이 각각 16.2%, 18.3%, 16.3%인데 비해, 40대는 26.2%로 높았다.

세대별 대북인식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북한 협력대상 인식에서 2010년에 40대가 20·30대 그룹으로부터 50대쪽으로 이동하였으나, 2011년에 다시 30대 쪽으로 이동하여 협력적 대북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20대의 경우에는 2010년에 30·40대로부터 벗어나 50대쪽으로 대폭 이동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 흐름이 뚜렷해진 이후 2011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9년까지는 북한의 존재인식에서 20대가 30~40대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50대 이상 그룹 쪽으로 이동하였고, 2011년에도 그러한 패턴이 지속되었다. ‘협력대상’ 응답을 보면, 30대와 40대는 각각 52.4%, 52.8%이며, 20대와 50대이상은 각각 40.7%, 41.9%로 30·40대와 20·50대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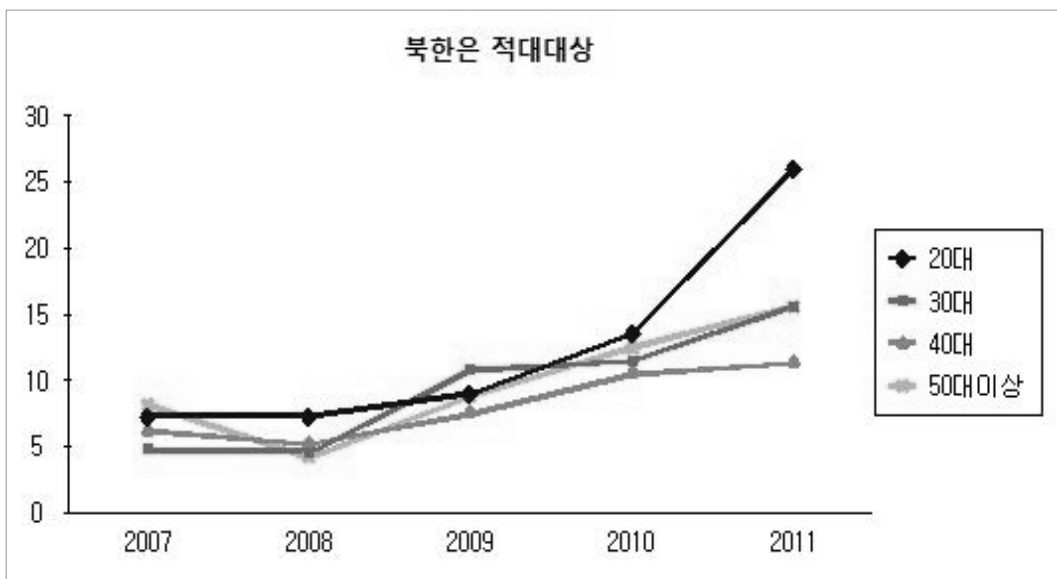
<그림 11>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20대의 보수화’는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11년에 급상승한 데서도 발견된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응답한 20대는 26.0%로 30대·50대(15.6%)나 40대(11.3%)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20대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비율(35.0%)이 다른 연령층(30대 28.1%, 40대 27.1%, 50대 23.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대

가 협력적 대북인식을 철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이른바 ‘북한효과’에 20대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월드컵축구 이후 한동안 휩쓸던 20대의 진보적 경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보수화로 돌아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2009년에는 촛불시위 등 국내정치 문제로 인해 ‘20대의 보수화가 주춤하는 듯했으나, 2010년 이후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다시 강화되고 있다. 반면 40대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통일인식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나, 2011년에는 협력적 대북인식이 다시 높아졌다. 이는 연평도 폭격과 같은 충격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30·40대는 북한을 협력적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안정된 남북관계를 유지하려는 실용적 태도를 더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2>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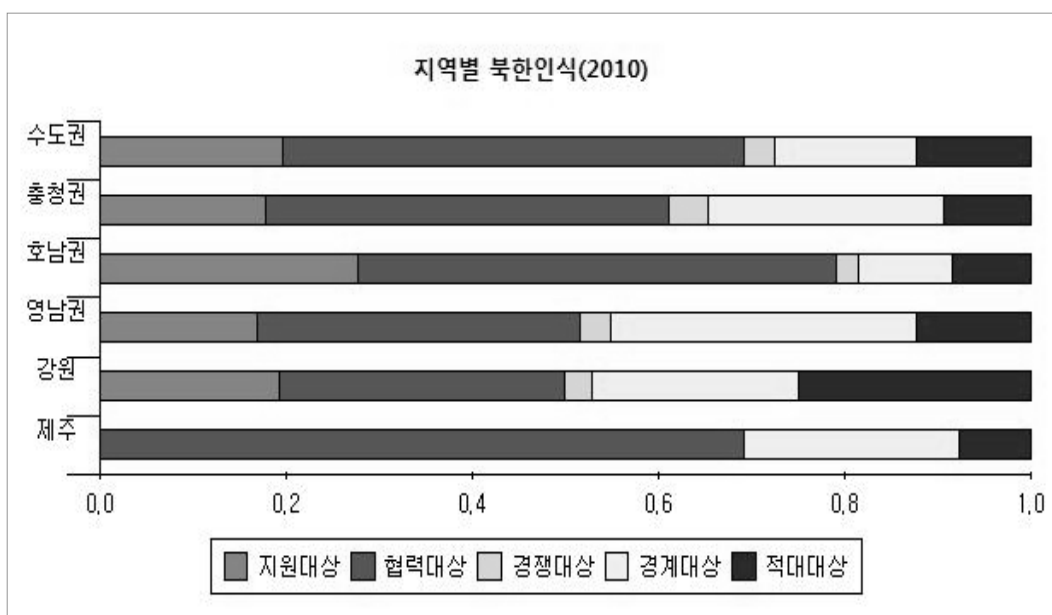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다른 의식을 보이던 호남권의 특성이 약화된 반면, 2011년에는 영남권의 의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각각 48.2%, 55.1%, 50.0%인데 비해, 영남권은 38.9%로 매우 낮았다. 또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각각 15.0%, 17.1%, 14.9%인데 비해, 영남권은 23.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북인식에서 호남권이 보이던 기존의 흐름과 매우 달라진 현상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5.1%, 25.4%, 32.8%였는데 비해, 호남권은 10.1%로 매우 낮았으며,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에서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9.7%, 17.8%, 16.9%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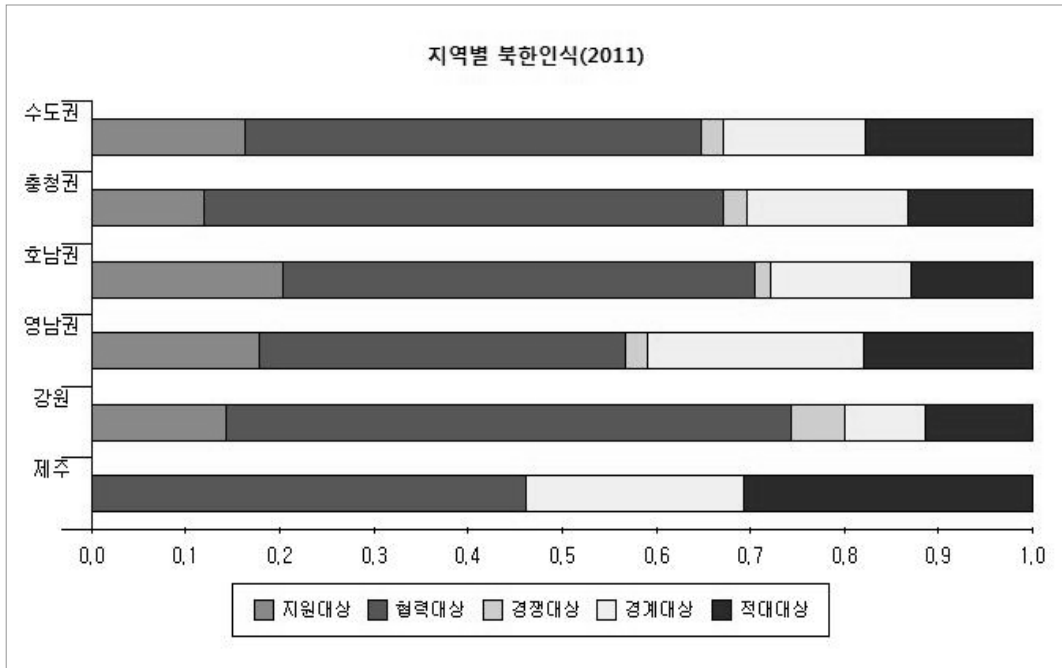
비해, 호남권은 27.7%로 매우 높았다. 한편, 강원지역의 '협력대상' 응답은 6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경계대상' 응답은 8.6%로 매우 낮아 호남권의 특성이 약화된 부분을 강원지역이 차지하였다. 또한 '적대대상'이라는 강한 비판외식은 다른 지역(충청 13.2%, 호남 12.9%, 강원 11.4%)에 비해 영남권(17.6%)과 수도권(17.9%)에서 높게 형성되었다. 호남권의 대북 긍정외식의 둔화와 영남권의 대북경계외식 상승, 강원지역의 대북 협력외식 강화 등의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 의한 위협 및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수준을 넘어서 연평도 폭격과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매우 절박한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보의 대북외식이 부정적·비판적 성향을 유지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진보'가 2009년 60.9%에서 2010년에 49.4%로 줄었고, 2011년에도 49.5%로 작년의 흐름을 유지하였다.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2009년 15.5%에서 2010년 18.6%로 늘었으나 2011년에는 12.5%로 낮아졌다. 그러나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진보는 작년의 11.1%에서 2011년에 16.4%로 늘어났다. 2010년에 급격히 감소했던 진보의 협력적 대북외식은 현상 유지되었으나, 경계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이동하는 보수화가 진행되었다. 진보의 대북외식이 비판적, 부정적으로 변한 데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지역별 북한외식(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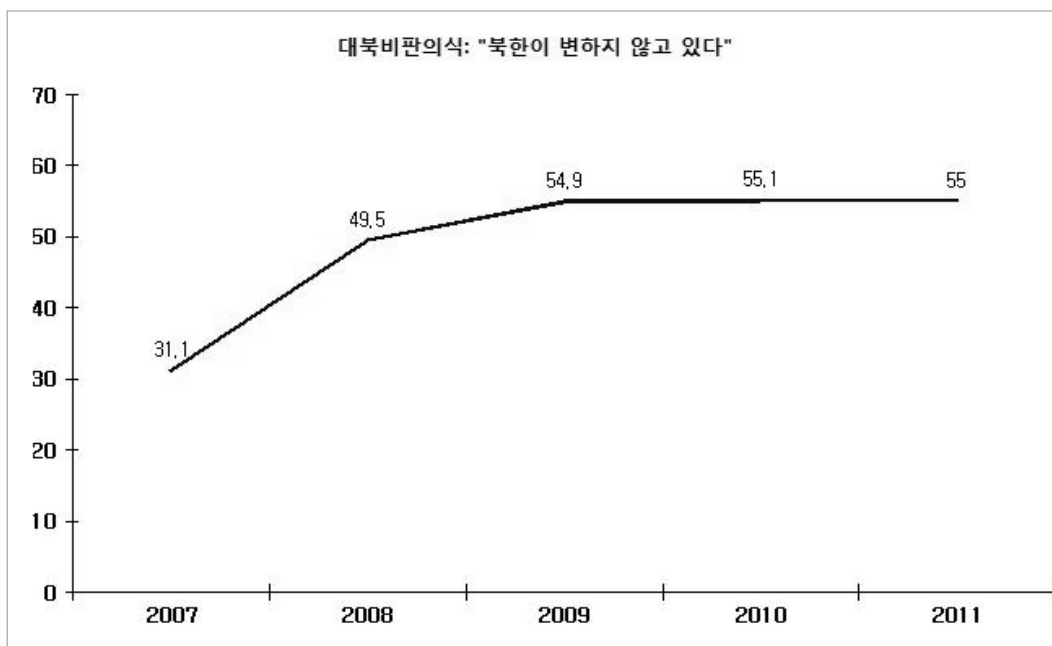
<그림 14> 지역별 북한인식 (2011)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과연 변화했다고 보는가,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변하지 않고 있다”(55.0%)는 응답이 “변하고 있다”(45.0%)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작년과 동일하였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비판의식은 31.1%(07년)→49.5%(08년)→54.9%(09년)→55.1%(10년)→55.0%(11년)로 2008년과 2009년에 높아진 이후 5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5> 대북 비판의식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50대가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유지하였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50대(58.0%)>20대(57.0%)>30대(54.1%)>40대(50.9%) 순으로 30~40대에 비해 20대·50대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을 비교하면 이른바 386세대인 40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20대의 보수화 경향도 강화되었다.

지역별로는 각 지역간 의식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대북우호 인식에서 호남권(55.2%)>충청권(50.4%)>수도권(45.0%)>영남권(40.5%)으로 각 지역간에 5%의 차이를 유지하였다. 작년에 충청권이 빠른 속도로 호남권과 같은 대북 우호인식을 형성해 가던 추이가 다시 분화되는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보수(62.1%)>중도(55.4%)>진보(48.4%)로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였다. 작년에는 중도(60.1%)가 보수(57.5%)를 압도하는 비판의식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보수의 대북 비판의식이 조금 높아지고 중도는 약간 낮아짐으로써 정치이념별 대북의식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통일의식에서는 2011년에 정치이념간 차이가 줄어든 반면, 대북인식에서는 이념적 차이가 더 확연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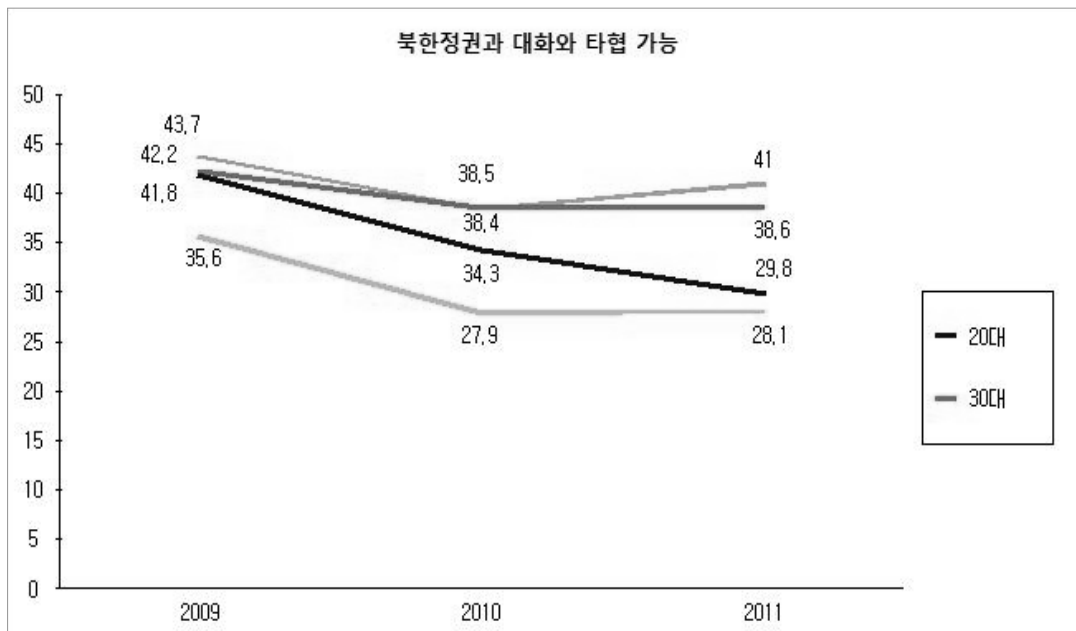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 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65.7%로 “가능하다”(34.3%)는 응답보다 2배가 많았으며 작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0년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이 그 이전 해(59.1%)에 비해 6%가 높아진 65.1%였으나, 2011년에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작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세대별 인식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 “가능하다”는 신뢰가 각각 38.6%, 41.0%로 높았으며, 20대와 50대는 각각 29.8%, 28.1%로 낮았다. 대북 신뢰도 인식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대상인식과 마찬가지로 30~40대와 20·50대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30~40대가 20·50대에 비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대북 신뢰도에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6>에서와 같이 20대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즉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의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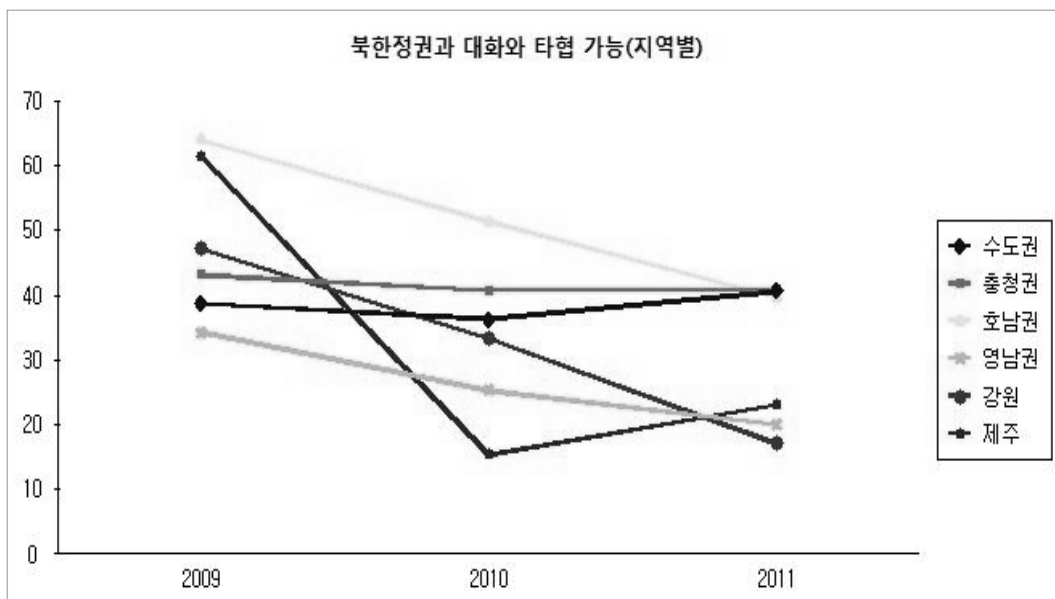
<그림 16>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지역적 차이와 정치성향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각각 40.6%, 41.0%, 39.7%로 비슷한데 비해 영남권은 20.0%로 매우 낮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이 세 지역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호남권의 경우에는 2010년에 51.3%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2011년에는 39.7%로 대폭 감소하였다. 호남권의 이러한 현상은 작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11월의 연평도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천안함 사건은 국내적으로 정치 쟁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반복되던 서해상의 충돌이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되었으나, 연평도 사건은 본토의 공격 가능성과 전쟁에 대한 우려를 가져다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대북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제적인 전쟁의 위협 상황 속에서 호남권의 대북 신뢰도가 매우 위축됨으로써 은둔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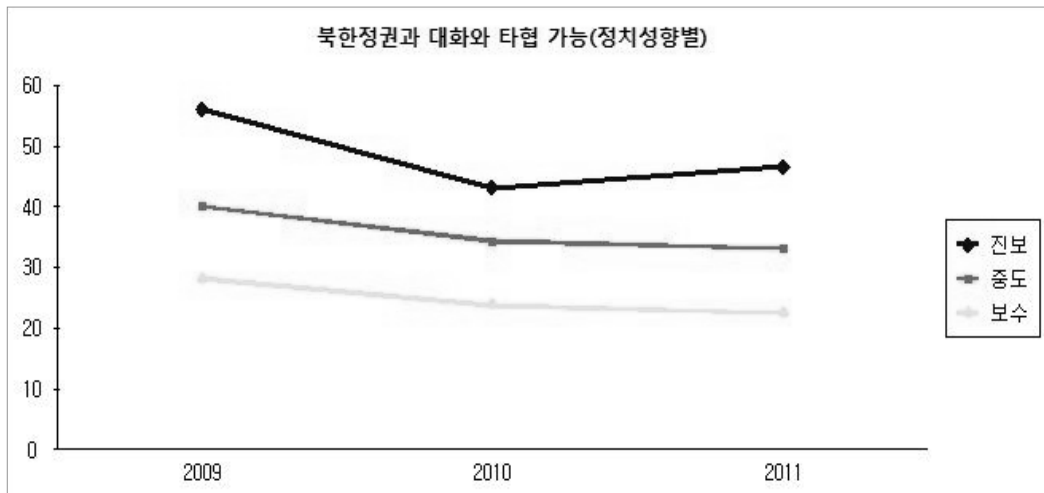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의 반응은 특이하다. 제주를 예외로 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2011년에 연평도 사건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북신뢰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정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의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희망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80%로 다른 지역에 비해 20%나 높은 대북불신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림 17>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정치적 이념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진보(46.6%)>중도(33.1%)보수(22.5%) 순으로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북한 인식이 진보-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진보의 대북신뢰도는 56.1%(09년)→43.1%(10년)→46.6(11년)으로 2010년에 13%라는 큰 폭으로 낮아진 이후 2011년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¹⁾ 이는 진보가 2010년에 느꼈던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으로부터 대화상대 내지 신뢰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8>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3.2%로 2009년(83.7%), 2010년(82.8%)과 거의 비슷하였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불신은 2008년의 71.7% 보다 11~12%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며, 이는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 11월의 연평도 사건 등이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

1)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으로 진보 33.1% 중도 45.2% 보수 21.7%로 보수의 위축, 진보의 확장으로 이념지형이 급격히 변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진보 27.9% 중도 48.1% 보수 24.0%로 2009년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2009년에는 진보 24.9% 중도 48.3% 보수 26.8%였다.

견은 세대별이나 정치적 성향, 종교 등 여러 변수에 차이가 없었다.

2011년의 특이한 점은 ‘연평도 효과’가 작년의 천안함 효과와는 매우 다른 차원에서 작용했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권(66.4%)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식이 다른 집단(영남권 86.5%, 중부권 88.1%, 수도권 82.7%, 강원 91.7%)보다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에는 수도권(80.9%), 충청권(91.0%), 호남권(83.6%), 영남권(83.6%)로 호남권의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사라졌다. 호남권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2009년에 5% 였던 것에 비하면 2010년에 호남권이 보인 경향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전개된 정부정책에 대한 일종의 불신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4. 북한위기의식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35.3%, “다소 위협을 느낀다” 45.4%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68.2%(07년)→61.3%(08년)→74.3%(09년)→73.8%(10년)→80.7%(11년)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의식이 금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세대, 교육,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이념, 종교, 성별 등의 변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충청권에서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70.9%로 수도권(84.0%)이나 영남권(81.0%), 호남권(77.6%)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념적으로는 보수가 89.3%로 중도(79.5%)나 진보(75.6%)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3.3%)이 남성(78.2%)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대답했다.

천안함 효과가 작용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2011년에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엄청난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작년에는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차이

가 없었으나, 금년에는 정치이념과 지역에서 분화가 진행되었고 성별에서도 남녀간에 작년의 10% 차이가 5%로 줄어들었다. 이는 이번 조사에 작용했던 연령도 효과가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위험이 한도를 넘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나 생각된다.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78.3%)는 응답이 “없다”(21.7%)는 응답보다 네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진행한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5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59.7%(07년)→52.2%(08년)→63.6%(09년)→67.3%(10년)→78.3%(11년)로 변화했다. 이는 2009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11.4%가 높아졌던 전쟁 불안감이 2011년에 다시 11%가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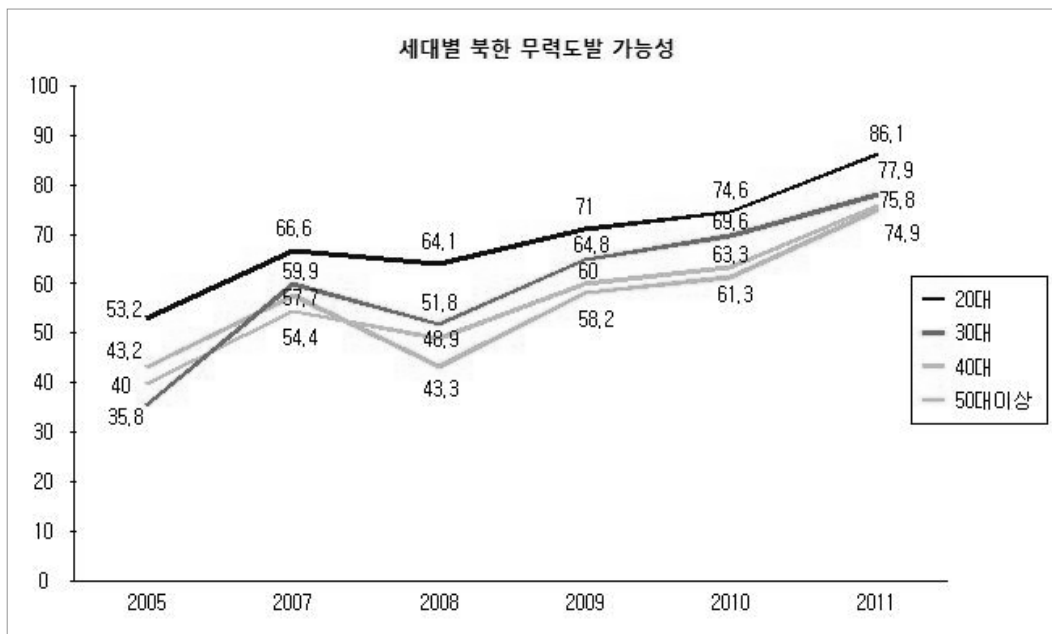
<그림 19>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연령별로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20대가 86.1%로 30대(77.9%), 40대(75.8%), 50대이상(74.9%)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나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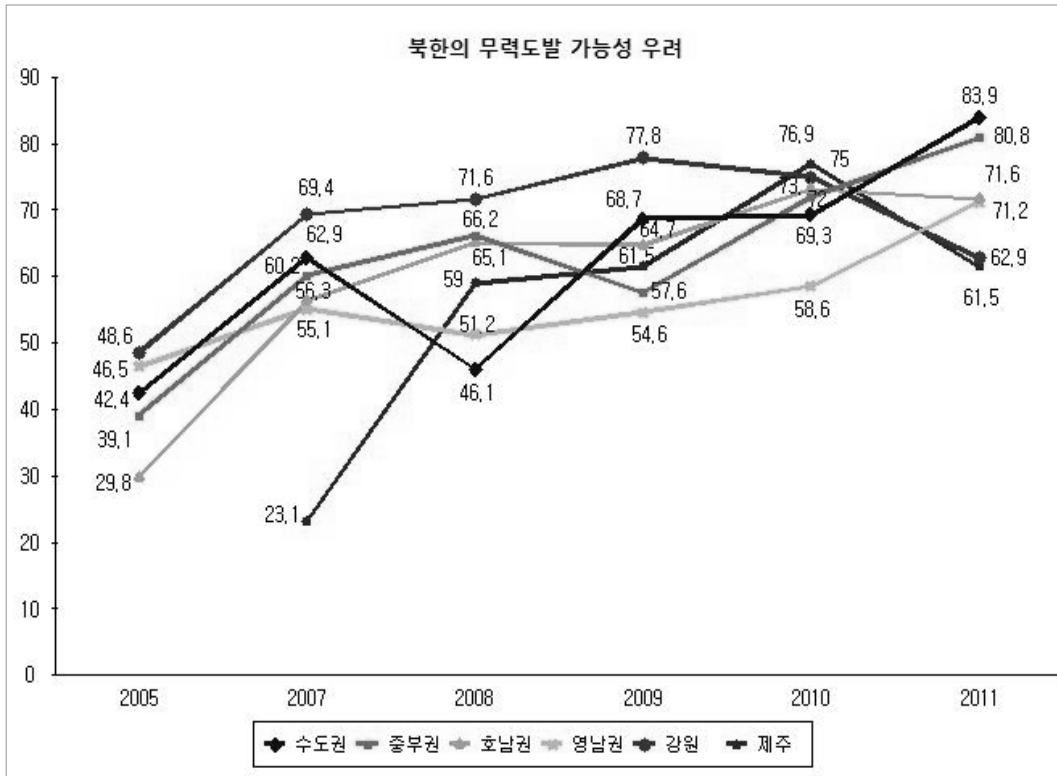
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까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1년에는 다른 연령층으로부터 20대가 갈라져 나왔다. 이는 20대의 젊은 세대는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아직 없거나 아니면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복무의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0>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지역별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수도권·충청권, 호남·영남권, 강원·제주권 등 세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수도권과 충청권은 각각 83.9%, 80.3%로 응답하여 호남권(71.6%)과 영남권(71.2%)에 비해 8~9%가 높고, 강원(62.9%)과 제주(61.5%)에 비해 20% 가량 높았다. 작년에는 영남권이 58.6%로 응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에는 영남권의 안보불안도 높아졌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안보불안심리가 크게 고조되었다. 호남권은 작년에 비해 올해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낮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수도권·충청·영남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 21> 지역별 북한의 두려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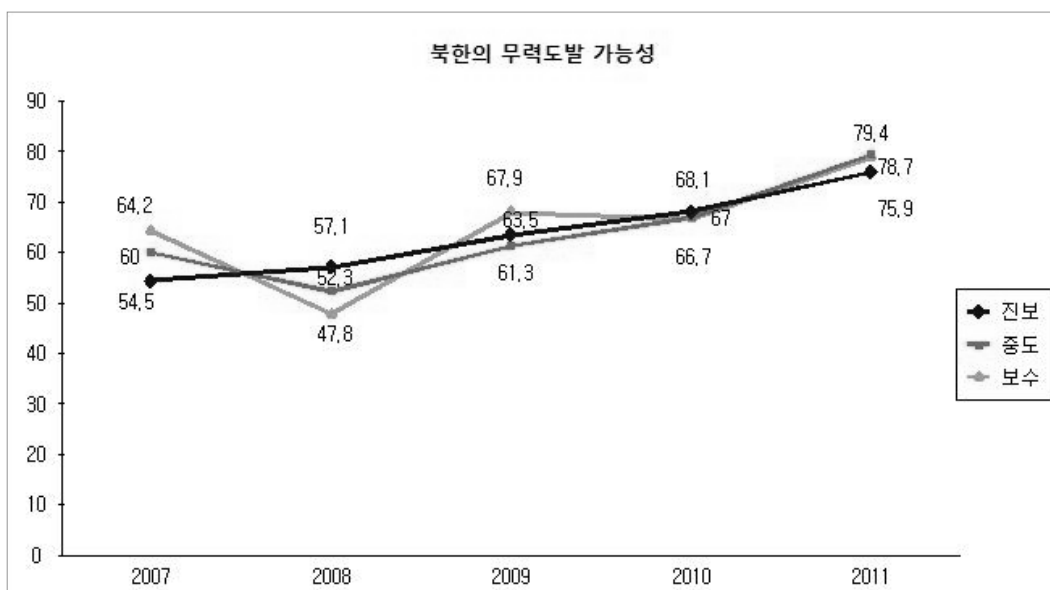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불안외식은 정권의 지지와 깊은 관련성을 맺으며 변화하고 있다. 2008년에는 수도권(46.1%)이 영남권(51.2%)과 함께 다른 지역(중부 66.2%, 호남 65.1%, 강원 71.6%)에 비해 안보불안외식이 매우 낮았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수도권의 안보불안외 46.1%→68.7%→83.9%로 급상승했고, 2010년 이후에는 중부권의 안보불안외 57.6%→72.0%→80.8%로 급상승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적극적 지지를 보냈던 수도권이 2009년에 이탈했고 2010년에는 중부권이 이탈함으로써 안보불안외 커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원인은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야기된 것이나, 수도권과 충청권의 안보불안 증대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

정치적 성향과 안보불안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두 지역의 높은 안보불안외심이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는 엇갈렸다. 대북정책 만족도는 충청권에서 18.4%로 호남권(24.1%)보다 낮은 반면, 수도권은 43.5%로 영남권(48.5%), 강원(42.9%)과 비슷하여 충청권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진보(75.9%), 중도(79.4%), 보수(78.7%)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안보불안이 크게 높아져 정치 이념간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는 정권교체 효과가 뚜렷하였다. 즉 2007년에는 보수(64.7%)가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으나, 2008년에는 반대로 진보(57.1%)가 보수(47.8%)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북한효과'가 압도하여 보수가 안보불안을 더 크게 느끼거나 보수-진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2011년에 그 폭이 크지는 않지만 이념성향에서 약간의 분화가 발생하였는데 2008년 이전의 이념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2>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IV. 맺음말

2011년 국민들의 통일의지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졌으나, 전쟁방지의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동시에 높아지는 양면적 경향성이 발전하였다. 연평도 사건 등의 군사적 충돌을 겪는 과정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여론이 상

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함께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인식도 작년까지의 부정적·비판적 인식의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북한과의 협력, 대화, 타협 가능성을 기대하는 의식도 성장하는 양면적 현상이 나타났다. 대북 비판의식과 불신이 답보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북한의 '협력대상' 인식이 2011년에 다시 높아졌으나, 다른 한편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의식이 동반상승하여 특이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대북인식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연평도 효과'가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연평도 사건은 위기의식과 불안심리가 고조됨과 동시에 이러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거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의식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천안함 사건은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며 안보불안을 고조시켰으나, 기존에 관성화되었던 해상의 충돌로 이해된 측면이 있고, 또 국내 정치쟁점으로 비화됨으로써 효과가 반감된 면이 있었다. 반면, 연평도 사건은 휴전 이후 발생한 첫 육지충돌이라는 점에서 본토로 확대될 경우에 당면할 피해와 안보불안을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했고 동시에 실용적으로 문제해결을 찾는 쪽으로 의식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통일의식 변화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대목은 북한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의식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불안의식은 59.7%(07년) → 52.2%(08년) → 63.6%(09년) → 67.3%(10년) → 78.3%(11년)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안보불안의식은 40~60% 사이를 왕래하였으며 60%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전쟁불안의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2009년의 핵실험에 이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극도의 불안심리가 지속될 경우, 그것이 대북 비판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조짐이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안정화하는 대북정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통일·대북 인식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이른바 '20대의 보수화'가 다시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이다. 20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외식은 진보가 35.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뚜렷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존재인식과 변화인식, 신뢰도, 위기의식 등 모든 영역에서 20대는 50대이상과 비슷한 외식을 보였다. 통일외식에서 20대의 이러한 보수화 경향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촛불시위 등의 사건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이어지면서 북한변수에 의해 압도당하는 이른바 북한효과가 다른 연령층보다 20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의 대북적대외식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북 비판외식과 보수외식을 주도하였다.

지역변수에서는 충청권이 통일외력으로 전면에 등장한 반면, 호남권의 대북 우호외식이 크게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충청권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에는 호남권을 앞질렀으며, 대북 비판외식에서도 호남권과 의견을 같이하였다. 수도권도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통일외식이 성장하여 충청권과 맥을 같이하였으나 2011년에는 그 상승기세가 꺾였다. 반면 호남권은 기존에 다른 지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나, 올해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은둔현상이 나타났다. 연평도 사건 등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남북관계의 환경이 호남권에는 소극적·수세적인 은둔 현상으로 나타난 반면, 충청권에는 통일외식과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적극적·공세적 방향으로 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1년의 통일·북한 인식은 연평도 효과가 발휘되어 지역적으로는 호남권에, 연령별로는 20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줌으로써 비판적 대북인식을 추동하였다. 전통적으로 대북우호외식을 견지했던 호남권의 외식을 잠재우고 다소 주춤하던 20대의 보수화 경향을 다시 강화했다는 점에서 연평도 효과는 천안함 효과를 넘어서는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충청권과 40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높은 이익 기대감을 갖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거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대북 우호외식 내지 신뢰외식이 생성됨으로써 새로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작년의 천안함 사건으로 진보-보수의 이념간 차이가 무력화되었으나, 2011년에는 진보-보수간 외식의 차이가 다시 분화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 아직 예년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형성된 것은 아니나, 2011년의 대북인식에서 이념적 분화가 재개되었다는 것은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의 주시해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발표 2 :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외인식 변화”

이상신 (HK연구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2011년 동북아 정세변화와 인식변화
2. 대외인식 가. 가장 가까운 주변국 나.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라. 주변국의 국가 이미지
3. 결론 : 통일의식의 변화와 안정

1. 2011년 동북아 정세변화와 인식변화

2007년 통일의식조사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남북한은 2010년의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무력충돌 수준으로까지 관계가 악화되었다. 한편,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으로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중국은 문자 그대로 육일승천의 기세로 미국과 맞먹는 양대 강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 초 일본은 2만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엄청난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 전에는 수상이 사임하는 등 전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한국의 경우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로 접어들면서 2012년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최근 통일부 장관의 교체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정도의 방향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들이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오년동안 축적된 통일의식조사를 십분 활용하여 그 변화와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구성은 우선 각 나라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을 미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논의하고 다음 한국인이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가로 느끼는 나라는 어디인지를 같은 순서로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서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핀 후, 마지막으로 각 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의 분포와 변화의 순서로 분석할 것이다.

2. 대외인식

가. 가장 가까운 주변국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해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주변 4강 국가와 북한에 느끼는 친밀도를 비교하고 있다. 응답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중 자신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하나의 나라를 골라 답하는데, <표 1>에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이 설문에 대한 응답 분포를 정리하였다.

<표 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미국	53.4	60.7	68.3	70.6	68.8	64.4
일본	11.6	9.5	8.7	9.6	9.1	9.7
북한	24.0	20.4	15.9	14.9	16.0	18.2
중국	10.2	7.8	6.1	4.2	5.3	6.7
러시아	0.9	1.7	1.0	0.8	0.8	1.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N = 5,990 (무응답 제외) $\chi^2 = 129.77$ $p < 0.01$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7년 이후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53%에서 60.3%로 증가하였고, 이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도 8%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작년인 2010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통일의식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고인 70.6%에 달하였다가 올해는 68.6% 약간 떨어졌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사실상 작년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2009년과 2011년 사이 15%와 16% 수준에서 거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2009년 5월의 제 2차 핵실험,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 관계가 이 기간 동안 거의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위험한 변화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한 국민의 비율은 15~16%로 일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비록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2007년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이어 북한은 한국 국민들이 두 번째로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 변화의 폭은 미국과 북한의 친밀도 변화에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편이다. 주어진 다섯 개 국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항의 구조 상, 미국과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폭은 애초에 그리 클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중국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인식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친밀

도 변화와 함께 위협도 증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 북한, 중국의 순으로 친밀도 변화를 이념, 연령 별로 분석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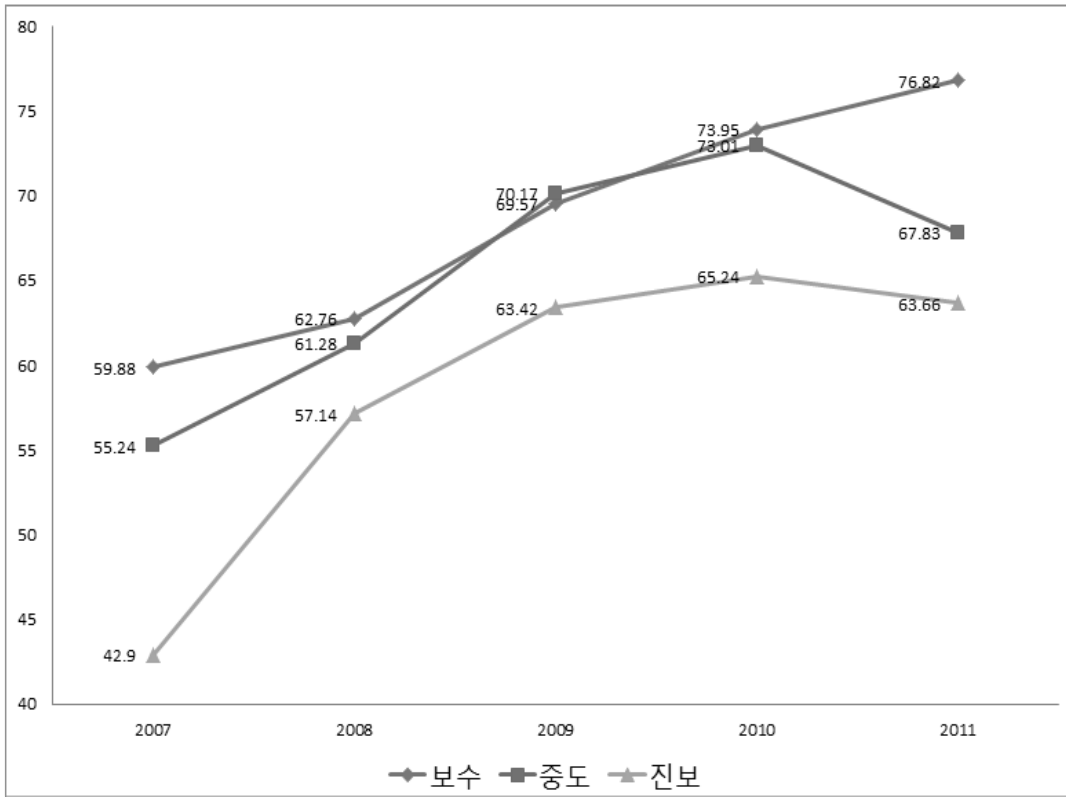
1) 미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2007년 53%에서 2010년 70.6%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17.6%, 2007년에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33.2%나 상승한 것이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의 미국 친밀도 상승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¹⁾. 특히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졌으며 당시 보수 언론에서는 반미 감정의 확산을 우려하기도 하였는데, 이 변화를 보면 촛불 시위가 반미 감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한다 (60.3% → 68.2%). 이는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한미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남북관계의 악화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이념별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정리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친밀도는 2010년 70.6%에서 2011년 68.6%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를 응답자의 이념별로 나누어서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1) 박명규 외. 2009.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p. 124.;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2009. "Confidence in Obama Lifts U.S. Image Around the World: Most Muslim Publics Not So Easily Moved." In *25-Nation Pew Global Attitudes Survey*. Pew Research Center.

<그림 1> 이념별 대미친밀도 변화 (2007~2011)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보수, 중도, 진보²⁾ 그룹이 모두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상승했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진보 그룹이었다. 보수 그룹이 59.9%에서 62.9%로 3% 남짓한 변화를 보인 반면 진보그룹은 14.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소수자 정치에 우호적인 진보 그룹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세 이념집단이 모두 비슷한 변화율을 보이며 미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갔다. 특히 이 기간 중도와 보수의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진보 역시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낮긴 하였으나 진보의 절대 다수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답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비로소 이념집단 간 변화의 양상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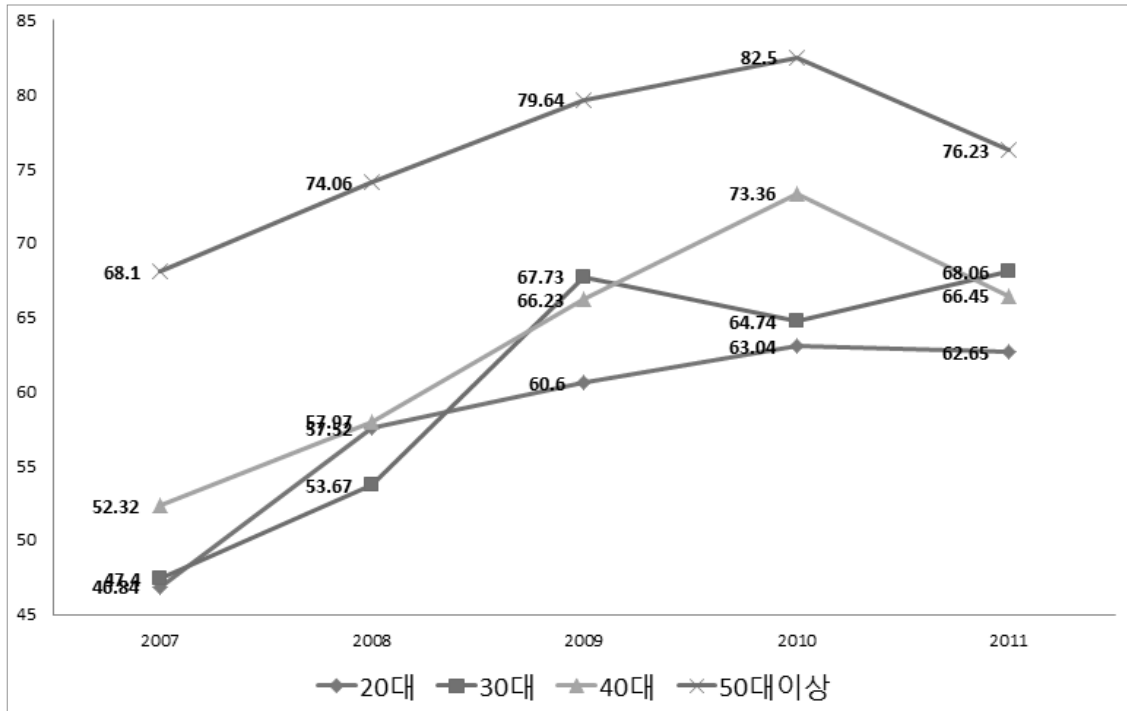
2) 통일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정치 이념성향은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이라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보수의 대미친밀도는 2008년 이후 거의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76.8%까지 치솟은 반면, 중도 그룹의 대미친밀도는 세 집단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0년 73%에서 2011년에는 67.8%를 기록하였다. 진보 집단의 대미친밀도 역시 65.2%에서 약간 떨어진 6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대미친밀도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1년에는 응답자의 이념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 특히 중도와 보수 집단간 대미친밀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중도와 보수의 시각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천안함 사건 발발 직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 정책이 보수층에게 친밀도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한 반면, 전쟁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중도와 진보 그룹에겐 그 반대 방향의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의 영향권 안에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이념집단별 대미친밀도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념집단간 대미친밀도의 차이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진보 그룹조차도 63.7%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이념을 가진 이들을 자동적으로 반미 의식을 가졌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보수와 중도, 그리고 진보 그룹 사이에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며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할 정도의 차이는 더더욱 아니다.

한편, 대미친밀도의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그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역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대미친밀도가 높은 연령집단은 50대 이상 노년층으로, 2010년에는 무려 82.5%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했다. 반면 나이가 젊을수록 대미친밀도가 낮은 경향이 뚜렷한데, 2011년 현재 대미친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은 20대이며 (62.7%) 그 다음은 40대 (66.5%)와 30대 (6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령별 대미친밀도 변화 (2007~2011)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대미친밀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집단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7년 이후 모든 집단의 대미친밀도가 상당 폭으로 상승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하락 현상은 특히 50대 이상 집단(82.5% → 76.2%)과 40대 집단(73.4% → 66.5%)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반면 이 시기 20대의 대미 친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이었다.

한편, 30대는 유일하게 대미친밀도가 작년에 비해 상승한 연령층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볼 때 30대는 미국에 대해 가장 친밀도가 떨어지는 집단이었는데(47.4%), 2009년 30대의 대미친밀도는 67.7%로 오히려 20대와 40대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이 모두 상승한 2010년에 30대는 약간 하락한 64.7%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 반대로 유일하게 대미친밀도가 상승하여 68.1%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1년 사이를 보면 30대의 대미친밀도는 전반적으로 65%에서 68% 사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대도 마찬가지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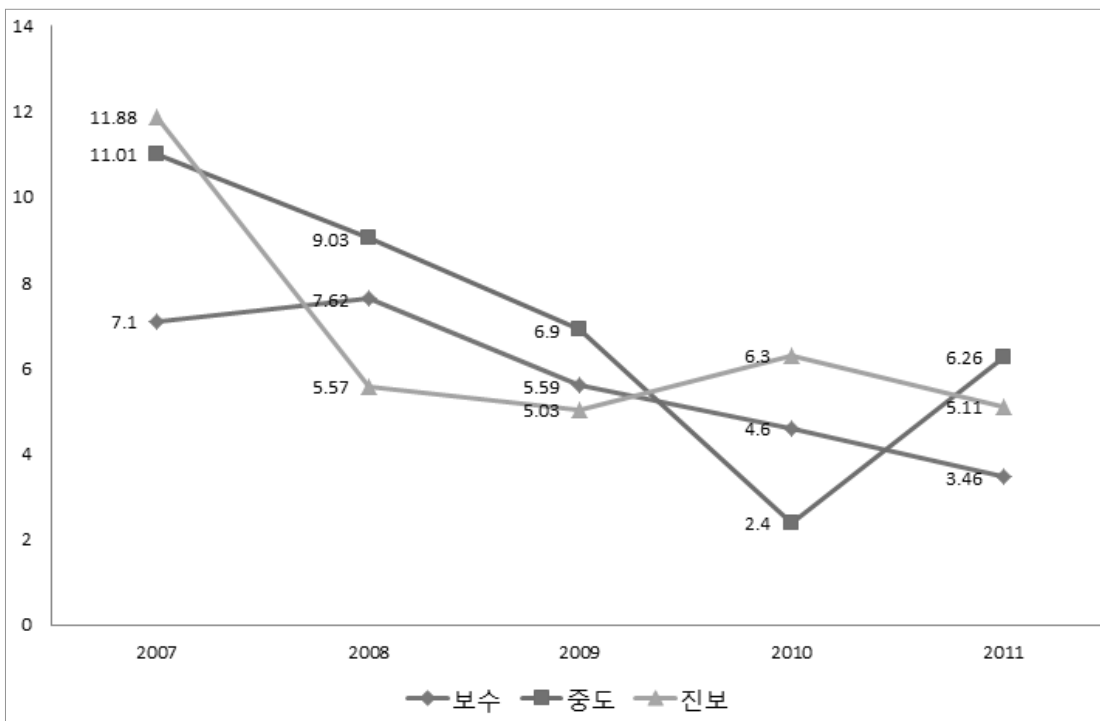
결국 대미친밀도와 연령층의 교차분석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2009년까지 대미친밀도는 전 연령층에서 상승하였지만 2009년 이후 20대와 30대의 대미 친밀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2009년에서 2010년에는

상당 폭의 상승을, 반대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의 기간에는 상당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

설문이 주변 5개 국가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 응답자 이념별로 친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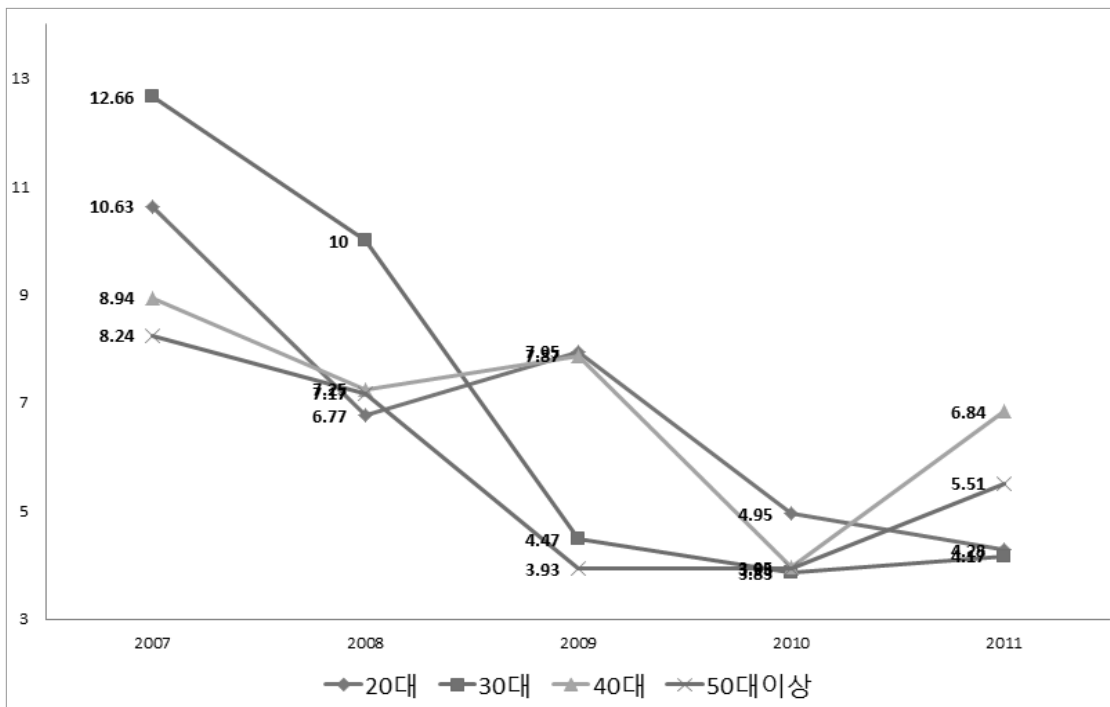
<그림 3> 이념별 대중친밀도 변화 (2007~2011)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대중친밀도는 진보, 중도, 보수 세 그룹 모두에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가장 높은 대중친밀도를 보였던 집단은 진보그룹이었고 (11.9%), 그 다음은 중도 (11%), 보수 (7.1%)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순위는 2008년 바뀌어 진보의 대중친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5.6%), 이는 이 시기 대중친밀도가 낮아질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미국에 대한 진보의 친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대중친밀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에서 2011년 사이를 보면 진보와 보수의 대중친밀도는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아 안정된 양상을 보이는데, 중도 집단의 대중친밀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중도의 대중친밀도는 2009년에 6.9%에서 2010년에는 2.4%로 떨어졌다가, 2011년에는 6.3로 회복되었다. 이는 아마도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대중친밀도의 변화가 중도 그룹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되며, 그러나 2011년에는 이 하락했던 대중친밀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연령별 대중친밀도 변화 (2007~2011)



위의 <그림 4>는 연령집단별로 대중친밀도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집단에서 대중 친밀도는 2007년 이래 상당히 하락하였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은 30대로, 이들은 2007년 당시 가장 중국에 친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12.7%), 2011년에 오면 모든 연령 집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대중친밀도를 보이고 있다 (4.2%). 반면 중국에 대해 친밀도가 가장 낮았던 50대 이상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폭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2009년 이후 20대와 30대, 그리고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대중친밀감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40대의 대중친밀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하락하였다가 (7.9% → 4%), 다음 기간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4% → 6.8%). 이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경험을 가진 40대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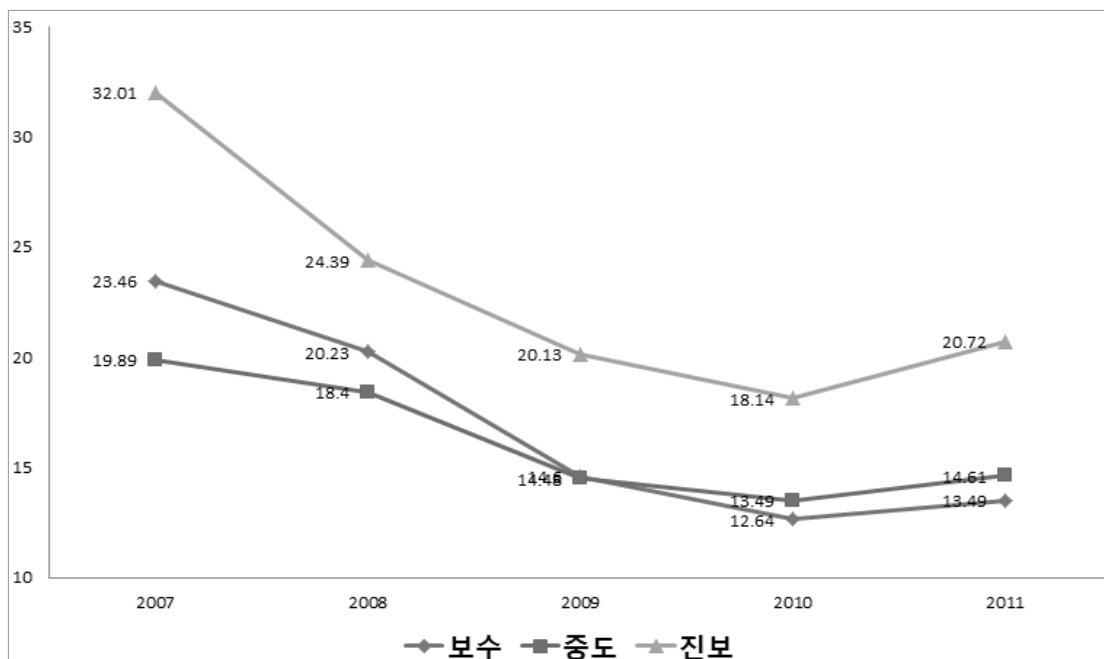
3) 북한

북한에 대한 친밀도 변화는 대미친밀도 변화와 역의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즉, 대미친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대북친밀도는 반대로 23.8% (2007년)에서 15.9%(2009년)로 크게 하락했다(〈표 1〉 참조). 그 후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대미친밀도가 큰 변화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친밀도 역시 2010년 14.8%, 2011년 16%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그래프는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를 응답자 이념성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2007년 대북친밀도의 이념별 분포는 예상과 달리 진보가 가장 높고 (32%) 그 다음이 보수성향 응답자였다 (23.5%). 그리고 중도의 대북친밀도는 보수집단보다 낮은 19.9%에 그쳤다. 이렇게 대북친밀도에 있어 보수가 중도를 앞서는 현상은 2008년에도 지속되어서 보수의 친밀도는 20.2%인 반면 중도는 이보다 약간 낮은 18.4%를 기록했다.

이렇게 2008년 이전 보수의 대북친밀도가 중도를 앞서는 현상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민족주의적 성향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지금까지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진보와 중도, 보수 사이에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이 대북친밀도의 분포가 그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이념별 대북친밀도 변화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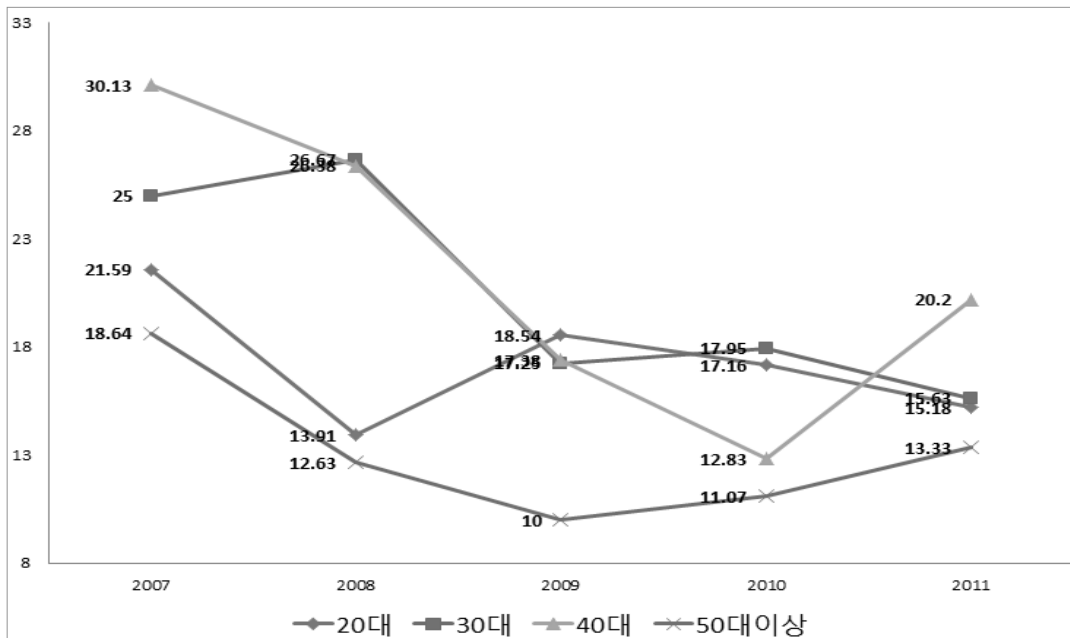


그러나 중도와 보수집단의 대북친밀도는 2009년에 오면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2011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이 두 집단에 비교했을 때 진보집단의 대북친밀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중도이념 집단은 대북친밀감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수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진보집단은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보다는 상당히 대북친밀감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다른 이념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친밀감의 하락현상과 이념집단 간 차이 역시 과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의 구조상 대북친밀감은 다른 나라 (미국 혹은 중국)의 친밀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국가 순위로 보면 북한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북친밀감에 있어 진보와 보수의 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³⁾는 가장 컸던 2007년에도 8.6%였고 가장 낮았던 2008년에는 4.2%였을 뿐이다. 즉, 북한을 보는 시각에 있어 진보와 보수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⁴⁾.

<그림 6> 연령별 대북친밀도 변화 (2007~2011)



3) 진보집단 대북친밀감 - 보수집단 대북친밀감

4)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9%, 보수는 24.2%, 중도는 48%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총 응답자 6,015명 중에서 진보는 27%, 보수는 25.6%, 중도는 47.4%로 조사되었다 (무응답 2명 제외).

〈그림 6〉의 그래프는 연령집단별 대북친밀도를 정리한 것이다. 2007년 이후 40대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대북친밀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발견된다. 2007년의 경우 가장 높은 40대의 대북친밀도는 30.1%에 달했으며 다음이 30대로 25%, 20대가 21.6%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18.6%였다. 그 이후 세대별로 각기 다른 부침을 겪었으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대북친밀도는 13.3%에서 15.6% 사이에서 거의 비슷하게 평준화되고 있다.

40대의 대북친밀도 변화는 다른 연령층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데, 천안함 사건후 조사되었던 작년에 40대의 대북친밀도는 12.8%로 20대(17.2%)와 30대 (18%) 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 20대와 30대가 15% 선으로 약간 하락한 반면 40대는 오히려 7.3% 이상 상승한 20.2%의 대북친밀도를 보여서 천안함 이전인 2009년 수준 (17.4%) 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80년대의 대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40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에 40대의 대북친밀감이 낮았던 것은 이들이 정치적 관심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작년의 천안함 사건에 20대와 30대보다도 40대가 예민한 반응을 보여 대북친밀감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에 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상황이 2010년과 사뭇 달라진 것에 영향을 받아 40대의 대북친밀감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대북친밀도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로 과대해석되는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북친밀도가 가장 높은 집단인 40대와 가장 낮은 집단인 50대 이상을 비교해보면 분명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북친밀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역시 가장 컸던 2007년에도 11.5% (40대 30.1%, 50대 이상 18.6%)였고 가장 작았던 2010년에는 불과 1.7% (40대 12.8%, 50대 이상 11.1%) 였다. 그 차이가 약간 늘어난 2011년에도 40대와 50대 이상 집단의 대북친밀도 차이는 6.9%에 불과하다 (40대 20.2%, 50대 이상 13.3%). 따라서 연령집단별 대북친밀도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할 뿐 집단 간에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변화를 지적하면 20대 집단에서 2011년 대북친밀도 (15.1%)가 대일친밀도(16.7%)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일본이 북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연령층에서는 지난 5년간의 조사 중에서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현상이다. 20대에서만 이 현상이 두 번째 발생하였는데, 2008년에도 비슷하게 대일친밀감이 대북친밀감을 앞섰던 적이 있다.⁵⁾ 이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20대가 민족주의적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일본 문화를 어렸을 적부터 접하고 자라온 세대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국가별 친밀도와 더불어 주변국 인식의 중요 지표로 통일의식조사에서 측정되는 항목은 주변국에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이다. 친밀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후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를 나열하였을 때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2011년의 조사에서 드러난 위협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에서 느끼는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표 2>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2007~2011)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미국	21.1	16.0	12.5	8.3	8.6	13.3
일본	25.9	34.5	17.7	10.4	11.6	20.0
북한	36.1	33.7	52.9	55.6	46.0	44.8
중국	15.6	14.6	15.9	24.6	33.6	20.8
러시아	1.3	1.2	1.1	1.2	0.3	1.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N = 6,001 (무응답 제외) $\chi^2 = 617.03$ $p < 0.01$

국가별 친밀도 분석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느끼는 위협도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며 반면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도는 2010년까지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대북

5) 20대의 2008년 대일친밀감은 18.2%, 대북친밀감은 13.8%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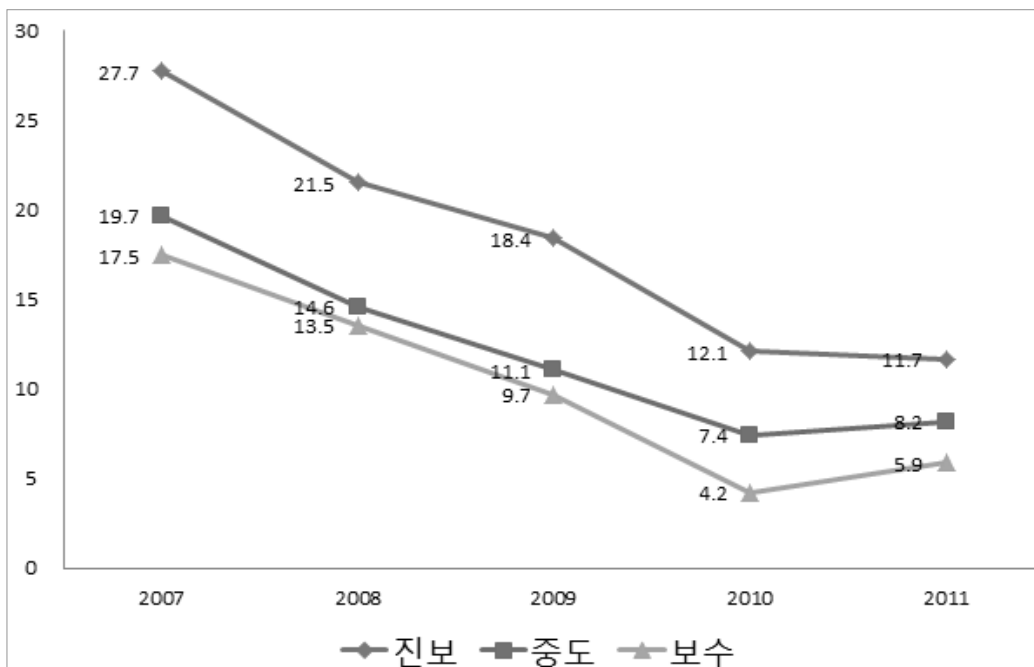
위협도가 오히려 낮아진 것은 중국을 가장 한반도에 위협적인 국가로 꼽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의 위협도는 독도 문제로 외교적 분쟁이 일었던 2008년에 34.5%를 기록, 오히려 북한의 33.7%를 넘었다. 이는 2008년 통일의식조사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⁶⁾ 이후인 8월 21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다. 2009년까지도 일본은 북한에 이어 두 번째로 한반도에 위협적인 국가로 꼽혔으나, 2010년부터는 중국을 위협적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국가별 위협도의 분포를 이념 및 연령별로 분석할 것이다.

1) 미국

응답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자신의 이념형별로 미국을 가장 한반도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뽑은 비율을 아래 그래프에서 비교해 보았다. 대미위협도에서는 이념별 차이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보집단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는 반면, 그 뒤를 중도와 보수가 잇고 있다.

<그림 7> 이념별 대미위협도 변화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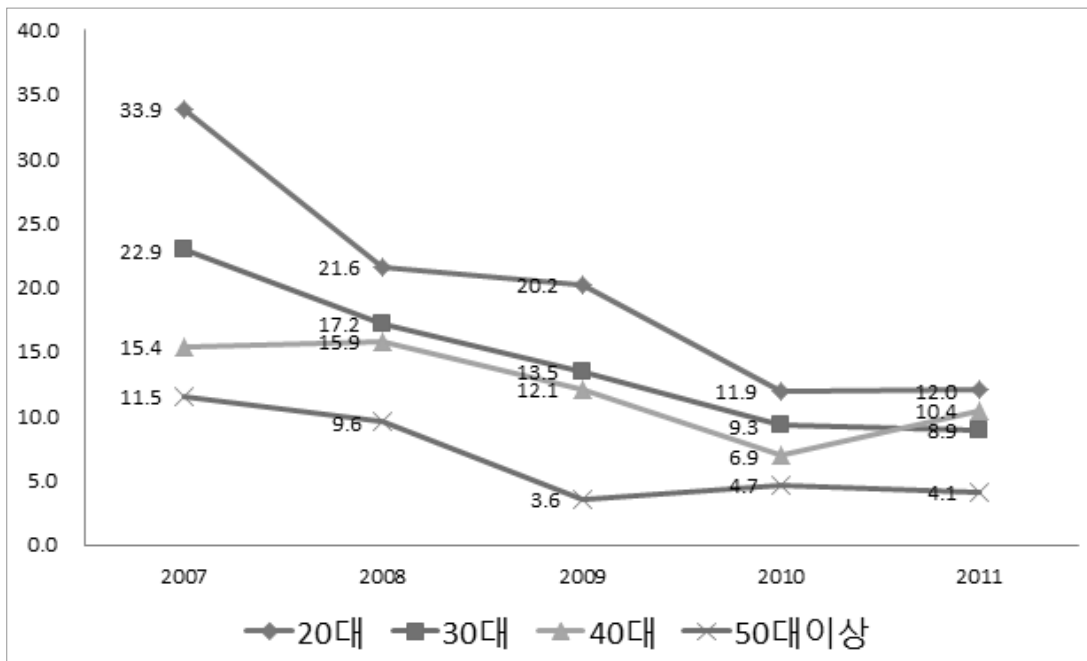


6)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남한 주민 박왕자 씨가 북측 경계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

그러나 보수라고 해서 대미위협도가 낮은 것만은 아니다. 2007년의 경우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17.5%가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이념집단 별 대미위협도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07년 진보와 보수의 대미위협도 차이는 10.2% (진보 27.7% - 보수 17.5%) 였던 반면, 이후 이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1년에는 그 차이가 5.8% (진보 11.7% - 5.9%)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세 이념집단 모두 지난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감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2007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던 대미위협도는 작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11년에는 201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미위협도의 감소 추세는 앞절에서 살펴본 대미친밀도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호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연령별 대미위협도 변화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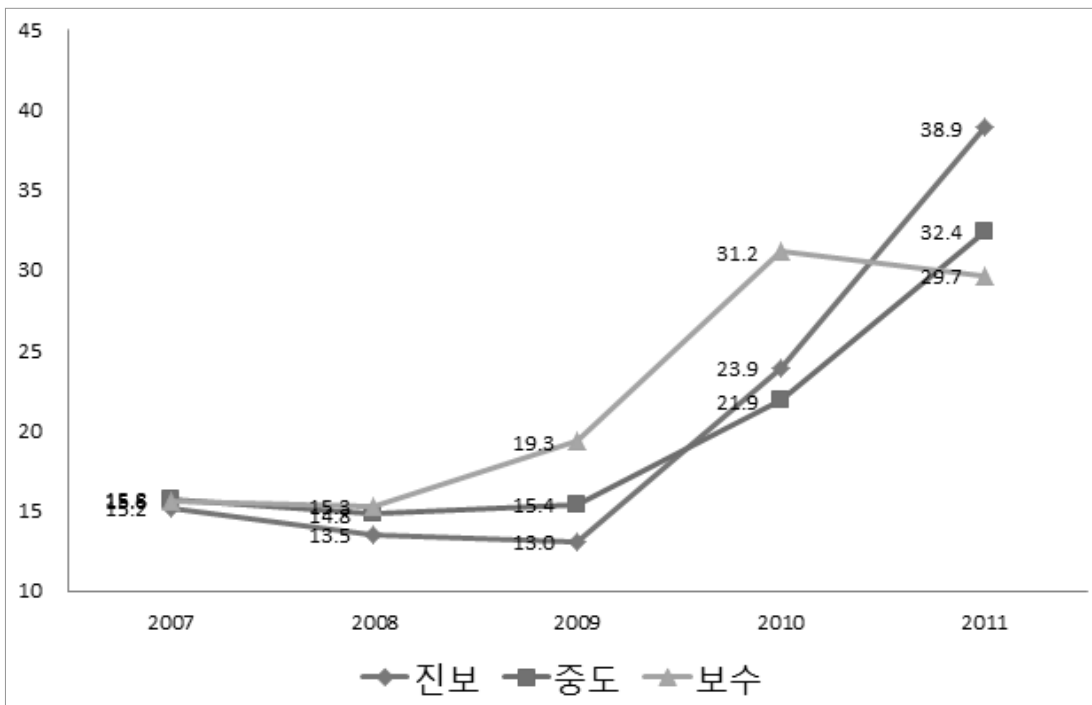
위 <그림 8>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연령대 별 대미위협도 변화 추이도 이념별 대미위협도 변화 추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2007년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미위협도는 응답자의 나이에 역비례하고 있다. 즉, 나이가 젊을수록 미국을 위협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노년층에서는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지난 5년간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7년 20대와 50대 이상층에서 대미위협도의 차이는 22.4%에 달했다(20대 33.9% - 50대 이상 11.5%). 반면 이 두 연령집단간 차이는 2010년 7.3%(20대 11.9 - 50대 이상 4.7%)로 가장 낮았고, 2011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8% (20대 12% - 50대 이상 4.1%)를 유지했다. 즉, 대미위협도에서 연령집단별 차이는 아직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대미위협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중국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5년동안의 주변국 위협도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을 가져오는 나라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9> 이념별 대중위협도 변화 (2007~2011)



<그림 9>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7년 통일외식조사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 진보, 중도, 보수 이념집단이 느끼는 대중위협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진보 15.2%, 중도 15.8%, 보수 15.6%).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과 더불어 남북관계 악화가 시작되면서 이념집단별 대중위협도에도 현격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2009년에는 보

수의 대중위협도는 19.3%, 진보는 13%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는 진보의 대중위협도마저 급상승하여 23.9%에 달했고, 보수층의 대중위협도는 31.2% 까지 치솟았다. 흥미로운 것은 2011년에 오면 진보와 보수의 대중위협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진보의 대중위협도는 2010년보다 무려 15%가 증가한 38.9% 달했는데, 이는 진보의 대북위협도인 37.1%를 뛰어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진보층은 중국을 북한보다도 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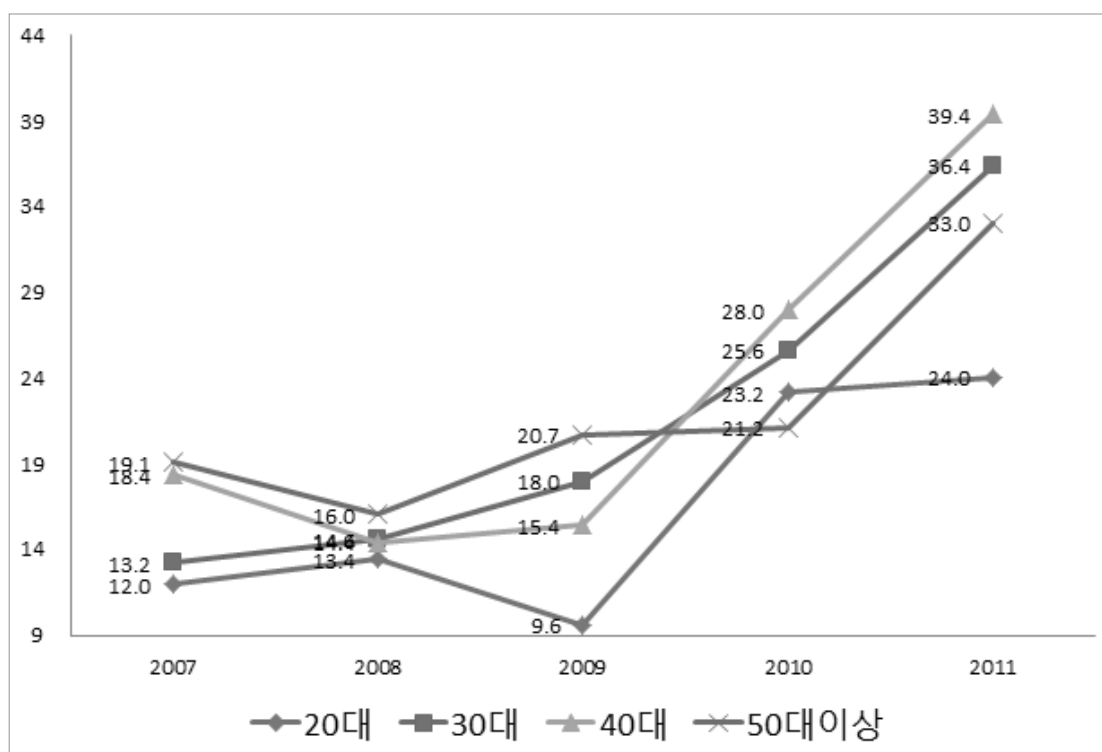
진보층 뿐 아니라 2011년 응답자의 48%를 차지하는 중도층의 대중위협도 또한 작년의 21.9%에서 대폭 상승한 32.4%를 기록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보수층이 느끼는 대중위협도는 작년보다 약간 낮은 29.7%에 그쳐, 2011년 조사에서는 대중위협도를 가장 많이 느끼는 이념집단의 순서가 진보 > 중도 > 보수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위협도의 이념집단간 역전현상은 진보와 보수가 한반도의 정치를 이해하는 인식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7년 이후 보수층의 대중위협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는 여전히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을 북한으로 보고 있으며 보수의 대중위협도 상승은 대북위협도 상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대중 위협도가 상승한 만큼 대북위협도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2010년과 2011년 사이 보수의 대중위협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북위협도의 정체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경우를 보면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한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 4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문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진보 또한 보수와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는 북한을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지목했고, 대북위협도에서 보수와 진보에 큰 차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2011년에 진보의 대북위협도와 대중위협도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면서 중국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해보면 이들이 단지 이념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인식의 프레임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연령별 대중위협도 변화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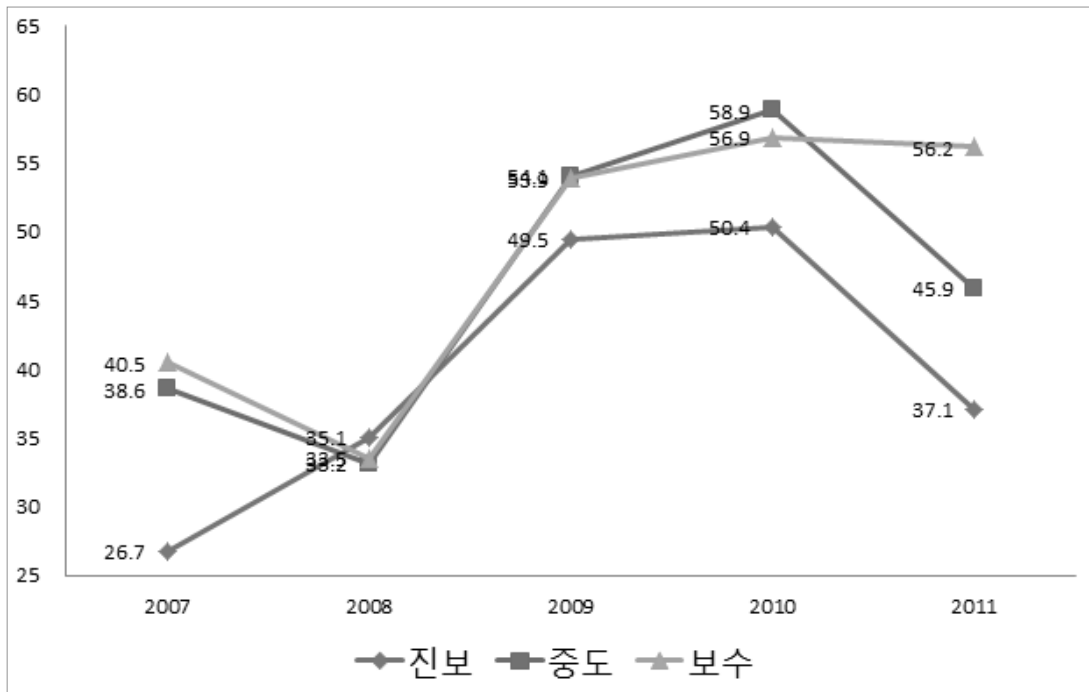
한편, 연령별 대중위협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된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대중위협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80년대 대학 경험을 가진 40대의 대중위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와 50대의 대중위협도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20대의 대중위협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이다. 40대의 대중위협도는 거의 40%에 가깝고 30대와 50대도 30%대 중반의 위협도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대의 대중위협도는 2010년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24%에 그쳤다. 이는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주의의 영향을 덜 받는 국제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3) 북한

앞에서 대북친밀도를 이념집단별로 분석해보았을 때, 집단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나 그 차이가 그리 큰 편은 아니란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북위협도를 이념집단별로 분석해보면 다른 면이 드러난다.

아래 <그림 11>에서 대북위협도를 이념집단별로 분류하고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2007년에 중도와 보수의 대북위협도는 각각 38.6%와 40.5%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진보의 대북위협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26.7%였다. 대신 2007년도 조사에서 진보집단은 미국의 위협도를 27.7%, 일본의 위협도를 28.7%, 그리고 중국의 위협도를 15.2%로 기록하여 한반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을 북한 하나로 한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1> 이념별 대북위협도 변화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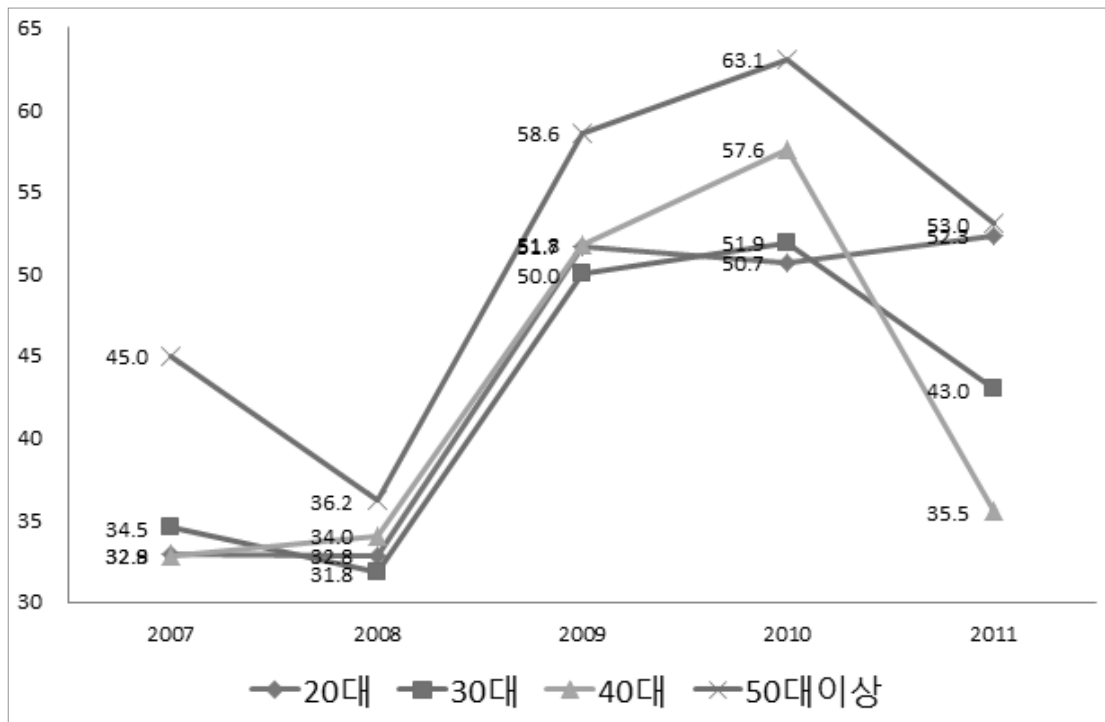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필두로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악화에는 진보집단의 대북위협도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사이 진보집단의 대북위협도는 최고 50.4% (2010년)로 치솟았으며, 이는 보수나 중도의 대북위협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는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었다.

그런데 2011년 조사는 이념집단들이 느끼는 대북위협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중도의 대북위협도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었다. 특히 진보보다 중도의 변화가 주목할 만 한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중도와 보수의 대북위협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2010년에는 중도의 대북위협도가 오히려 살짝 높기도 했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처음으로 중도와 보수 사이에서 북한

에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의 약화 등의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북한 문제를 남북 간에 벌어지는 한반도 내부의 일이라기 보다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중도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대북위협도는 이제 진보집단과 중도집단에 한정해서라면 대중위협도와 약한 수준에서 역비례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림 12> 연령별 대북위협도 변화 (2007~2011)



연령별로 본 대북위협도는 지난 5년간 몇 가지의 변화를 겪었다. 우선 2007년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세대의 대북위협도가 다른 연령층의 대북위협도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그 이하 연령층은 비슷한 수준의 대북위협도를 보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와 함께 연령별 대북위협도의 차이는 상당히 완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08년과 2009년에 대북위협도가 가장 낮은 30대와 가장 높은 50대 이상의 차이는 각각 4.4%와 8.6%였다. 그러나 2010년 조사에서는 이 세대별 대북위협도 차이가 다시 커지는데, 가장 낮은 20대와 50대 의 차이는 12.4%에 달했다.

2011년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연령대별 대북위협도의 특징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매우 큰 폭으로 대북위협도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50대 이상층조차 2010년에 비해 10.1%의 하락을 기록했고, 40대에서는 그 폭이 무려 22.1%에 달했다. 오로지 20대에서만 2010년 50.7%에서 2011년 52.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위협도의 하락은 앞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문제 개입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중도 및 진보적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북한보다도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20대의 대북위협도가 2009년 이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탈정치화 혹은 정치무관심에 기인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통일외식조사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부터 새로운 문항을 신설하여 조사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보기로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제시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아래 <표 3>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우선 북한의 경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크다는 반응이 지난 3년간 8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조금 크다”라는 반응보다 “이주 크다”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반면 별로 크지 않다거나 거의 없다는 응답은 2% 미만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이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크다는 반응도 결코 적은 편은 아니어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53.4%와 54.2%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이보다 약간 줄어든 47.7% 였다. 흥미로운 것은 남북관계의 당사자인 한국보다도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반응이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책임 정도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남북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정도 (2009~2011)

국가	조사 연도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합계
북한	2009	57.9%	30.3%	88.1%	10.1%	1.4%	.3%	1.7%	100.0%
	2010	62.6%	27.0%	89.6%	9.0%	1.1%	.3%	1.4%	100.0%
	2011	63.1%	25.7%	88.8%	10.3%	.6%	.2%	.7%	100.0%
한국	2009	13.9%	39.5%	53.4%	30.7%	13.7%	2.2%	16.0%	100.0%
	2010	14.3%	39.8%	54.2%	32.5%	10.0%	3.3%	13.3%	100.0%
	2011	10.4%	37.3%	47.7%	34.7%	13.7%	3.9%	17.6%	100.0%
미국	2009	18.4%	43.0%	61.3%	28.8%	7.8%	2.0%	9.8%	100.0%
	2010	15.8%	40.7%	56.5%	34.4%	7.8%	1.3%	9.1%	100.0%
	2011	13.9%	35.7%	49.6%	36.7%	11.0%	2.7%	13.7%	100.0%
중국	2009	13.1%	34.3%	47.4%	40.6%	10.1%	1.8%	12.0%	100.0%
	2010	20.8%	38.6%	59.4%	32.4%	6.7%	1.5%	8.2%	100.0%
	2011	26.5%	39.1%	65.5%	27.5%	6.1%	.9%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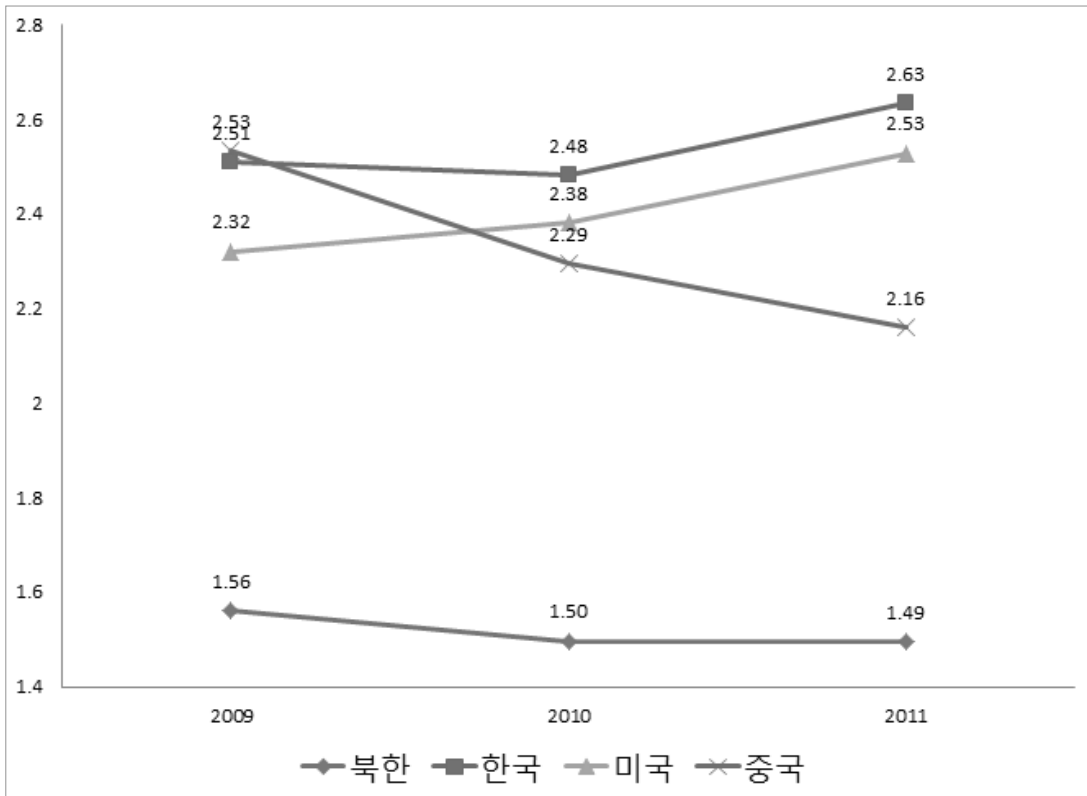
역시 이 설문 분석에 있어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대한 반응이다. 중국이 남북 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은 2009년 이래 47.4%에서 59.4%, 그리고 다시 65.5%로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가장 책임이 큰 국가는 북한이지만, 중국이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그림 13>의 그래프에서는 위에서 측정한 각국의 책임정도를 평균값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⁷⁾ 여기서 평균값이 작을수록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책임 정도는 1.56

7) "아주 크다" = 1, "조금 크다" = 2, "중간" = 3, "별로 크지 않다" = 4, "거의 없다" = 5로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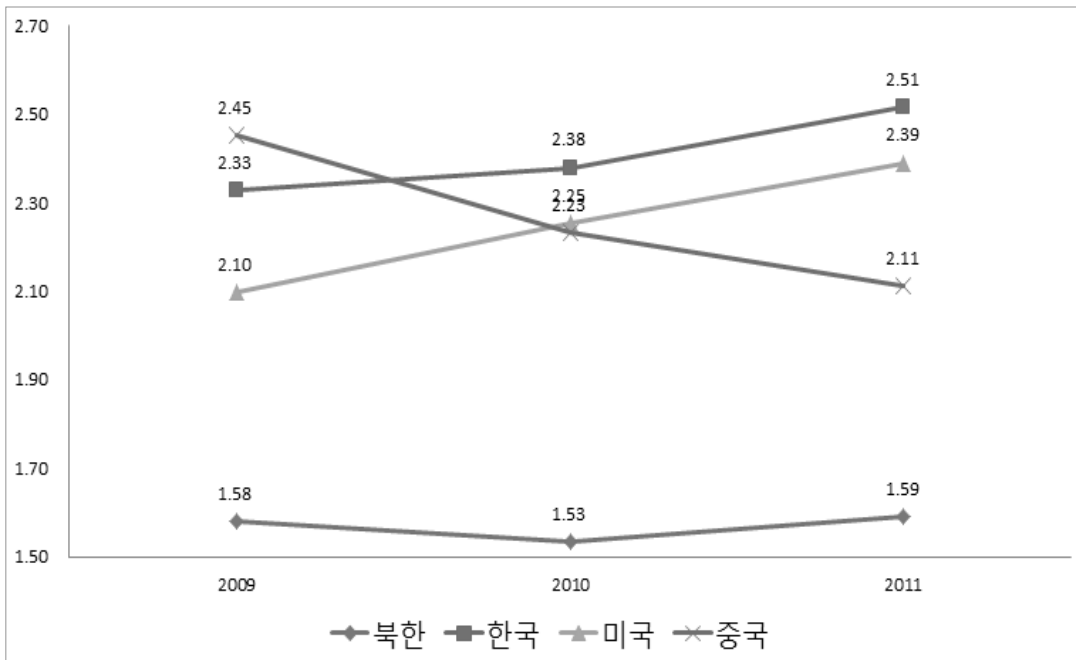
으로 다른 세 나라를 압도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2.51과 2.53을 기록했으며, 미국은 이것보다 약간 책임이 큰 2.32였다 ($p < 0.01$).

<그림 13>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비교(2009~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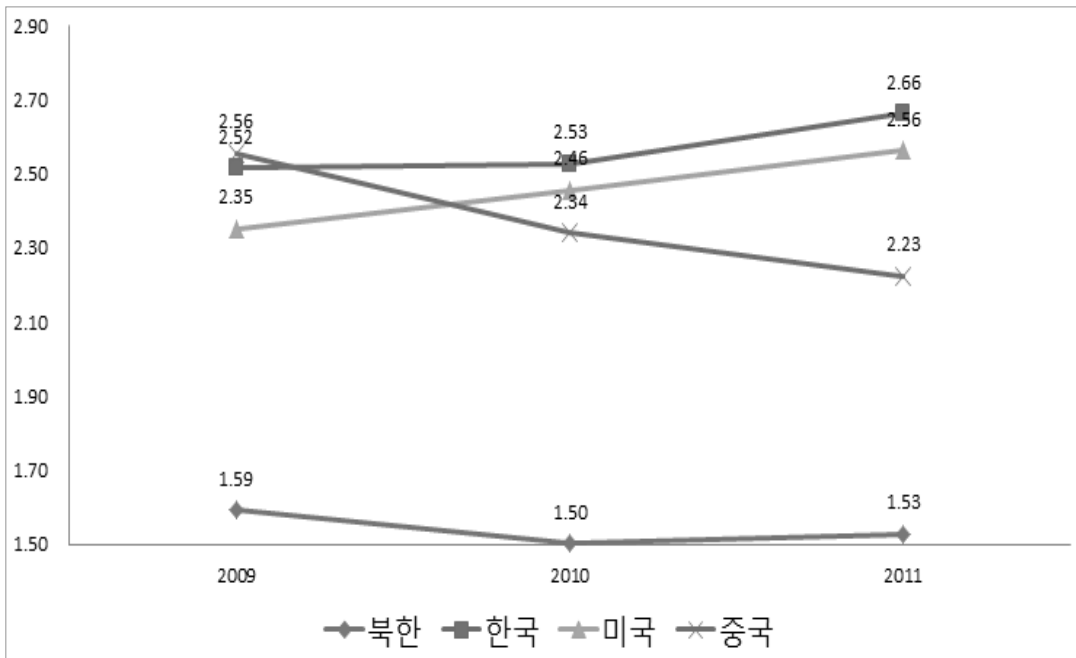


위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완만하게 책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북한은 또한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데, 2009년 중국의 책임도는 2.53이었으나 2010년에는 2.29, 2011년에는 2.16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각국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좀더 세분화해 보기 위해, 아래 그래프들에서는 이념별로 책임도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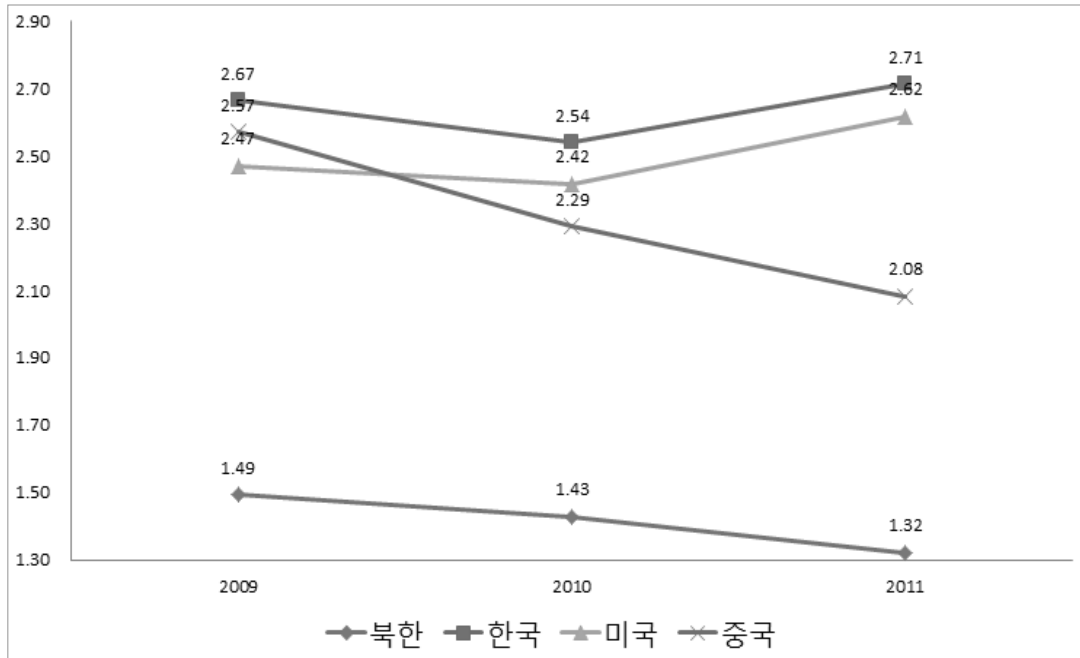
<그림 14> 진보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그림 15> 중도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그림 16> 보수집단이 보는 각국의 남북관계 악화 책임정도 (2009~2011)



우선 진보, 중도, 보수가 보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은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변화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세 집단 모두 2010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서의 중국에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집단이 북한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이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져 한국, 미국, 북한의 책임정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데 반해 중국의 책임은 급한 경사를 보이며 낮아지고 있다.

라. 주변국의 국가 이미지

북한을 포함 주변국에 대해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해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국가 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 (organized, structured) 인지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 스키마 (schema)를 국제정치에서 응용하여 쓰이는 개념이다. 이 국가 이미지를 통해 개인들은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이미지를 통해 정당화시킴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주변 4대국에 대해서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의 네 가지 이미지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대상”이라는 한 가지 이미지를 추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국가 이미지를 분석해보겠다.

1) 미국

아래 <표 4>에서 보듯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을 협력대상, 즉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미친밀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2008년을 기점으로, 협력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 또한 상승하였다.

<표 4> 미국의 국가 이미지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Total
조사연도	2007	53.1%	21.9%	21.9%	2.9%	100.0%
	2008	70.2%	13.0%	14.8%	2.0%	100.0%
	2009	73.6%	13.7%	11.7%	.9%	100.0%
	2010	76.4%	14.6%	8.2%	.8%	100.0%
	2011	75.0%	14.2%	9.7%	1.1%	100.0%
Total		69.7%	15.5%	13.3%	1.5%	100.0%

* 모름/무응답 제외

2007년 53.1% 였던 협력대상 이미지가 2008년에 70.2%로 상승한 이후, 계속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70%에서 75% 정도로 측정되고 있다. 2007년 이후의 미국의 국가이미지는 위 표에서 보다시피 4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스키마로서의 국가이미지는 한번 안정되면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당시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던 경쟁대상 혹은 경계대상으로서의 미국 이미지는 이후 4년 동안 10%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에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엄청난 규모의 촛불시위가 발생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 촛불시위가 최소한 미국의 국가이미지 변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된 협력자 혹은 동맹자로서의 미국의 국가 이미지는 한미관계의 또 다른 변곡점을 맞지 않는 한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5>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한국을 도울 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Total
조사연도	2007	50.6%	1.3%	45.5%	2.6%	100.0%
	2008	57.4%	1.4%	37.4%	3.8%	100.0%
	2009	65.1%	.7%	32.3%	2.0%	100.0%
	2010	74.7%	.7%	23.0%	1.7%	100.0%
	2011	72.4%	1.6%	24.1%	1.9%	100.0%
Total		64.0%	1.1%	32.5%	2.4%	100.0%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또 다른 설문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주변 4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2007년부터 측정되고 있다. <표 5>에서는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예상하는 지를 정리하였다. 보기로 제시된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중립을 지킬 것이다” 중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사실상 없는 것에 가까웠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도 5년치의 설문결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에 대한 예측은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돕거나, 아니면 한국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두 가지 예측으로 나뉘고 있다. 이 두 가지 예측 중에서 전자의 비율이 2007년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서서 살펴본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2) 중국

미국이 2008년 이후 매우 안정되게 동맹국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위에서 보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인가? 앞의 분석들, 즉 대중친밀도, 대중위협도,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정도 등에서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부정적으로 급격

히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이미지도 협력대상이나 경쟁대상에서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의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아래 <표 6>은 이러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의 분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6> 중국의 국가 이미지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Total
조사연도	2007	19.3%	46.3%	30.9%	3.3%	100.0%
	2008	23.7%	38.1%	32.8%	5.1%	100.0%
	2009	21.1%	42.0%	33.3%	3.6%	100.0%
	2010	19.7%	45.1%	31.8%	3.4%	100.0%
	2011	20.5%	40.2%	34.9%	4.4%	100.0%
Total		20.8%	42.3%	32.8%	4.0%	100.0%

* 모름/무응답 제외

즉, 협력대상으로서의 중국은 최고 23.7%에서 최저 19.3% 사이, 경쟁대상은 최고 46.3%에서 최저 38.1% 사이, 경계대상은 최고 33.3%에서 최저 30.9% 사이, 적대대상은 최고 5.1%에서 최저 3.3%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중 최고값과 최저값 간의 변이가 가장 큰 것은 경쟁대상인데, 2008년에 38.1%로 갑작스럽게 조금 떨어졌다가 곧장 40%대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국의 국가이미지 분석에서 다시 한 번 스키마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안정된 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도 분석에서 이미지 개념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최근 2-3년 동안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태도변화는 아직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변화시킬 정도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7>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한국을 도울 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Total
조사연도	2007	5.3%	26.8%	56.4%	11.4%	100.0%
	2008	4.5%	30.3%	52.2%	12.9%	100.0%
	2009	3.1%	38.5%	50.7%	7.7%	100.0%
	2010	3.3%	55.5%	37.4%	3.8%	100.0%
	2011	2.4%	62.8%	31.0%	3.8%	100.0%
Total		3.7%	42.8%	45.6%	7.9%	100.0%

한반도 발발시 중국의 대처에 대한 예상을 보면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국외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의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2011년에는 62.8%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급격히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한반도 문제에서도 중국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중국의 국가 이미지 분석과 결합해보면, 아직까지는 경쟁 혹은 경계대상으로서의 중국 이미지가 유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면 적대국으로서의 중국 이미지가 새롭게 정착될 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북한

국가 이미지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북한의 국가 이미지이다. <표 8>을 보면 북한의 국가이미지는 지난 5년간 일정한 변화가 있긴 했지만 급격하게 악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안정되어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국민들이 비율이 2007년 56.6%이

었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던 2008년에는 오히려 약간 늘어난 56.9%를 기록했다. 그러나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협력대상”으로 북한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0년에는 44.7%까지 줄어들었지만 2011년에는 약간 반등하여 47.1%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4년간의 굴곡진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의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 8> 북한의 국가 이미지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Total
조사연도	2007	21.8%	56.6%	3.3%	11.8%	6.6%	100.0%
	2008	22.3%	56.9%	3.5%	11.9%	5.4%	100.0%
	2009	17.4%	50.7%	2.2%	20.6%	9.1%	100.0%
	2010	19.3%	44.7%	3.3%	20.7%	12.0%	100.0%
	2011	16.7%	47.1%	2.3%	17.1%	16.7%	100.0%
Total		19.5%	51.2%	2.9%	16.4%	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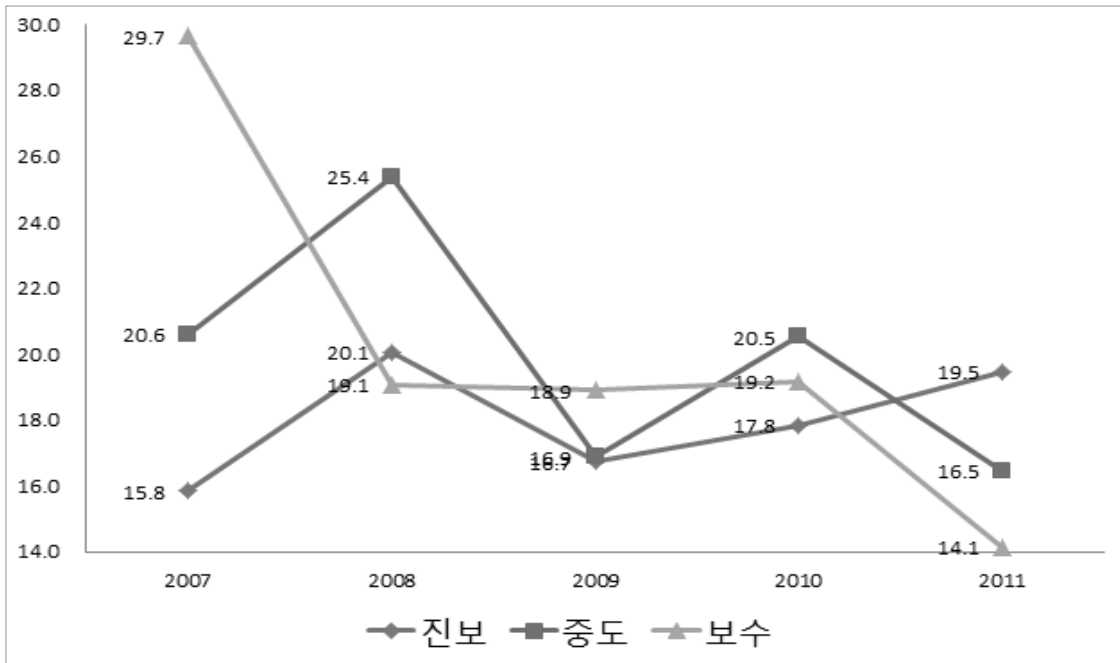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본다는 답변도 큰 변화없이 20% 안팎으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5년간의 통일의식조사에서 항상 65%에서 70% 사이의 응답자들은 북한을 협력대상 혹은 지원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을 “경쟁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3.5% 이상을 넘은 적이 없었다. 이는 불성실한 응답이나 설문조사의 오차를 생각하면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준이다. 즉, 더 이상 남북 간의 체제경쟁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한국 국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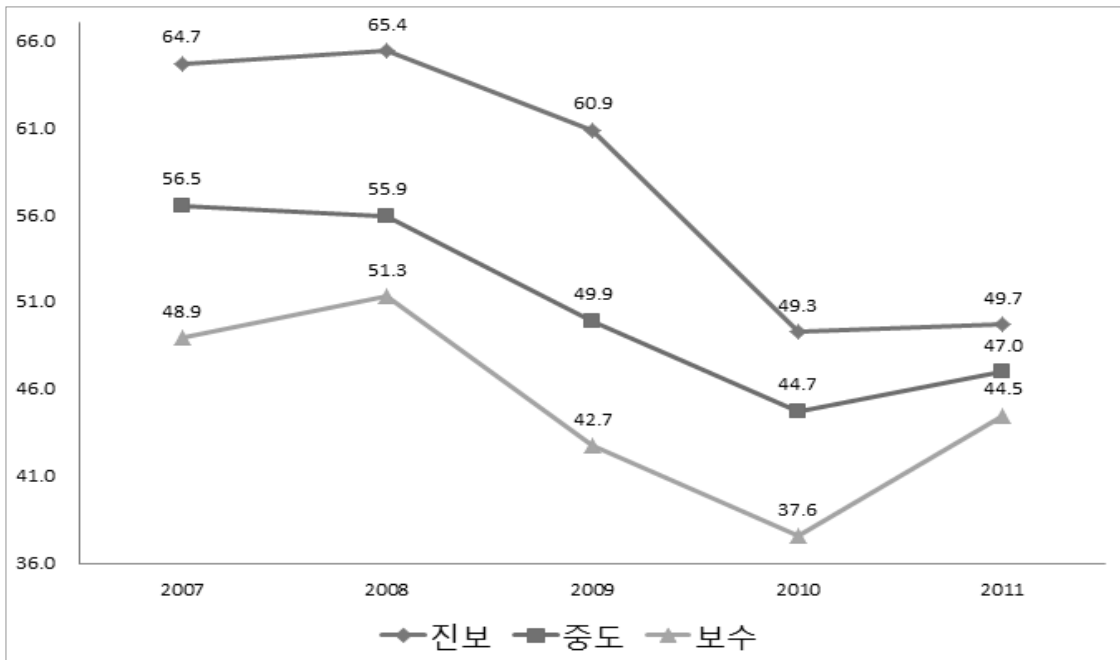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2007년 11.8%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는 20.7%로 9% 정도가 상승했지만 올해는 약간 떨어진 17.1%를 기록했다. 반대로 “적대대상”의 이미지로 북한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의 6.6%에서 올해는 최고치인 16.7%까지로 늘어났다. 이렇게 북한 이미지의 변화를 보면 대북친밀도나 대북위협도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7>에서 <그림 20>까지는 응답자의 이념성향별로 북한의 각 이미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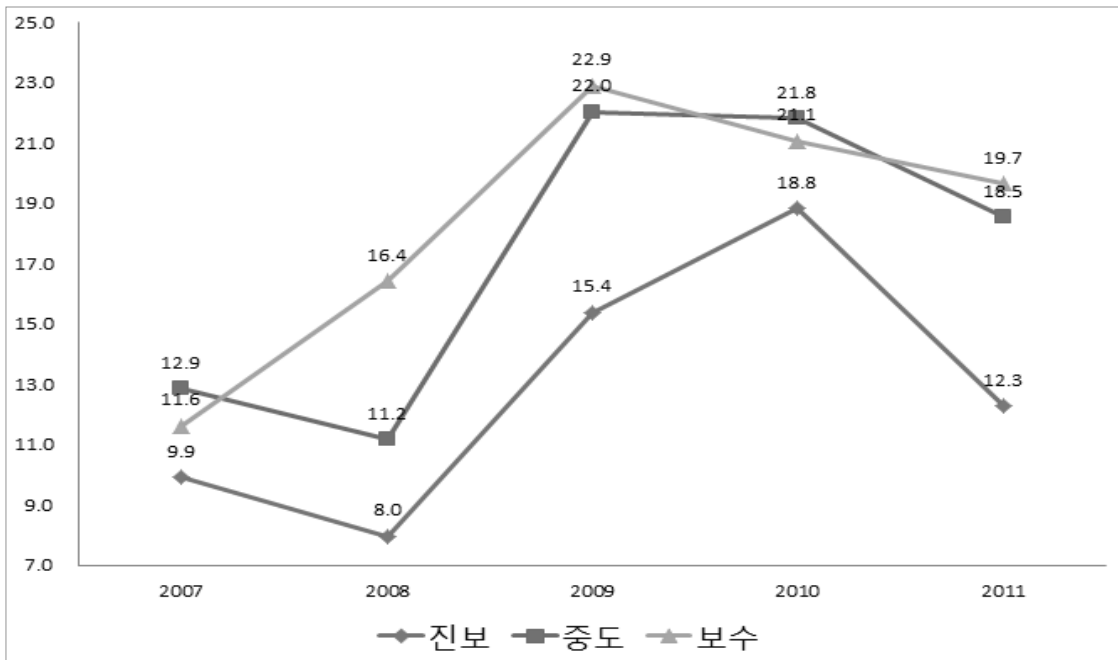
<그림 17> 지원대상으로의 북한 - 이념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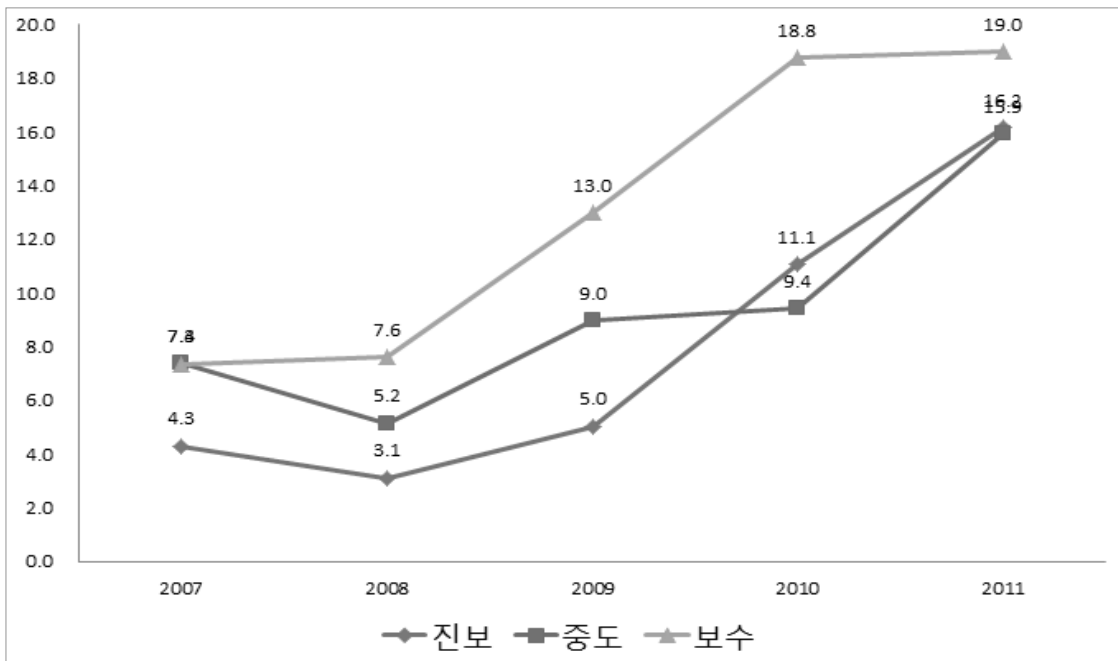
<그림 18> 협력대상으로의 북한 - 이념별 분포



<그림 19> 경계대상으로의 북한 - 이념별 분포



<그림 20> 적대대상으로의 북한 - 이념별 분포



<그림 17>에서 보수적 응답자들은 2007년에 진보 혹은 중도성향 응답자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 (29.7%)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악화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보수응답자들의 지원대상 이미지는 급격히 하락, 2011년에는 14.1% 까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진보성향 응답자들의 지원대상 이미지는 16% ~ 20%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도성향 응답자들의 응답도 2008년과 2009년 사이 한 차례 큰 하락을 보이긴 하였으나 보수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은 편이다. 흥미로운 것은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오면 지원대상으로서 북한을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보수, 중도, 진보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한국에서 개인의 이념성향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통일외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진보와 보수의 북한에 대한 시각차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것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그림 18>에서 “협력대상”으로서의 북한의 국가 이미지 이념별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어떤 이미지보다도 확실하게 협력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는 이념성향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보성향일수록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보수에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던 2010년에조차도 37.6%의 보수가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답했다. 같은 해 북한 이미지 중 보수층에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경계대상” (<그림 19>) 이었는데, 이보다 16% 가량 낮은 21.1%에 그쳤을 뿐이다. 오히려 2011년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보수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44.5%에 달했는데, 이점은 2010년의 결과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순간적인 여론변화였을 뿐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한국에서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반가까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진보나 중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아니며, 최근 몇 년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보수라고 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보는 것은 아니며, 진보라고 해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0>을 보면 “적대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가 지난 5년간 상당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악화를 생각할 때 보수층의 대북 적대감이 상승한 것은 쉽게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진보층의 적대대상 이미지도 같이 상승, 2011년 조사에서는 적대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실제로 별로 크지 않다⁸⁾. 북한을 적으로 보는 보수층이

2007년 7.3%에서 2011년 19%로 상승하는 동안, 북한에 적대적인 진보층의 비율도 같은 기간 4.3%에서 16.2%로 상승하였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첫째,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실시된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북한을 주로 지원대상, 혹은 협력대상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구조는 매우 확고하여서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둘째, 그러나 한편 진보적 응답자들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상승하는 듯, 북한 이미지의 변화 방향은 분명 냉전시절의 남북 적대관계와 유사해지고 있다. 셋째, 남북관계 악화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가져온 하나의 예기치 못한 현상은 북한을 보는 시각에 있어 진보·중도·보수의 차이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를 맹목적인 반공주의자로 단정 짓거나 진보를 종북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통일의식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이미지의 안정성에 대한 증거는 아래의 <표 9>와 <표 10>에서도 발견된다.

<표 9> 북·미 월드컵 대결시 응원하고 싶은 팀

		북한팀	미국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Total
조사연도	2007	80.8%	4.0%	6.1%	8.8%	100.0%
	2008	76.5%	7.0%	6.4%	10.0%	100.0%
	2009	68.0%	8.4%	9.8%	13.6%	100.0%
	2010	70.2%	8.6%	9.9%	10.9%	100.0%
	2011	61.7%	12.9%	10.9%	14.3%	100.0%
Total		71.4%	8.2%	8.6%	11.5%	100.0%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가상의 월드컵 게임에서 북한팀과 미국팀이 맞대결할 경우 어느 쪽을 응원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포함시켜왔다. <표 9>에 정리된 이 질문에 대한 응

8) 실제로 2011년 결과를 놓고 보수와 진보의 북한 이미지를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으로 한정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답의 추이를 보면, 2007년에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80.8%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그 이후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61.7%에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4%에서 12.9%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뚜렷한 변화의 방향은 부정할 수 없으나, 여전히 - 천안함과 연평도 이후에도 - 북한과 미국과의 대결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이들의 비율이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이들의 다섯 배 가깝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이는 국가 이미지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이다.

<표 10>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Total
조사연도	2007	38.2%	17.6%	43.9%	100.0%
	2008	29.6%	20.1%	49.7%	100.0%
	2009	39.0%	19.0%	41.8%	100.0%
	2010	37.9%	19.1%	42.6%	100.0%
	2011	39.1%	20.8%	40.0%	100.0%
Total		36.8%	19.3%	43.6%	100.0%

위 <표 10>의 내용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고르라는 질문에서 2008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해에선 37%~39% 정도의 응답자들이 남북관계개선이 더 우선적이라고 답했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놀라우리만치 일정하게 그 비율이 17%~20%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미관계 복원을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8년을 약간의 외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지난 5년간 이 질문에 대한 비율은 거의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3. 결론 : 통일의식의 변화와 안정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 오년간의 주변국 인식 변화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고 위협감은 감소하고 있다. 둘째, 반대로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감소하고 위협감은 증가하고 있다. 셋째, 미국에 대한 우호적 평가의 증가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 증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하지만 이와 같은 북·중·미에 대한 최근 평가의 상당한 변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진보와 보수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그리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분명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양집단의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발표 3 : “차기 대선과 대북정책”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1. 서론
 2. 차기 대선에서의 중요한 쟁점
 3. 현 정부 대북 정책 평가
 4.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
 5. 결론
-

1. 서론

한국 정치에서 북한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었다. 그 기원은 물론 과거 분단과 전쟁 그리고 뒤이어 계속된 냉전과 적대적 대립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민주화와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국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한 이후, 대북 정책은 한국 사회의 정파적, 이념적 대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한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이를 ‘피주기’로 비판하고 북한의 호전성을 경계해 왔다. 더욱이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경험하면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보다 큰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에 대비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과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북 정책의 방향은 대선을 통해 결정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하면서 북방정책과 대북 유화정책이 추진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햇볕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대북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대북 정책은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여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는 대북 정책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대북 정책 역시 선거 무렵 대다수 유권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 승리를 노리는 후보는 다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 이슈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며, 유권자들은 어떤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 차기 대선에서의 중요한 쟁점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살펴볼 첫 번째 사항은 차기 대선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대북 정책 관련 이슈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끈다면 그만큼 그 이슈의 정치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묻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역시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제 1 순위에서 67.2%, 1, 2, 3 순위를 합치면 89.8%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확대/지역균형은 제 1 순위로는 10% 정도 수준이고, 세 순위를 모두 합하면 54.5%로 경제성장, 고용창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의 1순위 응답을 합하면, 그 비율은 75.9%에 달한다. 네 명 중 세 명이 경제 관련 이슈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으로 1순위만으로는 복지확대와 지역 균형보다 높은 10.3%를 나타냈고, 1, 2, 3순위를 다 합해서는 53.2%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가 중요 쟁점이 되리라는 예상의 비율은 제 1순위로는 4%, 1, 2, 3 순위를 합하면 25.4%였다. 사교육문제나 환경보전/에너지정책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1〉의 결과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대북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차기 대선에서 큰 주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사교육 문제해결과 학교 개혁	환경보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	기타/ 모름
제1 순위만	67.2	9.7	10.3	5.1	3.3	4.0	0.3
1+2+3 순위 합	89.8	54.5	53.2	36.4	32.9	25.4	1.1

그러나 네 명 중 한 명 꼴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렇다

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차기 대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안보 이슈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교육 수준, 가구소득, 이념성향, 정치적 관심의 정도, 성별, 연령, 그리고 정파적 성향,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대북정책 결정 때 국민의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등 11 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확인되었다.

<표 2> 이항 로지스틱 분석 : 차기 대선 이슈는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

변수	B	Exp(B)
교육	-0.02	0.98
가구소득	0.062	1.07
이념성향	-0.10	0.91
정치적 관심	-0.202	0.82
성별	0.18	1.20
연령	0.022	1.02
한나라당 지지	-.030	0.74
민주당 지지	-0.50	0.61
지지정당 없음	-0.751	0.47
대북정책 만족도	-0.02	0.98
정책 국민 의사 반영도	0.09	1.10
상수	-1.06	

-2 Log Likelihood=1289.7

Nagelkerke R2 = 0.05

1 - p<0.01 : 2 - p<0.05

교육 :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제/대졸, 5-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 1- 가장 낮음 12-가장 높음.

이념성향 : 1-매우 진보, 2- 약간 진보, 3- 중도, 4-약간 보수, 5-매우 보수

정치적 관심 : 1-매우 관심, 2-다소 관심, 3-별로 관심 없다, 4-전혀 관심 없다

성별 : 0- 여성, 1 -남성

한나라당 지지, 민주당 지지, 지지정당 없음: 각각 1, 기타 0

대북정책 만족도 :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대체로 불만족, 4-매우 불만족

국민의사 반영도 : 1- 매우 잘 반영, 2-대체로 잘 반영, 3-대체로 반영 못함, 4-전혀 반영 못함

종속변수 : 1-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 0- 다른 이슈 (1,2,3 순위를 합한 비율임.)

11개의 독립변수 중 가구소득, 정치적 관심도, 연령, 지지정당 없음의 네 가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에서 다른 이슈에 비해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가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아 질수록 그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관심이 클수록 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이에 비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힌 이들 가운데서 남북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정파성을 갖는 이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남북 관련 이슈의 부상 가능성을 크게 본 것이다. 따라서 <표 2>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차기 대선에서 남북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예상하는 이들은 정치적 관심이 크고 정파성이 강한 나이 들고 비교적 고소득의 유권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남북 관계를 둘러싼 정책 태도의 차이가 정파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표 2>에서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차기 대선에서 어떤 이슈가 중요하게 부상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정파별 입장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에서 각 정당별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24.2%, 민주당이 15.3%였으며 그 이외 정당의 지지율은 모두 합쳐 9.1%였다. 이에 비해 지지 정당이 없다는 비율은 51.4%로 절반이 넘는다. <표 3>은 정파적 입장에 따라 중요 선거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재확인시켜 준다. 남북 관련 이슈를 선택한 이들 중 한나라당 지지층이 다른 정파 집단에 비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층도 2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유동적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20.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3> 정파별 차기 대선 중요 이슈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	기타 이슈	합계 (n)
한나라당	30.2	69.8	100.0(291)
민주당	27.2	72.8	100.0(184)
지지 정당 없음	20.1	79.9	100.0(617)
	카이제곱 12.4 p<0.01		

전체적으로 본다면,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가 현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과 양극화로 인해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2>, <표 3>에서 본 것처럼, '정치적으로 보다 활동적이고 예민한 유권자'들은 남북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련 이슈는 한동안 대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잠복해 있을지 모르지만, 이념적, 정파적 갈등이 선거와 함께 분출된다면 언제라도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현 정부 대북 정책 평가

차기 대선은 언제나 현 정부의 정책 평가의 영향을 받는다.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현 정부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와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에 유권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이번에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쟁점이 되었던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4>에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떤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3이 중간 값으로 이보다 크면 반대의 입장, 이보다 작으면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대북 정책에 대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함께 드러났다. 개성공단 유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 강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대한 찬성의 정도가 더 컸다. 북한에 빠라를 살포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도 확인되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선 진보적, 전향적 태도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북핵 해결 이전에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북한이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태도에서도 찬성의 방향으로 평균값이 나왔다. 즉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적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주목할 점은 전향적 태도를 보인 항목은 남쪽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삿포로 등 모두 남한 내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핵, 북한 인권, 북한의 사과 등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4>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남한 내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북한의 도발적, 호전적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선호하지만, 남한이 긴장완화나 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북한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쟁점	평균	표준편차
개성공단 유지해야	2.68	1.01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2.38	1.00
북핵 해결 이전 지원 불가	2.65	1.10
삿포로 살포 반대	2.69	1.07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해야	2.18	0.90
북한 사과 전 대화, 교류 불가	2.56	1.07

1- 매우 찬성, 2- 대체로 찬성, 3- 그저 그렇다/반반,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이런 점은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3이 중간 값으로 이보다 크면 책임이 크지 않은 것이고 이보다 작은 값이면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표 5>를 보면, 남북관계 악화가 북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평균값은 1.49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1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 값도 상대적으로 작다. 즉 대다수 응답자들은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북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2.63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평균 값이 나타났다. 북한 다음으로는 중국이 2.16으로 관계 악화의 책임을 비교적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악화된 남북 관계가 일차적으로는 북한, 그리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대다수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표 4>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책 항목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나타낸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표 5> 남북관계 악화의 각국별 책임 정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평균	표준편차
북한	1.49	0.72
한국	2.63	0.97
미국	2.53	0.95
중국	2.16	0.92
일본	2.79	0.94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분석 결과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대북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 등 세 항목에 대해 긍정-부정으로 나눠 분석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0%에 불과했으며, 국민의사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30.3%밖에 되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과정과 방향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도 잘한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와 대북정책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0.37 ($p < 0.01$), 그리고 국민의사 반영도와 상관관계는 0.32($p < 0.01$)로 나타났다. 대북 정책과 관련된 평가와 이 대통령의 직무 평가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에서 본 <표 4> 가운데 남한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보면 <표 6>에서의 부정적 평가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다. 즉 국민들은 북한 관련 이슈와 남한이 주도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선별적이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를 바라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만 지속되어 왔다는데 대한 불만족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표 6>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대북정책 만족도		국민의사 반영도		MB 직무평가	
만족	40.0	반영	30.3	잘 한다	37.1
불만족	60.0	미반영	69.7	잘 못한다	62.9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각 유권자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자들과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 절에서 논의한 북한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등과 정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7>의 로지스틱 모델에는 12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정책 만족도, 정책 과정에서 국민 의사 반영도,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의 세 변수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나머지 8개 변수는 대북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다. 예상대로 정파별 입장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가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고, 대북 뼈라 살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달리 개성공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핵 해결 전에는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방향과는 다른 태도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확인되었다. 한국 정치의 주요한 갈등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것이라는 점을 <표 7>의 결과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표 7>에서 주목할 대상은 사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이들이다. 한나라당 지지자거나 민주당 지지자 모두 뚜렷한 정파성을 가진 이들인 만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대비되는 입장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지하는 정파를 밝히지 않은 이들이 어떤 태도나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보다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흥미롭게도 구체적 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임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온 항목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이들 무당파 집단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대북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다시 말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이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표 7> 이항 로지스틱 모델 : 정파별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현 정부 정책 평가

	한나라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지지 정당 없음	
	B	Exp(B)	B	Exp(B)	B	Exp(B)
정책만족정도	-0.02	0.98	0.08	1.08	-0.213	0.82
국민의사반영	-0.461	0.63	-0.07	0.93	0.213	1.24
MB 직무평가	1.681	5.35	-0.911	0.41	-0.711	0.49
대북지원확대	0.12	1.13	-0.05	0.95	0.02	1.02
전임 정부 정책 계승	0.00	1.00	-0.04	0.96	0.192	1.21
남북긴장한국 책임	-0.01	0.99	0.17	1.18	-0.11	0.90
개성공단 유지	0.232	1.26	-0.233	0.80	0.04	1.04
금강산관광 재개	-0.12	0.89	-0.10	0.90	0.05	1.05
핵해결 전 지원 불가	-0.11	0.90	0.171	1.18	-0.05	0.95
빠라 살포 반대	0.162	1.17	-0.10	0.90	-0.03	0.97
북한 인권 제기	-0.03	0.97	0.03	1.03	-0.02	0.98
사과 전 교류 불가	-0.16	0.86	0.07	1.07	0.01	1.01
상수	-1.06		-1.04			
	-2Log Likelihood=954.4 Nagelkerke R2 =0.26		-2Log Likelihood=852.2 Nagelkerke R2 =0.10		-2Log Likelihood=1396.5 Nagelkerke R2 =0.05	

1 - p<0.01 : 2 - p<0.05

정책만족도 : 1- 매우 만족, 2-다소 만족, 3-다소 불만족, 4-매우 불만족

국민의사 반영 : 1-매우 잘 반영, 2-대체로 잘 반영, 3-별로 잘 반영 못함, 4-전혀 잘 반영 못함.

MB 직무평가 : 0- 잘못함, 1- 잘함

대북지원확대 : 1-대폭 확대, 2-조금 확대, 3-현재 유지, 4-조금 축소, 5-대폭 축소

전임정부 정책계승 : 1-매우 동의, 2-다소 동의, 3-별로 동의않음, 4-매우 동의않음

남북관계 악화 한국책임 : 1-이주크다, 2-조금크다, 3-중간, 4-별로 크지않다, 5-거의없다

개성공단 이하 6항목 : 1-매우 찬성, 2-다소 찬성, 3-반반, 4-다소 반대, 5-매우 반대

앞의 <표 6>에서 살펴본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표 7>을 통해 보면, 특히 정파적으로 무당파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의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동적인 유권자 집단이 이번 조사에서 50% 이상이나 되었던 만큼 이들의 평가는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후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현상적으로 작년에 비해 천안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커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작년 조사 결과와 금년 조사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1년 사이에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았다.¹⁾

<표 8>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 신뢰도

	① 전적으로 신뢰한다	② 신뢰하는 편이다	①+②	③ 반반	④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④+⑤	
2010	6.4%	26.0%	32.4%	31.8%	25.1%	10.8%	35.8%	100.0%
2011	7.1%	26.5%	33.6%	31.3%	26.1%	9.1%	35.1%	100.0%

<표 8>은 2010년과 2011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2011년 조사 결과는 2010년과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서는 그 침몰원인을 두고 국제공조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 이후인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는 사건의 전후 인과관계가 명확했고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소행이란 것이 밝혀졌었다. 따라서 연평도 포격사건의 영향이 반영된 2011년 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작년과 거의 똑 같은 비율로 불신/반반/신뢰의 응답이 나뉘었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0년 31.8%, 2011년에는 31.3%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 35.8%, 2011년에는 35.1%로 거의 차이

1) 2010년 조사에서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 분포가 비슷한 질문을 던진 다른 조사들과 매우 다르게 나와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즉, 다른 조사들에서는 대개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70% 정도로 조사된 반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정부발표를 신뢰한다는 반응이 32.4%로 매우 낮게 나온 것이다.

이 차이는 언론사들과 정부에서 실시한 다른 조사들이 대부분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직접적 질문을 한 반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느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냉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믿느냐고 직접 묻는다면 필연적으로 응답자들의 답변에 많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가 분석의 편의를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한 것에 비해 통일의식조사는 5점 척도를 사용한 것도 이 차이를 발생시킨 원이라고 생각된다. 천안함 사건처럼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서는 확실히 태도를 정하지 못한 것 또한 의미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통일의식조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 없었다. 근소하기는 하지만 불신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다. 신뢰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0년 31.8%, 2011년에는 31.3%로 나타났다.

이념별로 응답을 나눠 살펴봐도 작년과 금년 조사 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9>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의 신뢰 여부를 이념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0년과 2011년 결과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년 조사에서는 진보 중 44.3%가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28.7%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 중 44.5%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29.3%는 불신한다고 답했다. 거의 유사한 비율로 이념 집단에 따라 천안함 조사 발표에 대한 신뢰 여부가 같았다.

이번에는 지지 정파별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10>은 각 지지 정파별 신뢰도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인데, 3이 중간 값으로 이보다 작으면 신뢰, 이보다 크면 신뢰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상대로 정파별로 매우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분산분석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평균값은 2.66으로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조사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평균값은 3.29로 나타나 조사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집단은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이들인데, 이들의 평균값은 3.06으로 신뢰, 불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중립적 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보다는 근소하게라도 큰 값이 나와 미약하게나마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 쪽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사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깊은 골이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이념성향별 신뢰도 비교

이념	조사연도	신뢰한다	반반	신뢰하지 않는다
진보	2010	29.4	28.2	42.5
	2011	28.7	27.0	44.3
중도	2010	29.2	35.9	34.9
	2011	30.1	36.4	32.8
보수	2010	43.7	28.7	27.6
	2011	44.5	26.2	29.3

<표 10> 지지 정파별 천안함 사건 발표에 대한 신뢰 정도

	평균	ANOVA
한나라당	2.66	F=23.9 p<0.01
민주당	3.29	
지지 정당 없음	3.06	
전체 평균	2.99	

이상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인 지지 정당이 없다는 유동적 유권자들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측면은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의 대북 정책을 유권자들이 원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앞 절에서의 논의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정파적으로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이들 가운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을 선호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중 어떤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 11>에 정리했다.

<표 11> 차기 정부 대북정책 중 최우선 과제

우선순위 대북정책	남북한 긴장 해소와 교류협력	북한의 개방개혁 및 인권신장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	46.6	17.1	14.6	11.5	10.2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최우선 과제 가운데 남북한 긴장 해소와 교류협력이라는 응답

이 46.6%로 단연 높았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현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항목의 응답을 합하면 58.1%의 응답자가 ‘긴장완화, 평화 유지’의 방향으로 대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북한의 개방개혁 및 인권신장,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등 ‘보수적인’ 과제에 대한 응답은 31.7%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4>의 결과는 긴장완화 대 대북강경정책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 대한 대립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6:3 정도로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성은 <표 12>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두 질문에 대해서는 대북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양 극단에 두고 10개의 스케일에서 응답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정하도록 했다. 하나는 평화공존 대 흡수통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류협력 대 적극적 대북 압박에 대한 것이다. ‘평화공존 대 흡수통일’은 보다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교류협력 대 적극적 대북 압박’은 이보다는 단기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숫자가 클수록 대북 강경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5, 6 정도가 중간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평화공존 쪽으로, 그리고 교류협력 쪽으로 선호가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공존 대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4.74, 교류협력 대 적극적 압박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작은 4.3의 평균값이 측정되었다. 결국 <표 11>, <표 12>의 응답은 조사된 응답자 전체를 두고 볼 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긴장해소, 평화공존,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12>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평균 (표준편차)
평화공존(1) ----- 흡수통일(10)	4.74 (3.37)
교류협력(1) ----- 적극압박(10)	4.30 (3.49)

그러나 앞의 <표 7>에서 본 대로, 정파별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시각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파별로 나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각 지지 정파별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가 <표 13>에 정리되어 있다. ‘평화공존 대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지지 정파별로 평균값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지지 정당 없음’ 집단에서 평화공존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교류협력 대 적극적 압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 집단은 그 중간 정도의 평균값을 보였다. 이들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큰 값이 나온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도 교류협력의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평균값 역시 5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13>의 결과는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정파적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적극적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대해 대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정당 지지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지지 정당	평균	ANOVA
평화공존(1) 대 흡수통일(10)	한나라당	4.92	F=2.16 p>0.01
	민주당	4.76	
	지지 정당 없음	4.60	
교류협력(1) 대 적극적 압박(10)	한나라당	4.64	F=8.46 p<0.01
	민주당	3.97	
	지지 정당 없음	4.17	

<표 14> 정당 지지별 차기정부 대북 최우선 정책

	남북한 긴장해소 / 교류협력	북한의 개방개혁 / 인권신장	적극적 통일정책 / 자원준비	북한 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합계(n)
한나라당	39.9	18.6	12.7	17.5	11.3	100.0 (291)
민주당	54.3	14.7	9.8	13.6	7.6	100.0 (184)
지지정당 없음	47.3	16.4	9.4	13.3	13.6	100.0 (617)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 지지별로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표 14>에서 보듯이, 여기서도 지지 정당별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의 54.3%가 이것을 차기정부가 최우선시 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 그 비율은 39.9%로 두 정당 지지자들의 비율의 차이는 14.4%에 달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자들 가운데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7.3%로 두 정당 지지자들의 중간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역시 북한의 개방개혁과 인권신장, 그리고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같은 '보수적' 정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개방개혁과 인권신장에 대해서는 18.6%로,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17.5%로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높았다. 이 두 항목을 합친 36.1%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이와 같은 보수적 정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응답이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두 항목에 대한 응답은 각각 39.9%, 11.3%로 이를 합하면 51.2%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긴장해소, 평화 등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교류협력을 우선시한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상대로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이 두 항목을 합하면 그 비율은 61.9%에 달한다. 이에 비해 북한의 개방개혁과 인권신장, 그리고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응답율은 각각 14.7%, 13.6%로 이를 합하면 28.3%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과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유권자들의 응답을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보다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평화협정 체결 등 유화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47.3%, 13.6%로 이를 합하면 60.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61.9%,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51.2%였다. 또한 북한의 개방개혁과 인권신장, 그리고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같은 '보수

적 정책에 대한 무당파 집단의 응답율은 각각 16.4%, 13.3%로 이를 합하면 29.7%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28.3%,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36.1%였다.

앞서 지적한 대로,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동적인 무당파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볼 때 이들이 선호하는 정책의 방향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13>과 <표 14>를 통해 살펴본 대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들은 적극적인 대북 압박보다는 교류 협력을 선호하고 있고, 남북한의 긴장해소나 평화체제의 유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선거 경쟁은 어느 누구보다 이들과 같이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부동층(浮動層)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집중될 것이므로, 이 집단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긴장해소와 평화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로 보인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대북/통일정책은 매우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경제 분야였다. 경제성장, 고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고용창출과 지역불균형 해소였다. 이에 비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가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 본 응답자들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의 속성은 정파적인 성향이 강하고, 정치적 관심이 큰 유권자들이었다. 대북정책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혹은 정당 간 갈등의 핵심적 소재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비교적 낮은 예상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 역시 정파적 지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

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특히 정파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정하지 못한 유동적인 유권자 층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비판적 평가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적 입장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긴장해소와 평화 유지와 같은 유화적인 태도는 심지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 집단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차기 대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보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의 비율이 낮은 한 가지 이유는 정책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실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미 강한 정파성을 지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51.4%의 유동적 유권자들의 시각이 중요하다. 어떤 후보나 정당이 이들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정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천안함 관련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이들이 선호하는 정책의 방향은 현재와 같은 대북 강경정책에서 벗어나 긴장해소,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집단이 가진 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와는 다른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표 4>에서 본대로, 대북 관련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북핵이나 북한 인권처럼 북한이 관계된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이 보다 우세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남한이 주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이중적 태도는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교류협력 등을 통한 한반도 내의 긴장해소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동안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 기간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모두 경험하면서, 어느 하나의 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한국의 유권자들이 깨닫게 된 것 같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발표 4 :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박정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1. 우리사회의 세대와 통일의식
2. 세대별 통일의식 개요 가 ANOVA 분석 개요 나 2011년 세대간 통일의식 차이 문항 다 2007-2011년도 세대간 통일의식 차이 문항
3. 2011년 세대간 통일의식 차이문항 분석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나 북한에 대한 인식 다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라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마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4. 2007-2011년 세대간 통일의식 차이문항 분석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나 북한에 대한 인식 다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라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마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바 세대별 통일의식 특징
5.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방향 가 세대별 통일의식의 특징 나 통일준비 방향

1. 우리사회의 세대와 통일의식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세대의 다양한 명칭들이 생겨났다.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후세대가 구별되기도 하고 4.19, 5.18 등 민주화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민주화세대와 경제성장을 향해 달렸던 산업화 세대를 구별하기도 한다. 1990년대부터는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신세대, N세대, X세대, P세대, W세대, R세대, Web 2.0세대 등이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 '88만원세대'로 명명되는 세대가 등장했다. 또한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새롭게 결집하는 촛불 세대라는 집단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통일이 점차 빛바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늘 있어왔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비단 최근의 상황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전쟁과 분단 직후 상황에서 '통일'은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기도 했지만 산업화 시기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내부의 경제건설과 발전이 통일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민주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도 우리 내부의 산적한 과제들 앞에 국민들은 통일을 깊이 생각할 여력을 갖지 못했다. 막연히 통일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은 변함이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는 갖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출생한 현재의 20-30대들에게 있어 통일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지금의 청년세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시기를 지나 전지구적 탈냉전, 세계화 앞에서 변화된 가치와 지향을 학습해 왔다. 또한 IMF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부동산IT 버블, 고학력 취업경쟁 등의 과정 속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신세대, N세대, P세대, 88만원세대, 촛불세대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세계사적으로 포스트모던 시기를 동시대성으로 하는 세대이다. 포스트모던세대의 주요 특성은 '비관성', '탈권위주의', '삶의 질 지향', '소비지향', '정치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정리되곤 한다. 이들은 주로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로 그 이전 시기의 세대와는 문화적으로 균열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들 세대는 한국전쟁과 남북한이 분단된지 20-30년이

지난 후에 출생한 세대들로 통일에 대한 당위적, 감성적 접근이 희석되어 가는 세대이자, 통일한반도에 주력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세대의 특징과 이전 세대와의 의식 차는 통일준비과정에서 관심 깊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내에서 세대간 견해차 내지 갈등은 이념, 지역, 계층갈등을 비롯한 여타의 것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계층 분화가 세대 구분과 맞물려 있고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있어서도 20, 30대와 386세대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40대중후반,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의 차이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 내 중요한 갈등 양상에서 세대의 비중이 간과될 수 없음이 인식되고 있다. 세대간 '갈등'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세대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갈등은 그 수준과 양상에 따라 사회적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기도 하나 경쟁과 갈등이 균열과 대립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와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의 약화와 국민적 추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2011년 <통일외식조사> 결과와 더불어 지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간에 걸쳐 실시된 통일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세대간 대북, 통일외식 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2. 세대별 통일외식 개요

가. ANOVA 분석 개요

본 연구의 자료는 window용 SPSS/PC+ ver.1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대별 통일외식·대북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내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하였다. 세대별로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의견 차이 정도는 F검정(ANOVA)을 통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해 내고, 이에 따라 각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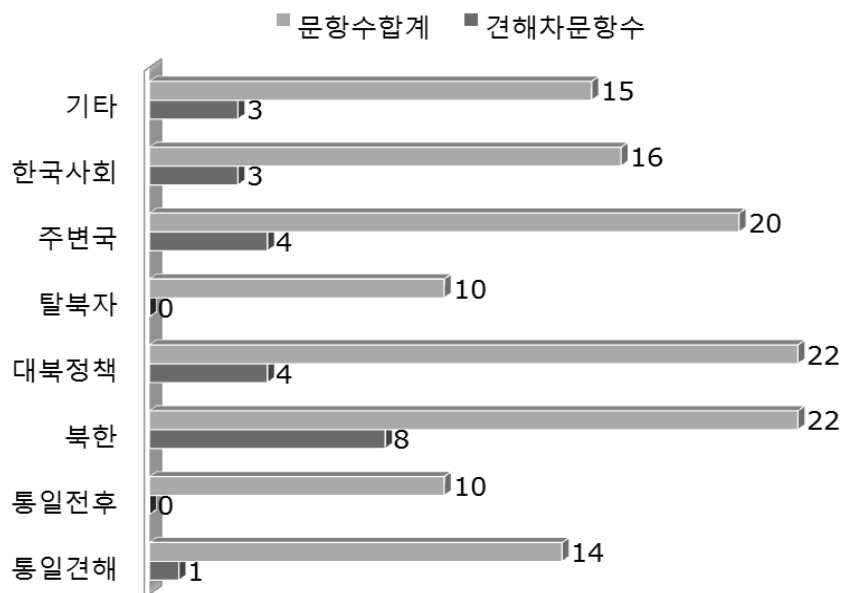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한 2011년도 통일외식조사 결과는 지난 2007-2010년까지의 통일

의식조사 결과 보다 세대간 견해차를 보인 문항 수에 있어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통일 의식 분야별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보면,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서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이 없는 분야는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인식에서였다. 즉, 세대 간 견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보이지 않고 일치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나. 2011년 세대간 통일의식 차이 문항

2011년 통일의식조사 총 (기본 인적사항 제외) 104문항 중 23문항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였다. 통일의식 분야별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보면,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14문항 중 1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났고,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견해에서는 총 10문항 중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총 22문항 가운데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8문항, 대북정책에 관한 문항 22문항 중 4문항이,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묻는 10문항 중에서는 없었다.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문항 중 4문항에서, 해방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16문항 중 3문항이, 기타 정치·경제·사회적 인식을 묻는 15문항 중 3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보면 분야별로 세대간 견해차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북한에 대한 인식임을 파악할 수 있다.

2011년도 분야별 견해차문항수



다. 2007-2011년도 세대간 통일외식 차이 문항

(1) 2007-2011년 외식차 추이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통일외식조사 결과까지 추가·삭제된 문항을 제외한 공통 문항에 한정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 수를 각 연도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007-2011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통일외식조사 문항에서 공통된 문항은 총 95문항으로 각 연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 수를 보면 2007년 27문항, 2008년 39문항, 2009년 43문항, 2010년 35문항, 2011년에는 21문항(전체 23문항)이었다.

구분	2007-2011 동일 문항 수	2007-2011공통 문항 내 세대별 견해 차 문항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13	3	3	9	4	4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10	3	5	0	1	0
북한에 대한 인식	20	7	9	9	11	7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4	0	3	1	3	1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10	0	4	3	0	0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16	5	5	6	5	4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4	5	5	9	8	3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8	4	5	6	3	2
합 계	95	27	39	43	35	21

2007년 27문항에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난 이래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서 37문항으로 견해차를 보인 문항수가 10문항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세대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수가 43문항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0년 조사결과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1년도 올해 조사에서는 21문항으로 세대별 견해차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 2007-2011년 연속 의식차 문항 : 2-5개년 간

2007년도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1년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정리해 보면 3-5개년 연속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2개년 연속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총 24개 문항이나 이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새롭게 문항이 추가된 이래 2년차에 걸쳐 견해차를 보인 문항들이다.

우선 5개년 연속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총 9개 문항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북한사회인 지도(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축전)’,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19, 5.16, 10월 유신)’에 대한 문항에서였다.

4년차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분야에서 남북한 통일가능시기(07-10),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분야에서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08-11)’,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07-10)’, ‘한국과 주변 주요국(러시아)의 관계(07-10)’,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07-10)’,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분야에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07-10)’,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07-10)’에 대한 견해에서였다.

3년차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을 보면 총 11문항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분야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09-11)’, ‘대북사안별시급성-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07, 09-10)’,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분야에서 ‘통일의 이익 정도-㉕ 남한(07, 09-10)’, 북한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07, 09-10)’,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분야에서는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줄여야 할 시 그 이유)(08, 10-11)’,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08-10)’,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2009년 신설-2011)-㉖ 미국의 책임(09-11)’,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분야에서는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㉗ 미국(08, 10-11)’,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분야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07-09)’, ‘정치적 성향(09-1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07-09)’에 대한 견해에서다.

2009년도 또는 2010년도에 신설된 문항 중에서 2년차 동안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분야에서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2009년 신설-2011)-㉘ 북한의 책임, ㉙ 일본의 책임’,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분야에서 ‘이명박대통령 직무 평가(2010년 신설-2011)’, ‘천안함 침몰원인 정부조사 신뢰도 (2010-2011)’에 대한 문항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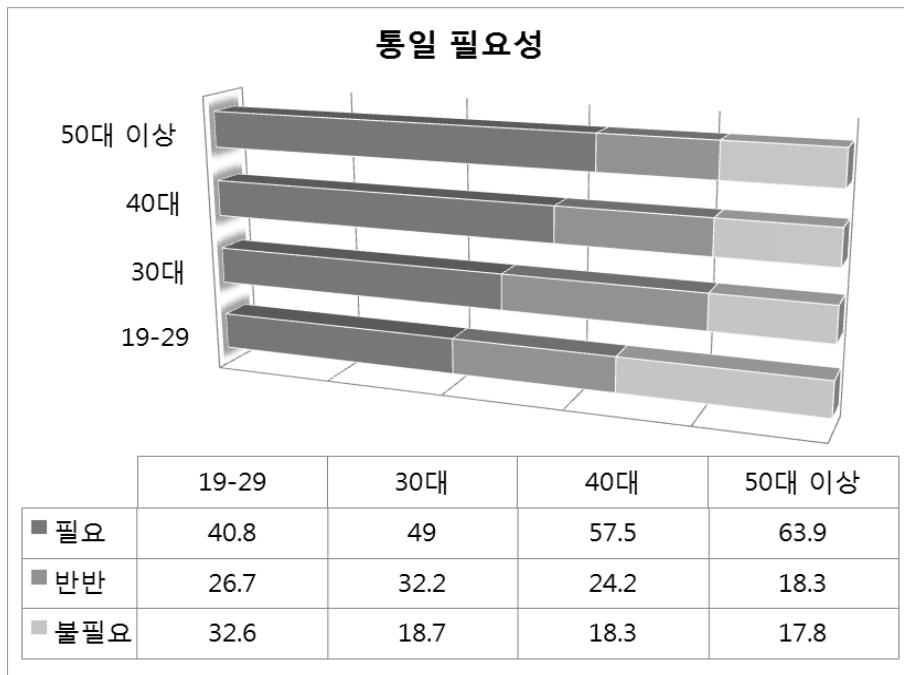
연속 연차수	분야	문항	하위문항	ANOVA 분석 견해차 연도
5개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07-11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사회 인지도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 축전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㉚ 4.19 ㉛ 5.16 ㉜ 10월유신		
4개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07-10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08-11

연속 연차수	분야	문항	하위문항	ANOVA 분석 견해차 연도
		-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07-10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㉔ 러시아	07-10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07-10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07-10 07-10
3개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09-11
		대북사안별 시급성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07, 09-10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통일의 이익 정도	㉔ 남한	07, 09-10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	07, 09-10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줄여야 할 시 그 이유)	08, 10-11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	08-10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2009년 신설-2011)	㉔ 미국의 책임	09-11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㉔ 미국	08, 10-11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07-09
			정치적 성향	09-1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07-09	
2개년 (2009, 2010년 신설 문항에 한함)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2009년 신설-2011)	㉔ 북한의 책임	09, 11
			㉔ 일본의 책임	09, 11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	이명박대통령 직무 평가 (2010년 신설-2011) 천안함 침몰원인 정부조사 신뢰도 (2010 - 2011)	10-11 10-11

3. 2011년 세대간 통일인식 차이문항 분석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14문항 중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1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서는 19-29세 응답자들의 32.6%가 공감하고 있어 여타 세대가 이에 대해 20% 미만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는 구분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현재대로가 좋다’는 데에 19-29세가 22.1%가 공감하는 것에 비해 50대 이상은 11.3%만이 공감하여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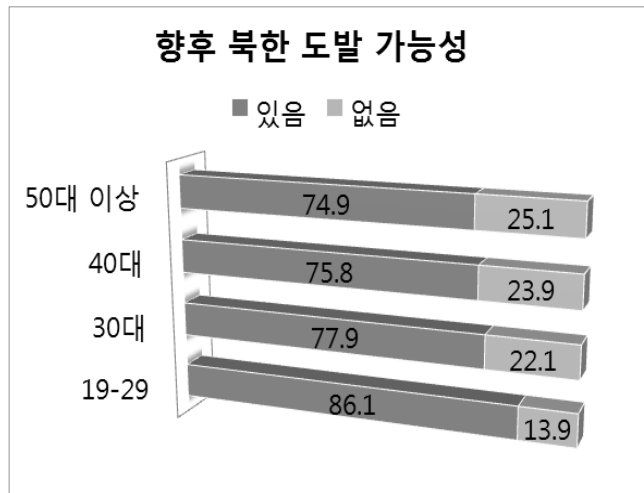
나.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총 22문항 가운데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8문항으로 남북한관계에 대한 인식,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 예측, 북한사회인지도와 관련한 문항에서였다.

남북한관계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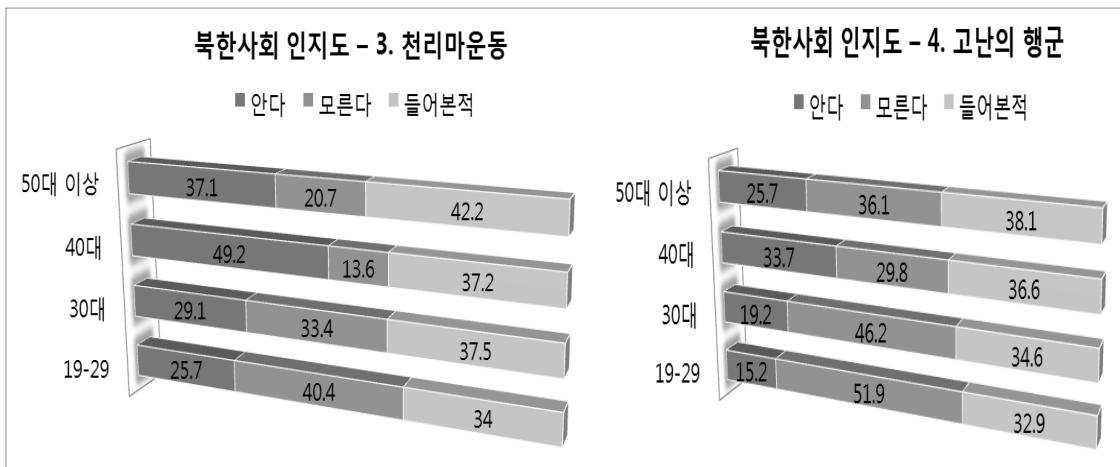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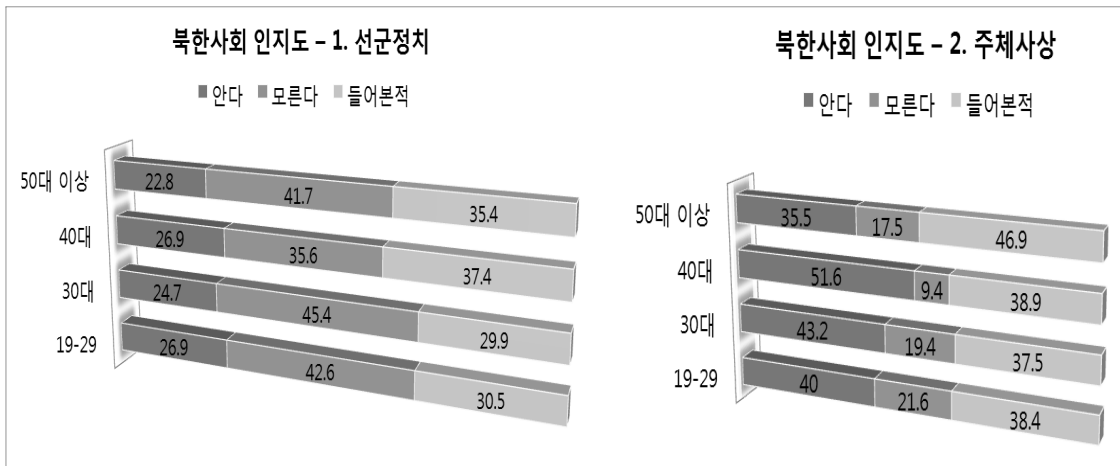
과약하였는 바, 전연령대에서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40-50% 분포로 다른 응답들(지원, 경쟁, 경계, 적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특징적인 것은 19-29세가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26%로 여타 연령대에서 11-15%대의 응답률을 나타내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에 있어서도 19-29세, 50대 이상이 각각 40.7%, 41.9%의 응답률을 보인 것에 비해 30대와 40대는 이보다 10% 가량이 높은 각각 52.4%, 52.8%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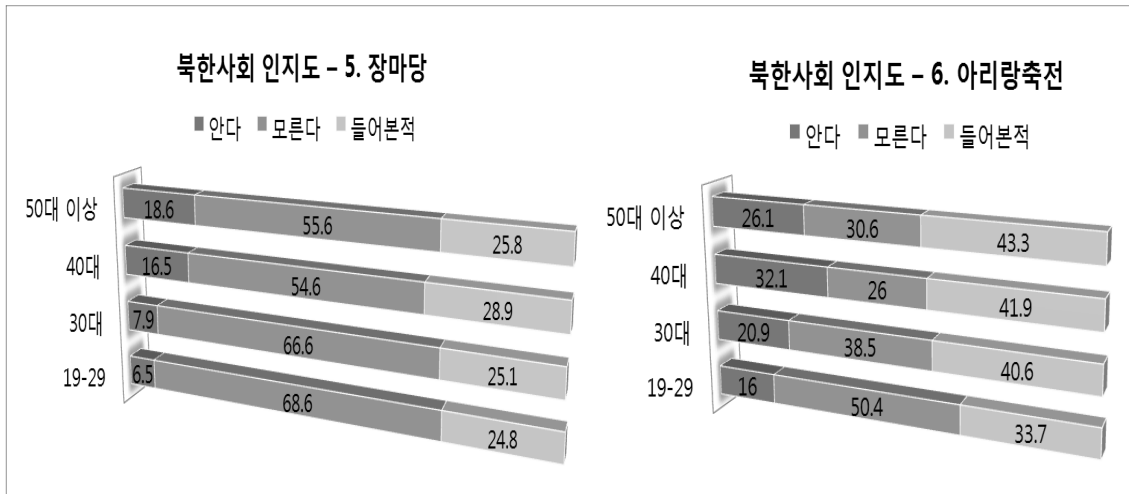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세대에 걸쳐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80%대로 없다는 견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19-29세의 연령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86.1%)가 두드러졌다. 반면 50대 이상(74.9%)이 40대(75.8%), 30대(77.9%)와 근소한 차이지만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게 드러냈다.



북한 사회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등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응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각 문항별로 인지도에 있어서 세대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선군정치, 장마당에 대한 인지도를 제외하고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 축전 등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 사회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19-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 대조를 이루었다.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19-29세와 40대 모두 안다는 응답이 26.9%였고, 30대는 24.7%, 50대 이상은 22.8%가 안다고 응답하여 50대 이상의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마당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50대 이상이 18.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고, 40대에서는 16.5%, 30대는 7.9%, 19-29세는 6.5%만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주체사상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40대가 51.6%,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는 49.2%가, 고난의 행군은 33.7%, 아리랑 축전에 대해서는 32.1%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다.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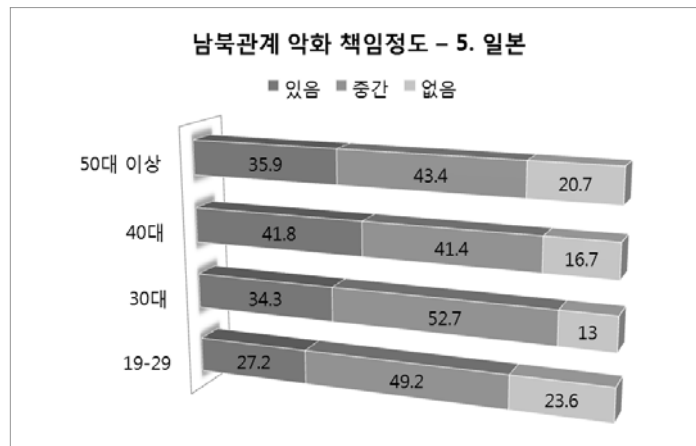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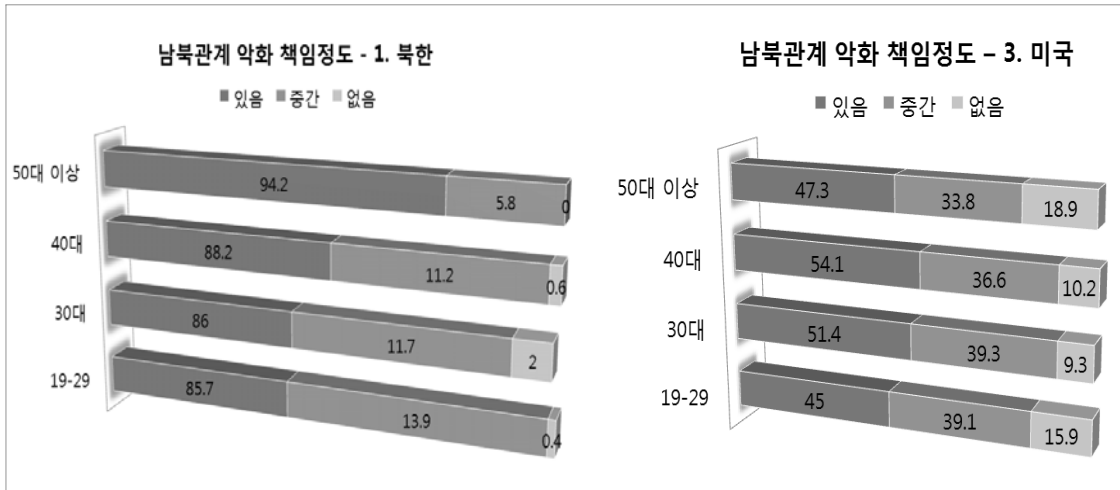
대북정책에 관한 문항 22문항 중 4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간 견해차가 나타났다. 즉,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북한, 미국, 일본) 등에서이다.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늘려야 한다’는 응답에는 40대가 27.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50대 이상 23.3%, 30대 19%, 19-29세 17.8%로 나타나 19-29세와 40대의 응답률 차이가 10% 가량이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에서는 19-29세가 49.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33.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40대와는 16% 가량의 응답률 차를 보였다. 50대 이상은 39.1%, 30대는 38.2%였다.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가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80-90% 대다수에 이르렀고, 미국의 책임이라는 응답에는 40-50%, 일본에 대해서는 20-40%가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세대간에 책임 정도에 대해 크고 작은 이견을 보였는데,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즉, 19-29세는 85.7%, 30대는 86%, 40대는 88.2%, 50대 이상은 94.2%로 19-29세와 50대 이상의 응답률 차가 10% 가까이로 나타났다.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40대가 5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30대가 51.4%, 50대 이상 47.3%, 19-29세는 39.1%에 머물렀다.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40대가 41.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50대 이상은 35.9%, 30대 34.3%, 19-29세는 27.2%였다.

정리해 보면, 다른연령대에 비해 50대 이상은 북한의 책임에서, 40대는 미국, 일본의 책임이라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북한에게 크게 있다는 응답에서는 19-29세와 50대 이상의 견해차가 가장 컸고, 미국,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에서는 40대와 19-29세의 견해차가 뚜렷했다.



라.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20문항 중 4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세대간 유의미한 응답차를 보였다. 4문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한국과 주변국 주요국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남북한 통일희망정도, 남북한 통일에 미국의 도움 필요정도 등이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의 관계 인식에서 여타 국가(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비해 세대간 견해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로는 전세대에 걸쳐 미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도 50대 이상이 76.5%의 응답률로, 19-29세의 62.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9-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대한 친근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일본(16.6%)에 대한 친근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50대 이상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친근감을 느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13.1%)이나 일본(54.9%)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드러냈다. 40대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에서 20.1%가 공감함을 표시해 여타 연령대가 13-15% 응답률을 보인것과 5% 정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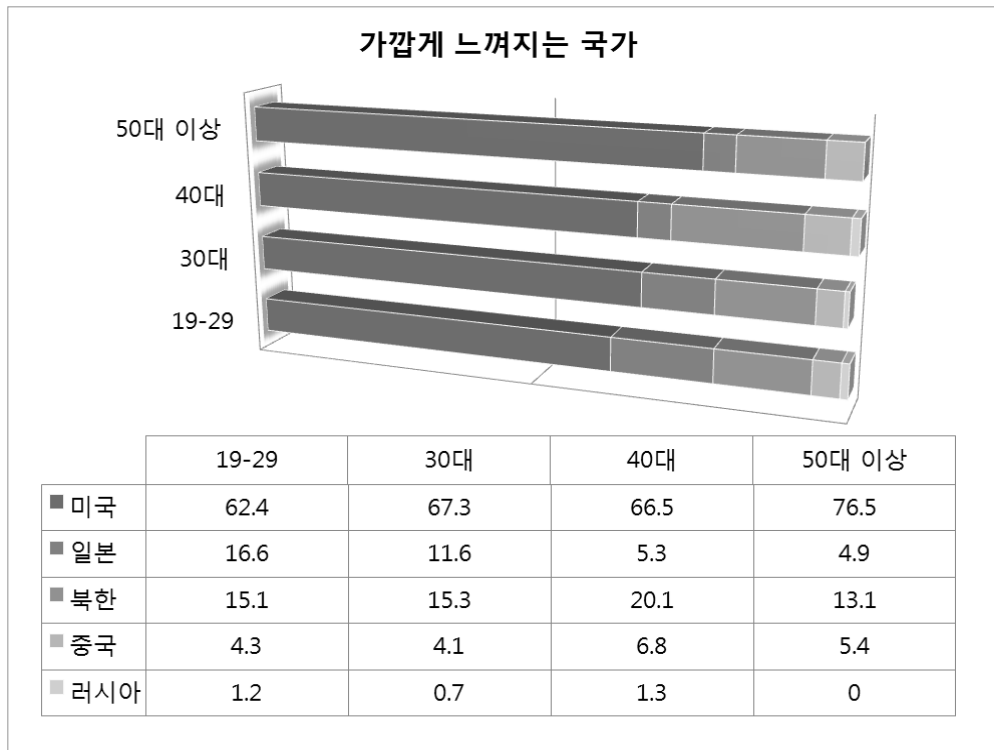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인식을 묻기 위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는 바, 전연령대에서 미국에 대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60-80%대 분포를 보여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40대는 68.1%에 그쳐 여타연령대에서는 70-80%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차이를 보였다.(19-29세 74.5%, 30대 75.2%, 50대 이상 81.3%) 81.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50대 이상과는 13% 가량의 차이이다. 40대는 미국이 경제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14.8%로 50대 이상이 5.3%, 19-29세 9.7%, 30대 9.9%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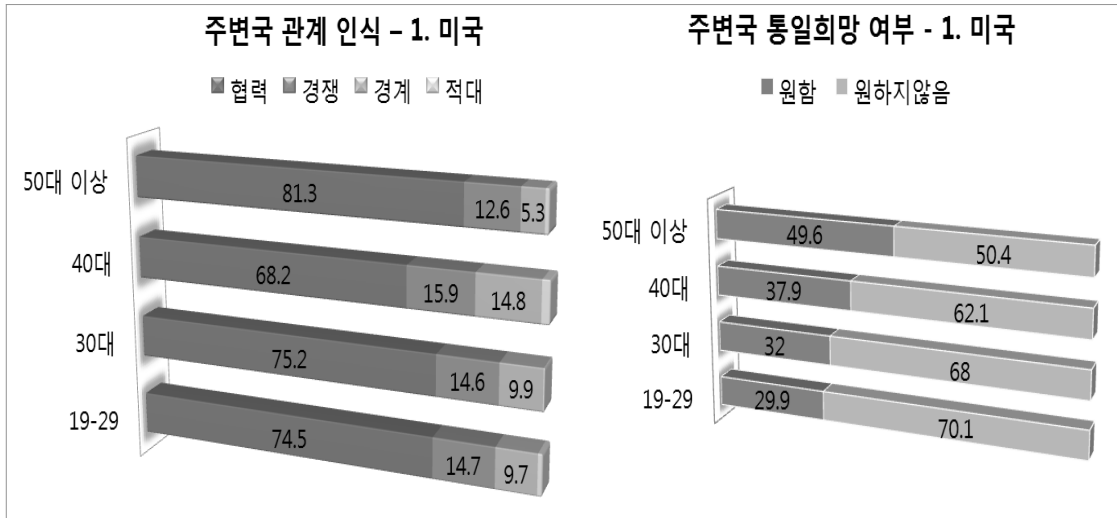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미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원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하지 않는다는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률을 보면 ‘원하는 편’이라는 응답에서 50대 이상이 49.6%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40대는 37.9%, 30대는 32%, 19-29세는 29.9%였다. ‘원하지 않는편’은 19-29세에서 7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고,

30대는 68%, 40대 62.1%, 50대 이상은 50.4%순으로 응답률이 낮아졌다.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에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에서 전연령대 평균 91.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연령대별 견해차가 작게나마 나타나고 있었는데 50대 이상은 95.4%가 필요성을 인식했고, 30대 93.1%, 40대 90.8%, 19-29세는 87.2%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29세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2.8%로 여타 연령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 한자리수 응답률을 보인것에 비해서는 높은 응답률이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가장 호의적 태도와 우방으로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19-29세의 경우가 50대 이상 연령대와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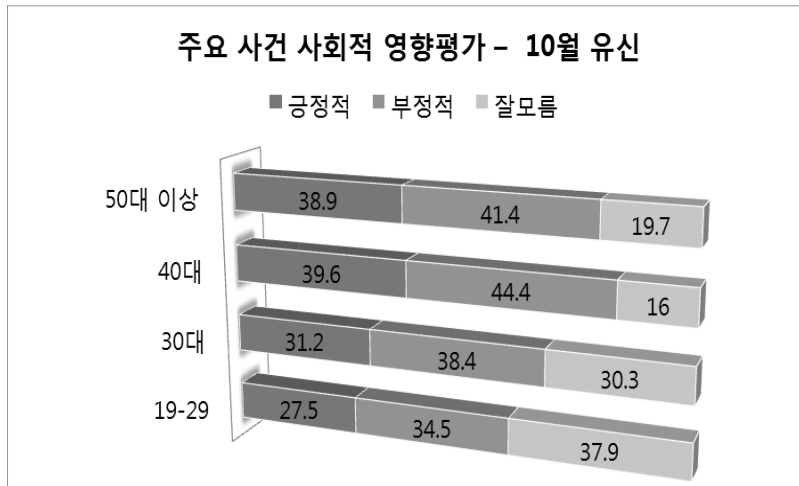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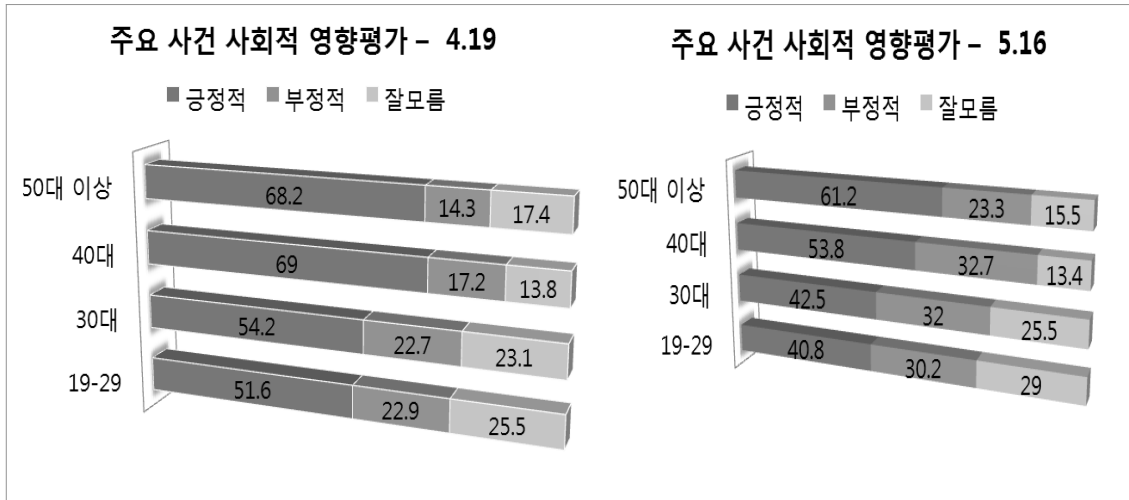


마.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해방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 총 16문항 중 3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였는데,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 '㉚ 4.19, ㉛ 5.16, ㉜ 10월 유신'에 대해서였다. '4.19에 대해서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전체 61.5%로 과반수 이상이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50대 이상이 68.2%, 30대는 54.2%, 19-29세는 51.6%의 응답률 순이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9-29세, 30대의 경우 각각 22.9%, 22.7%이며, 40대 이상은 17.2%, 50대 이상은 14.3%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5.16에 대한 평가에서는 50.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즉, 50대 이상이 61.2%, 40대는 53.8%, 30대는 42.5%, 19-29세는 40.8%로 19-29세와 50대 이상의 응답차가 20% 이상이었다.

10월유신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평가가 40%로 긍정적인 평가(34.8%)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의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44.4%), 다음으로 50대 이상이 41.4%, 30대는 38.4%, 19-29세는 34.5%였다. 눈여겨 볼 것은 잘모른다는 응답에서 19-29세가 37.9%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30대의 경우 30.3%가 잘모른다는 응답률을 나타내 40대, 50대 이상이 각각 16%, 19.7%인 것과 비교해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바.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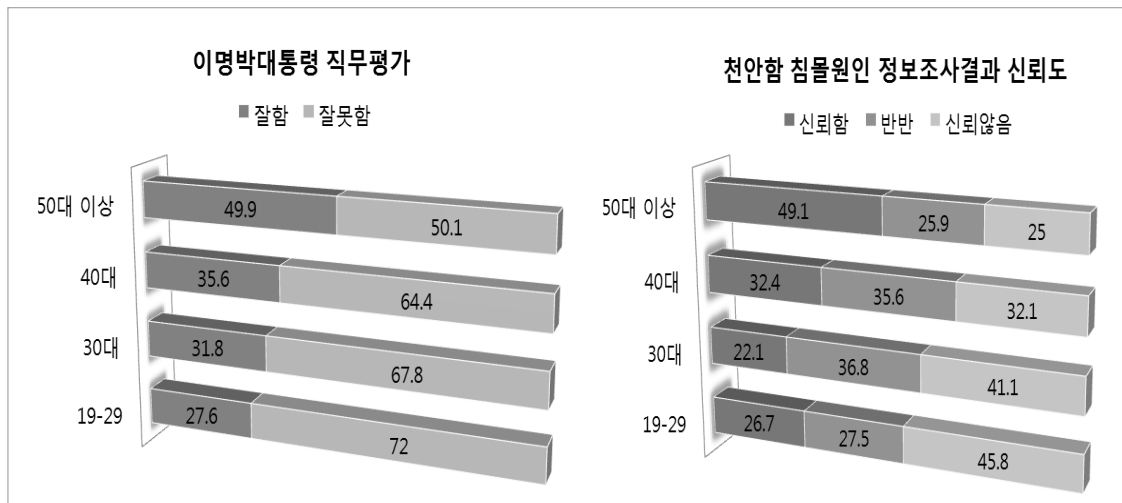
기타 정치·경제·사회적 인식을 묻는 15문항 중 3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났다. 즉, 이명박대통령 직무 평가(2010년 신설-2011), 정치적 성향, 천안함 침몰원인 정부조사 신뢰도 (2010년 신설-2011)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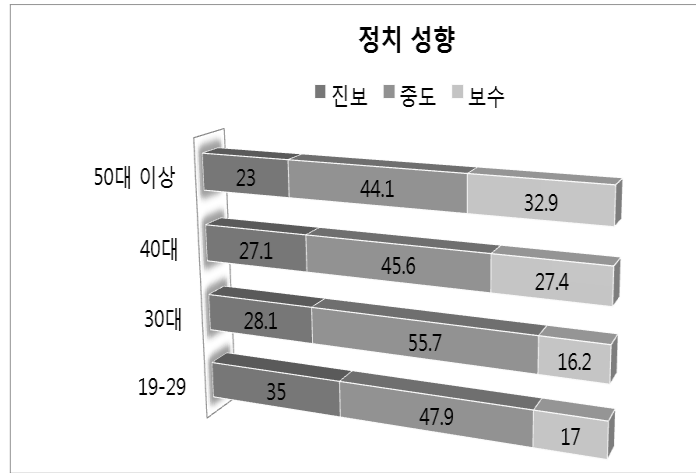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7%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나타난 응답률 차를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잘못한다는 평가율이 높

게 나타났다. 즉, 19-29세는 72%가 잘못한다는 평가였는데, 30대는 67.8%, 40대는 64.4%, 50대 이상은 50.1% 순으로 잘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서는 이와는 역의 순서를 보였는데 50대 이상은 잘한다는 평가가 49.9%, 40대는 35.6%, 40대는 31.8%, 19-29세는 27.6%였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중도’라는 답변이 48.1%로 진보적 27.9%, 보수적 24%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중도라는 응답에서 30대가 5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19-29세가 47.9%, 40대 45.6%, 50대 이상은 44.1%였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데에는 연령대가 낮을 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19-29세가 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고, 30대는 28.1%, 40대는 27.1%, 50대 이상 23%였다. 반면 보수적이라는 데에서는 50대 이상이 3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고, 40대도 27.4%로 50대 다음의 응답률이였다. 다음은 19-29세가 17%, 30대가 16.2%였다.

‘작년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 또는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33.5%, 반반 31.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49.1%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30대는 22.1%로 50대 이상과 2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19-29세는 26.7%, 40대는 32.4%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29세가 45.8%, 30대 41.1%, 40대 32.1%, 50대 이상은 2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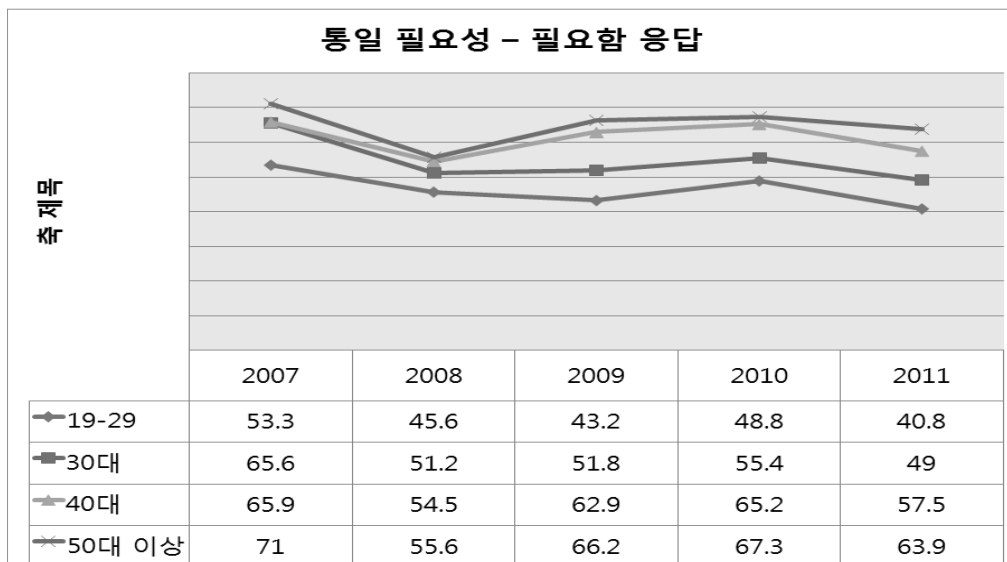


4. 2007-2011년 세대간 통일의식 차이문항 분석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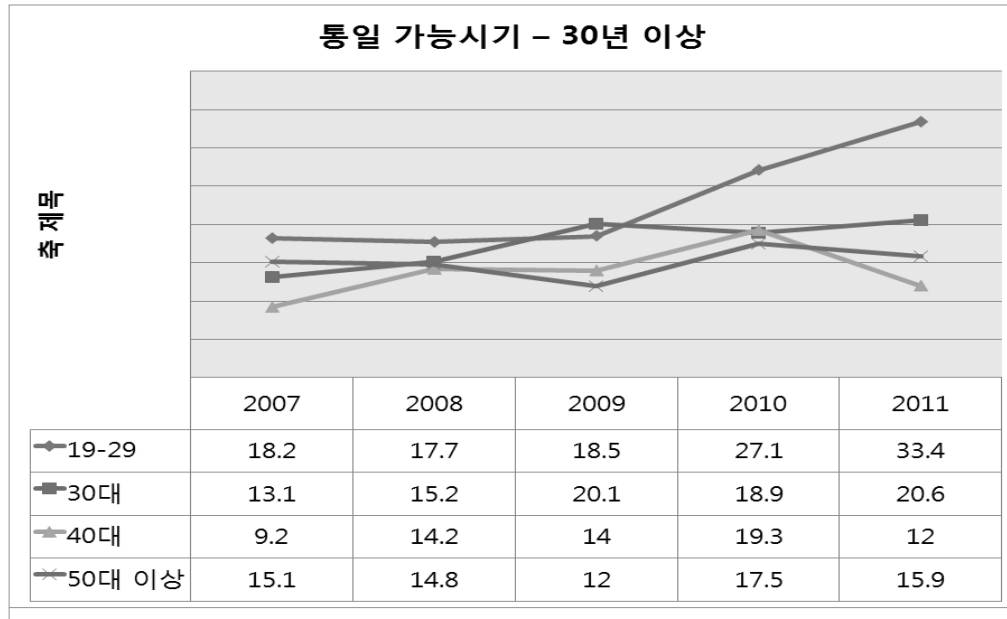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년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대간 견해의 지형은 19-29세 응답자들이 통일 필요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약 20% 내외의 견해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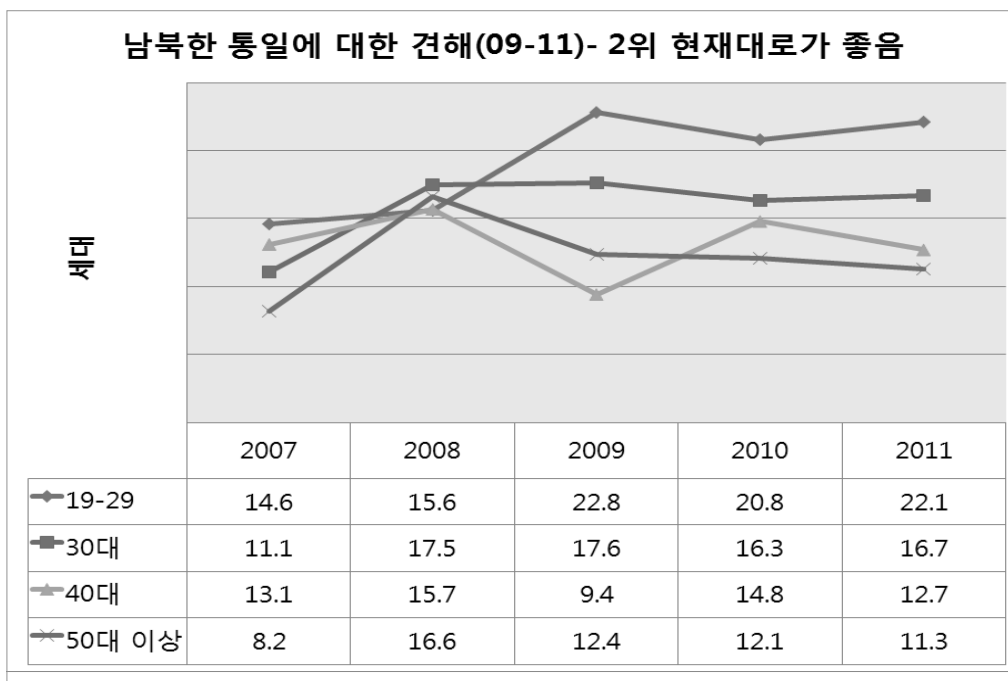
(2) 통일가능 시기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 연령대에 걸쳐 20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다.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에 있어서 세대간 견해차가 비교적 뚜렷이 보인다. 특히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률에 있어 30대 이상 연령대는 매년 응답률이 소폭의 상승, 하강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19-29세 청년층은 2010년, 2011년 조사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응답률이 10% 이상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즉, 2007-2009년까지 17-18% 선이었던 응답률이 2010년 27.1%, 2011년에는 33.4%까지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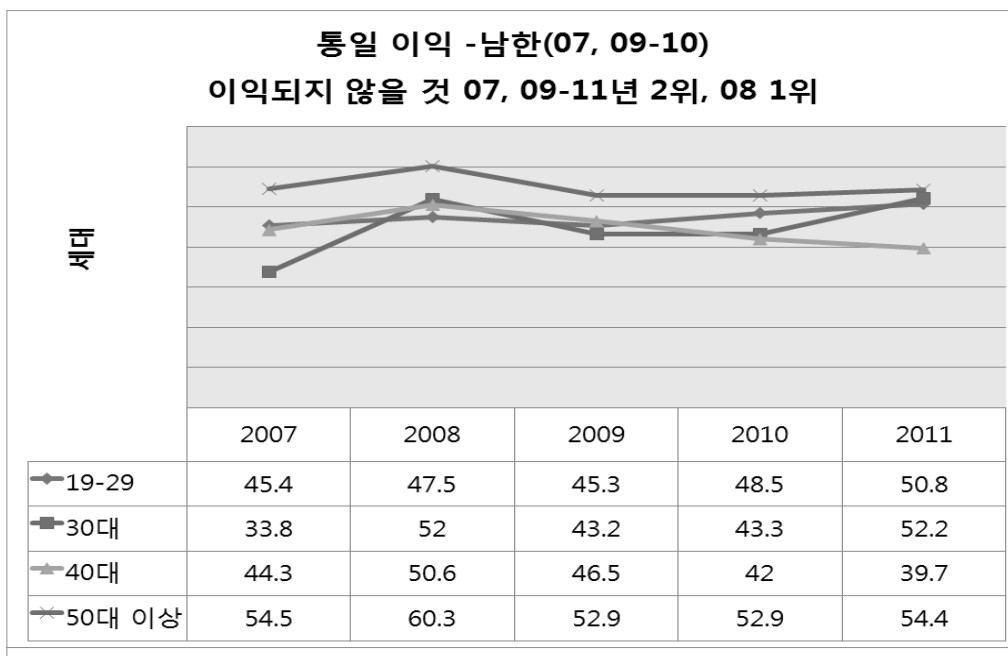
(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여건이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매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2순위인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에서 19-29세의 견해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2008년도를 제외하고 2007, 2009-2011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4)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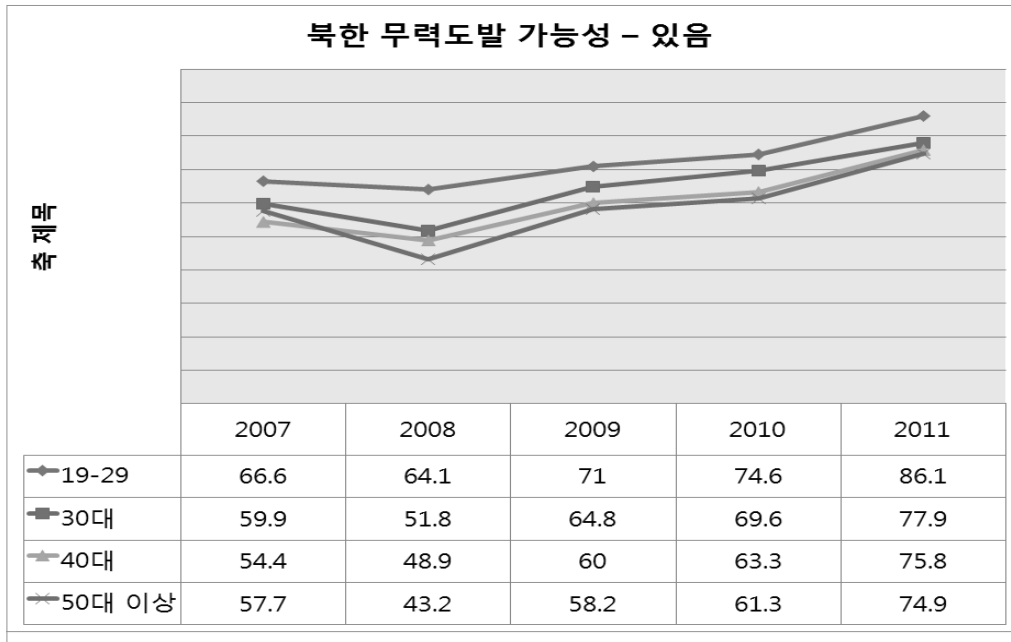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에서는 50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연령대에서는 매년 응답률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나.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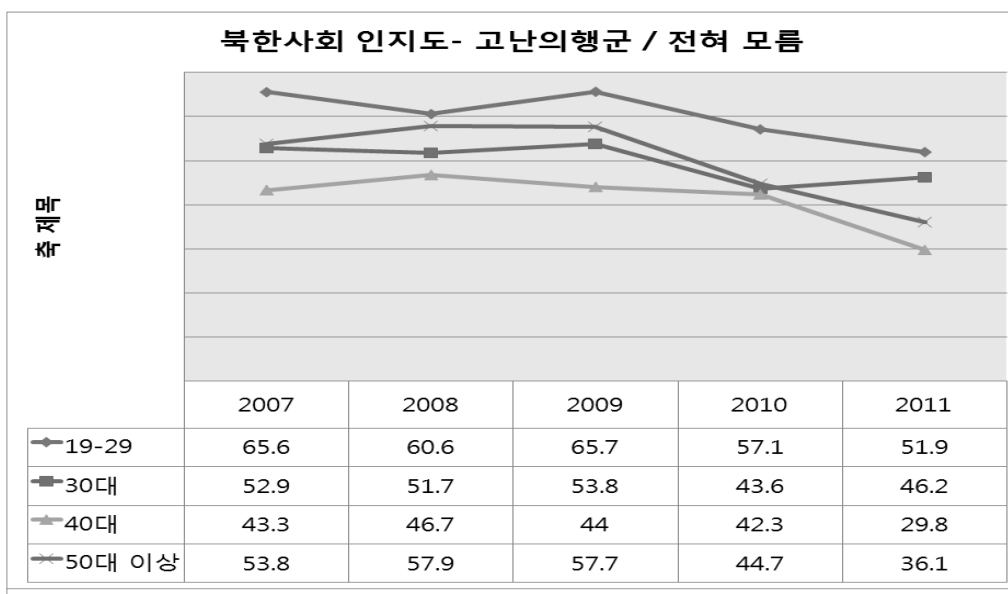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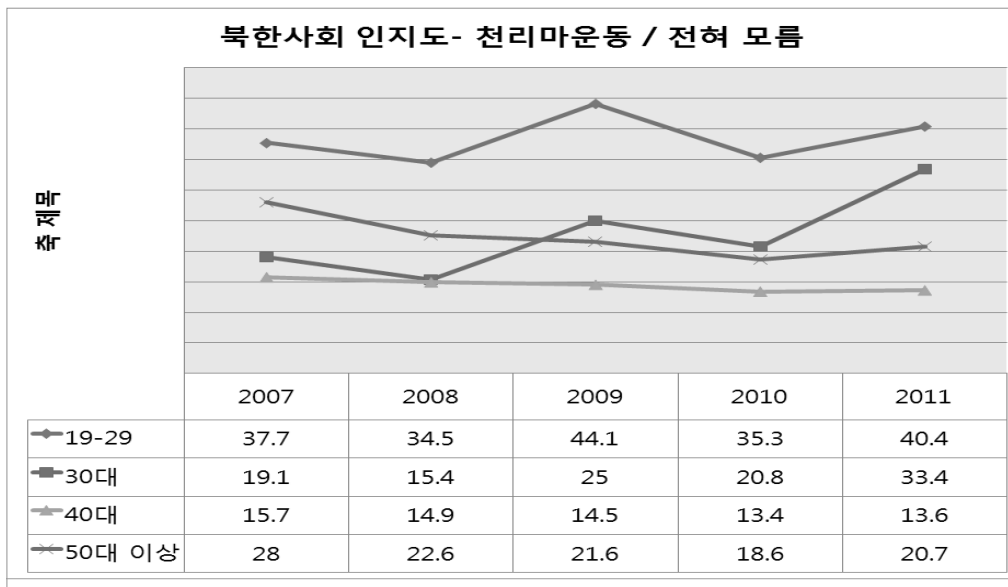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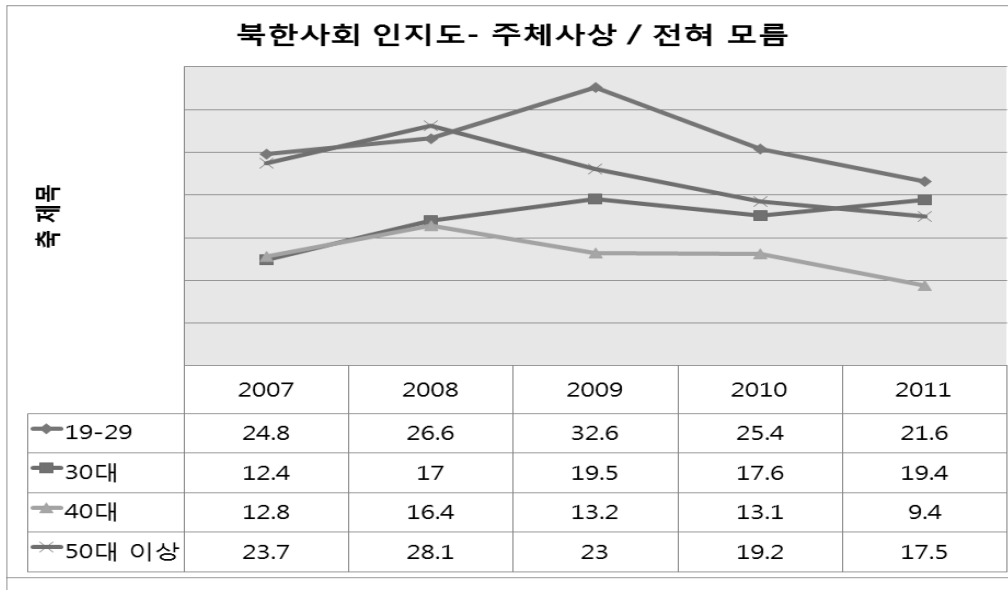
(1) 북한무력도발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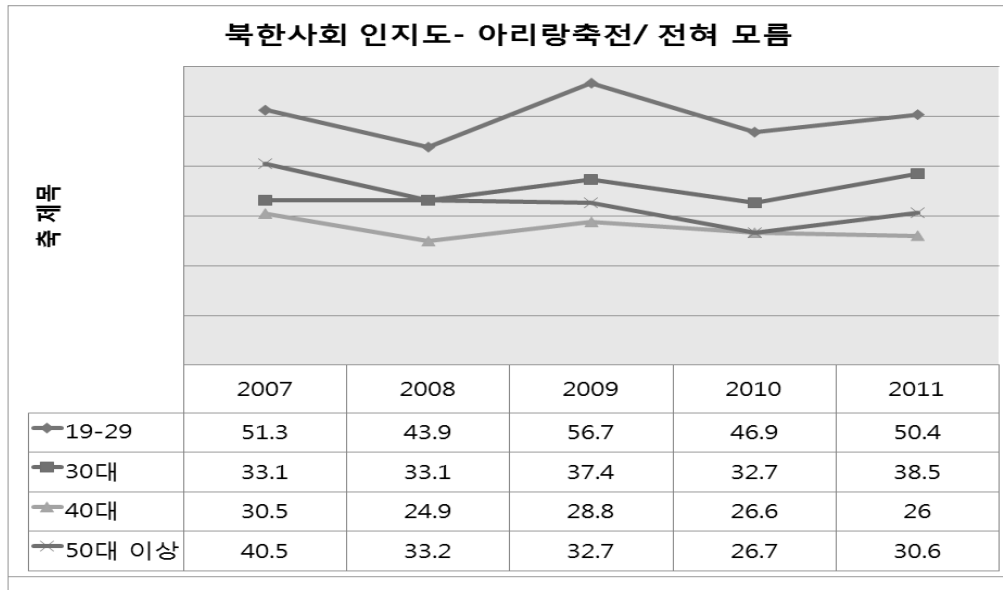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매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세대별로 보면 19-29세의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2011년도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치는 줄어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연령대에서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은 매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를 보이는 문항이다.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축전 등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가에서 ‘전혀모른다’는 응답에 있어 19-29세의 응답률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40대의 경우 전혀모른다는 응답에서는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19-29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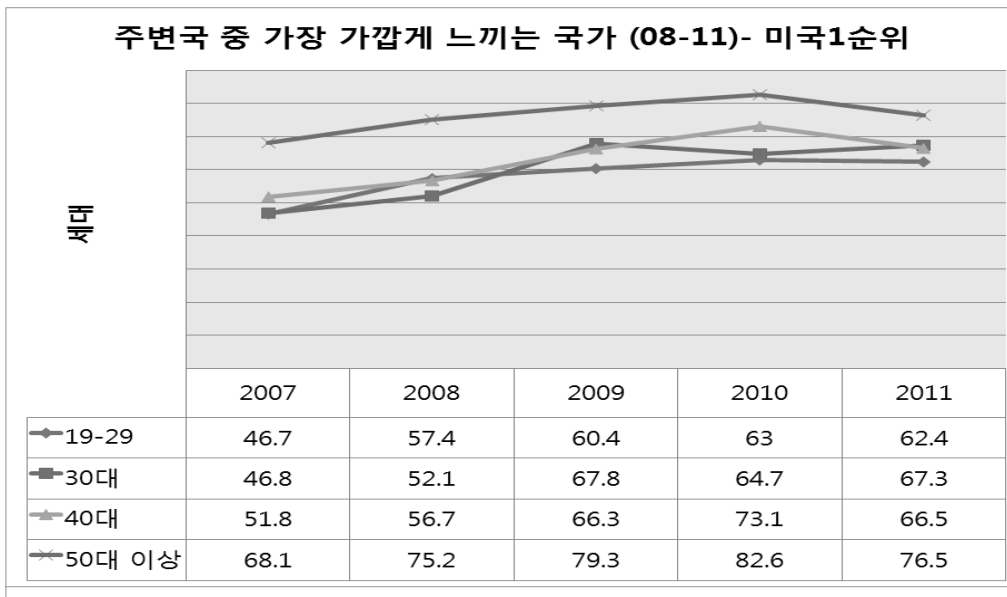
다.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주변국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에 대해 매년 미국이 1순위, 북한이 2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이 매년 50대 이상에서 여타 연령대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에서는 50대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50대는 여타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는 가깝게 느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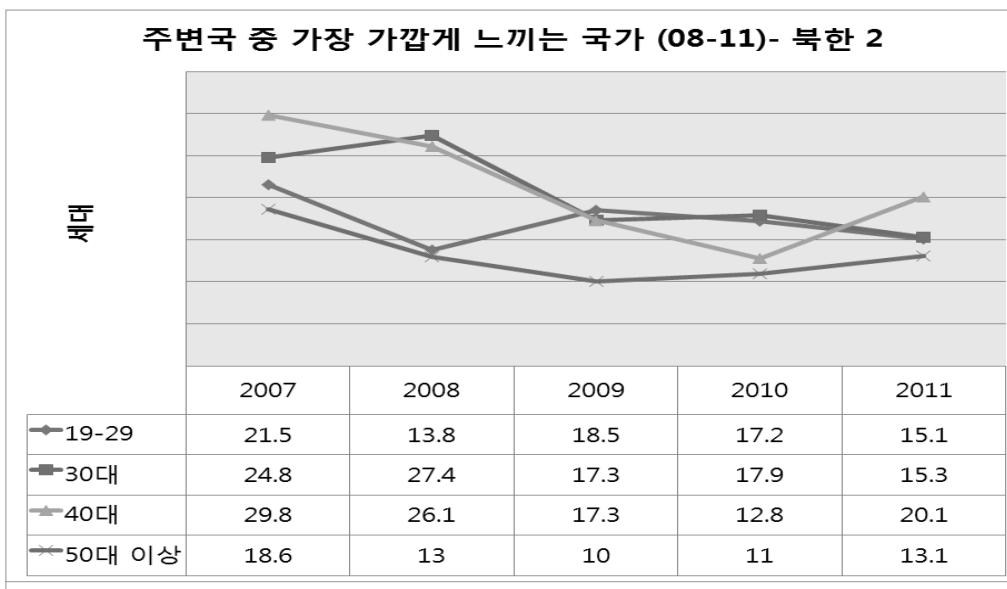
주변국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꼽는 응답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5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서 북한에 대해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과 상통한다. 또한 가장 위협적 국가가 미국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한반도 전쟁시 주변국의 태도로 미국이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1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매년 유지하고 있어 50대 이상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미국'을 꼽은 응답자 가운데 19-29세가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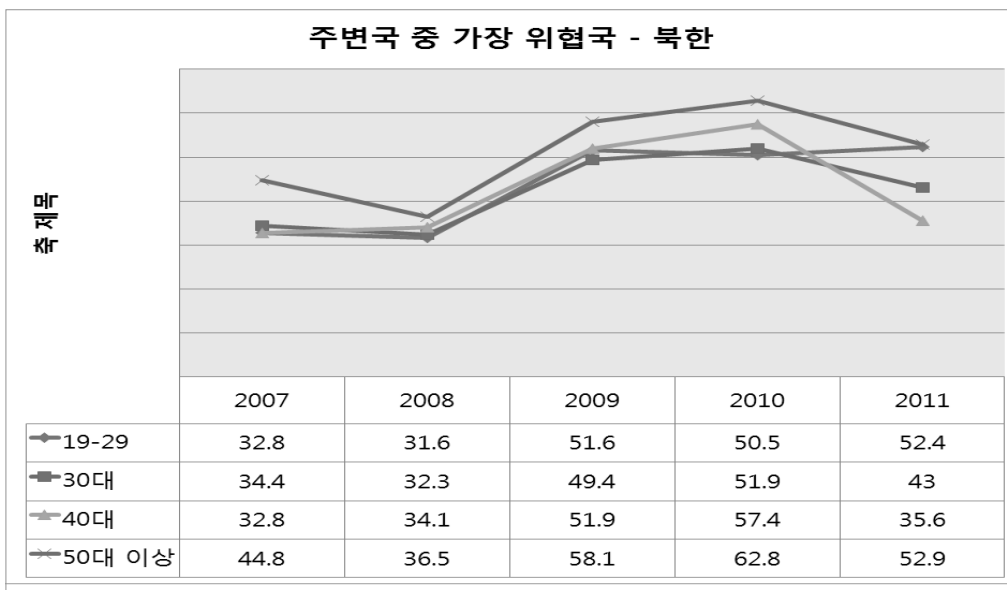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08-11)- 미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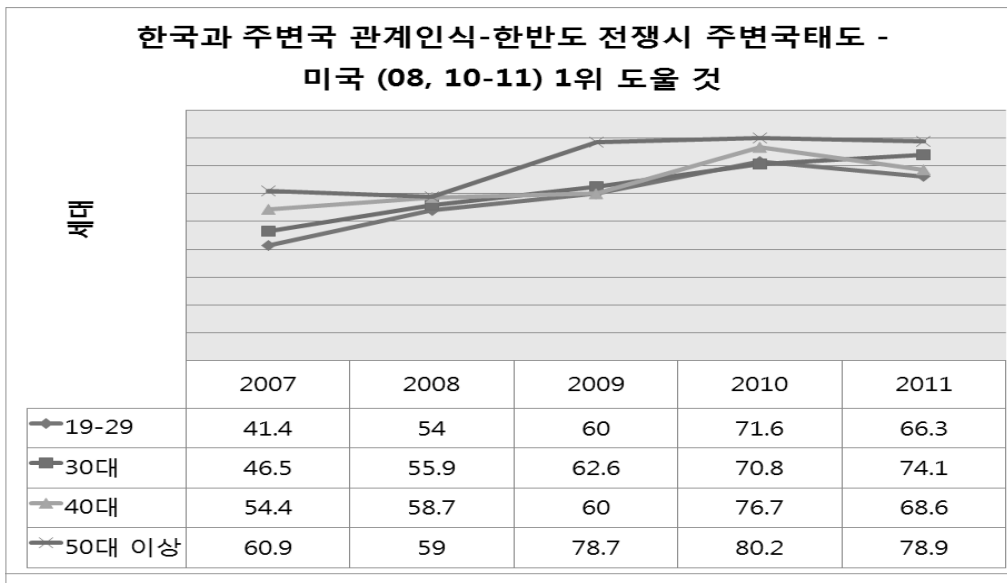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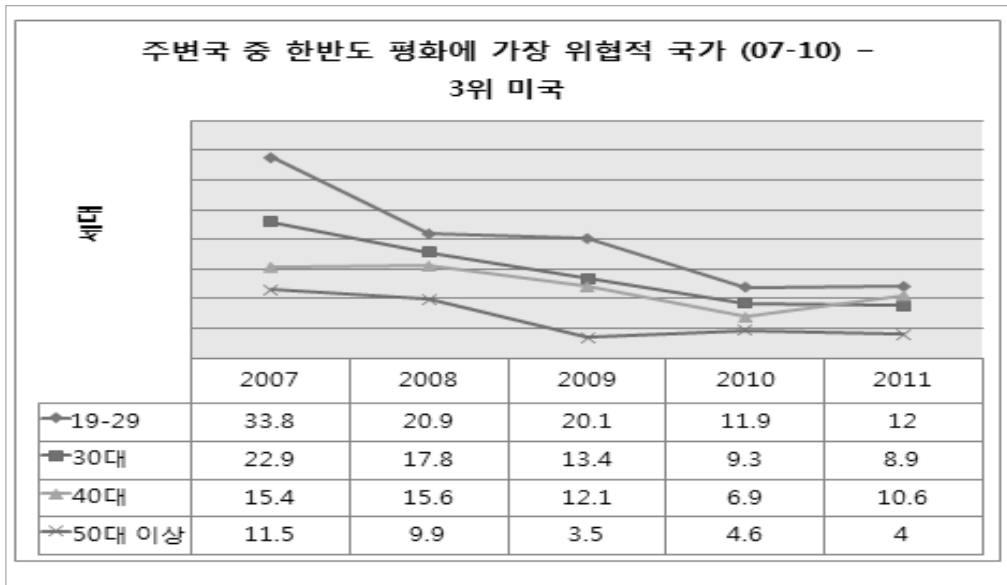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08-11)- 북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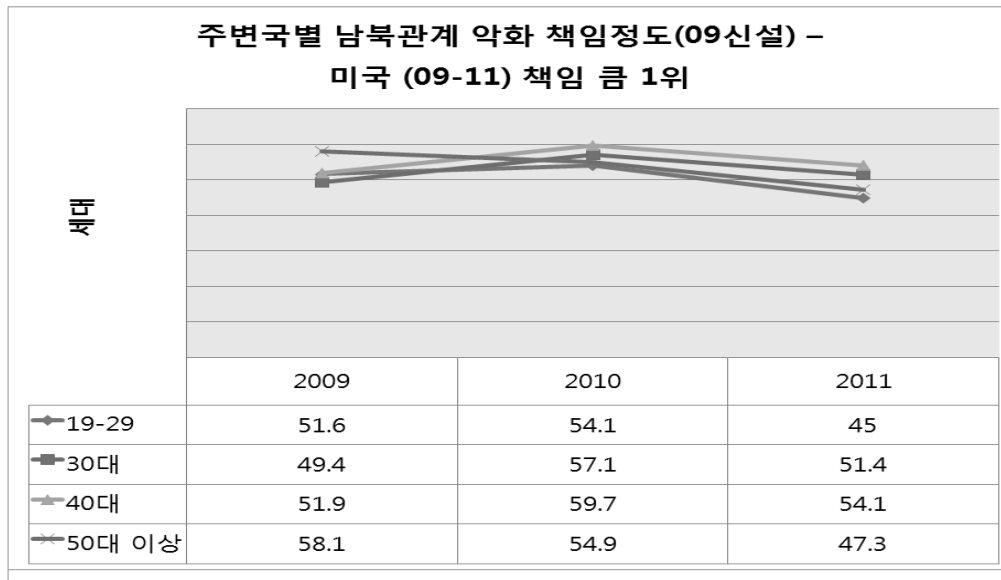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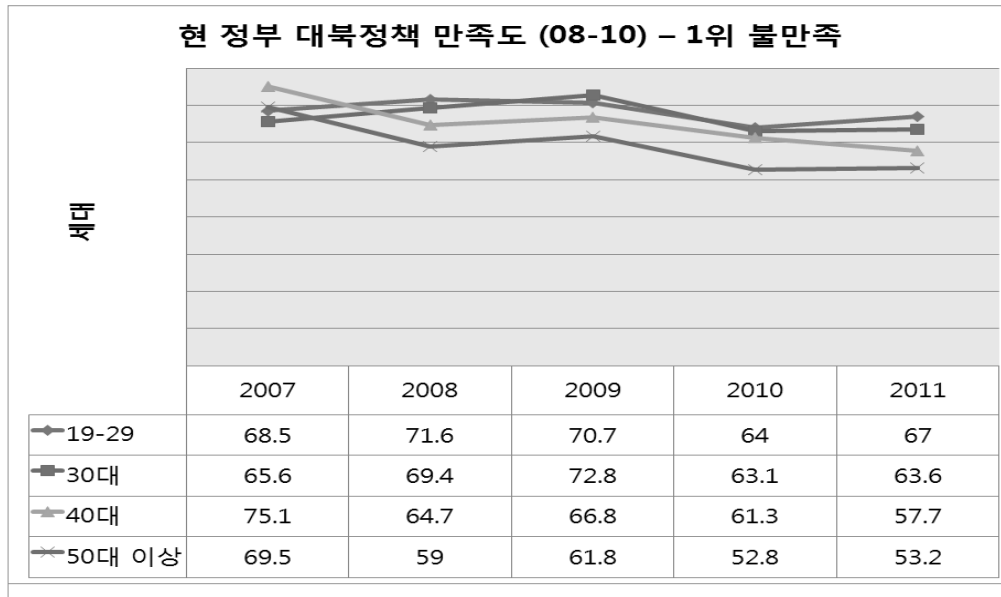
주변국 중 가장 위협국 - 북한





라.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해 2007년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07년도를 제외하고 19-29세, 30대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에서 엇비슷하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동반 유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40대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응답률은 50대 이상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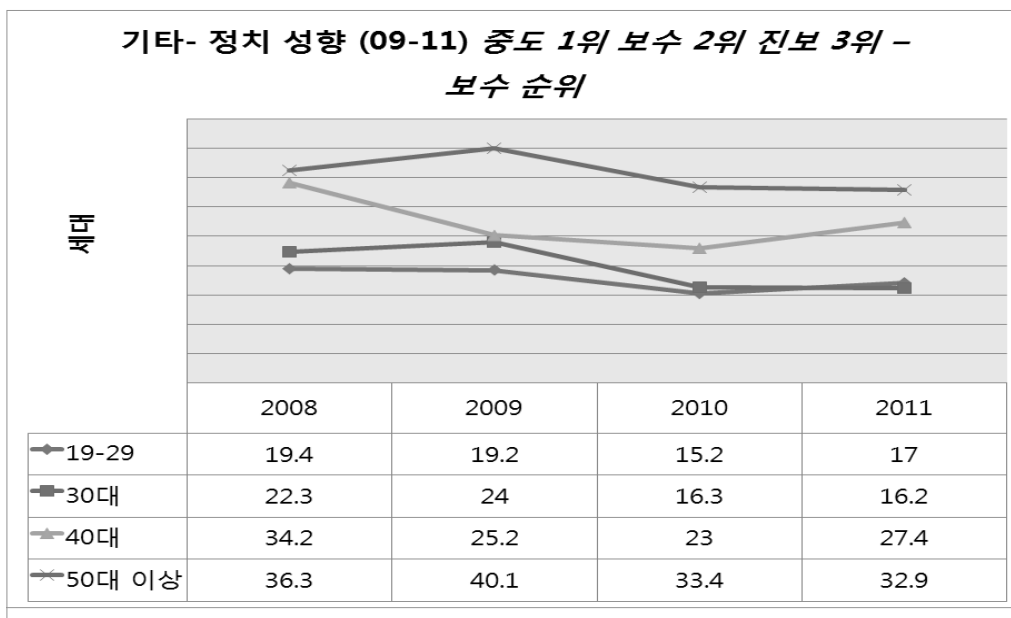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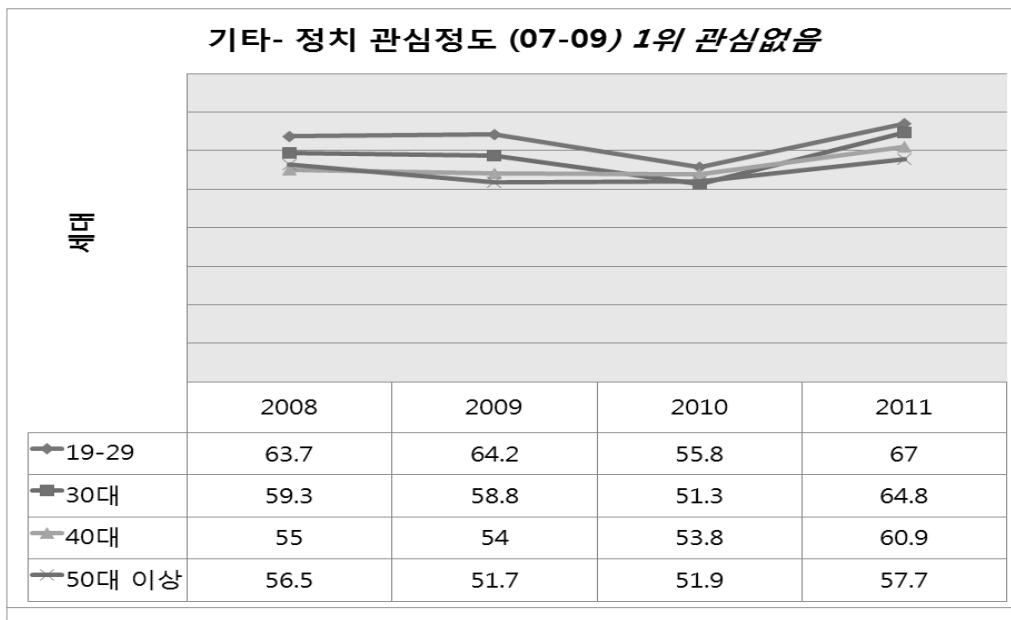
마.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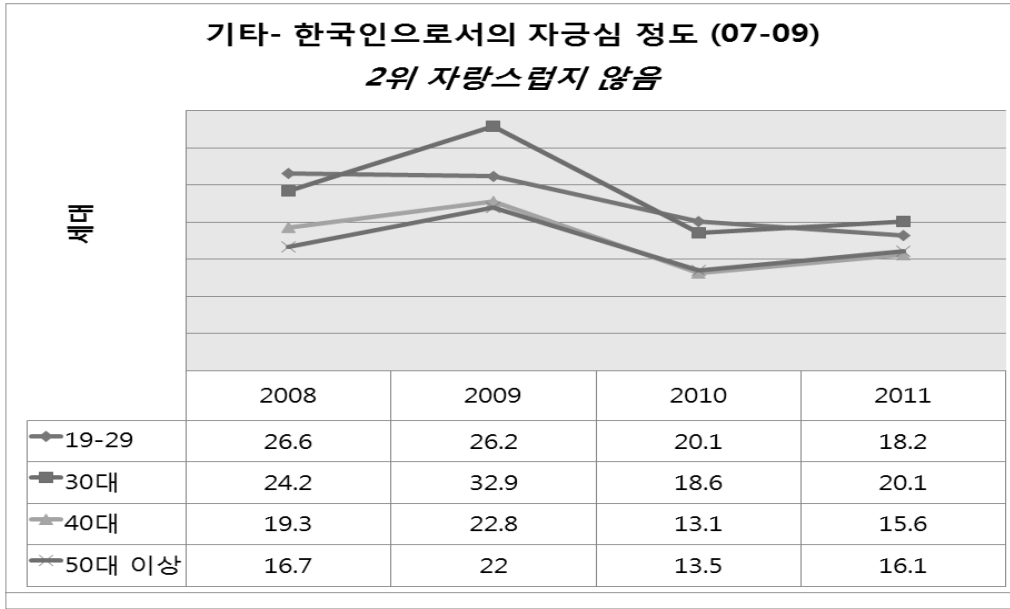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는 매년 1위가 '관심없다'는 응답이었는데, 세대별로 응답률차가 미미하지만 19-29세 응답자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중도'라는 응답이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보수라는 응답에서는 19-29세, 30대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이 40대, 50

대의 순으로 보수적이라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하면서도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도 2009년 30대가 32.9%의 응답률을 보인 바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19-29세, 30대의 응답률이 매년 40, 50대 이상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19-29세, 30대 vs. 40-50대 이상의 응답률 구도를 보이고 있다.





5. 세대별 통일인식과 통일준비 방향

가. 세대별 통일인식의 특징

(1) 19-29세

20대의 통일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보면, 통일에 대한 유보적 입장,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우리사회 내부에 대한 이해도 부족 현상, 보수와 진보 성향의 혼재 등이다.

첫째, 통일에 대해 가장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대는 2007-2011년 조사 결과에서 연속적으로 통일필요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 가능시기에 있어서도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최근 2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현재대호가 좋다'는 응답에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어 여타 연령대 대비 통일에 대해 가장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과 더불어 우리 사회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대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에 대해서도 20대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잘모른다’는 응답이 두드러진다. 이런 경향은 2007-2011년 세대별 통일인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정치에 관심없다는 응답도 이들 층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세 번째는 보수와 진보 성향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진보성향, 보수성향의 틀을 깨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언급하는 문항에서 20대는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한 바 있고, 주변 국가 중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직무평가,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 내지 불만족스러움을 가장 많이 드러낸 연령층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즉, 20대가 스스로 평가하는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것은 현 시대가 변화로 나아가기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안보 불안감은 북한에 대해서나 대북지원에 대해서 여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가 현역 입대 대상층이라는 점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이 이어지는 현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어느 연령층보다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안보, 경제상의 불안정성은 현정부와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대남, 대북 인식 전반에 걸친 무관심,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갖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 30대

30대의 전반적 특징은 ‘한국인으로서의 낮은 자긍심의 중도세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정치성향에 있어서 중도성향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으며, 전반적인 응답률에 있어서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태도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19-29세와 더불어 30대에서 40대·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40대

40대의 주요 특징은 '보수화되는 경향과 상대적인 진보성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19-29세, 30대 보다 낮게 나타나고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진보라고 대답한 비율도 20, 30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현재 40대 초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른바 386세대의 정치 성향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비판적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다. 현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들 층에서 불만족이 가장 클 것이라는 추측을 깨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대는 북한 및 통일관련 여러 문항에서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가장 높고, 대북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견해에 40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미국·일본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4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우리사회의 역사적 사건,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여타 연령대에 비해 구체적 지식과 평가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4.19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10월 유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이들 세대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40대는 2007-2011년 전 기간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50대 이상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연령대에 비해 한국사회, 대북인식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보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연령층이라 정리해 볼 수 있다.

(4) 50대 이상

50대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정형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는 연령층이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변국가 중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 비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7-2011년 통일의식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통일이 남한에 줄 이익에 대해서는 2007-2011년 전 기간에 걸쳐 50대 이상의 기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7-2011년 통일의식조사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19-29세 응답자들이 북한과 현정부에 대해 동시에 부정적 인식을 가장 크게 드러낸 것과 비교할 때, 50대 이상은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현정부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은 여타 연령층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50대 이상의 세대가 정치성향에서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스스로 보수적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40대, 19-29세·30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50대는 주변국 중 미국에 대한 호의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연령층이기도 하다. 2007-2011년 전 기간에 걸쳐 50대 이상이 미국을 가깝게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 시 도울 것이라는 응답에서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나. 통일준비 방향

본 글에서는 세대별로 나타나는 통일의식을 2011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1년 결과 뿐 아니라 2007년-2011년까지 5개년 간 실시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계열상 세대별 의식의 차가 어느정도 연속선상에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7-2011년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의식의 차보다는 공감하는 부분이 더 컸다는 것이나, 의미있는 견해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짚어본 뒤,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준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07-2011년도의 통일의식 조사 분석 결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세대간 의식차가 뚜렷하고 통일의 필요성, 통일시기 등을 비롯해 주변국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등에서도 세대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5개년 연속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인 문항들¹⁾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세대별 차이가 막연하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기 보다 특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통일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과정이듯이, 통일의식 또한 어느 한 영역으로 국한될 수 없고 세대별 차이도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다. 통일의식의 복합성을 생각할 때, 통일의식에 나타난 세대별 견해차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의식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대북정책,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19-29세가 체감하고 있는 대내외 위기 인식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통일의식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준비의 필요성이다. 이들이 30대와 더불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40대, 50대 이상에 비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들의 위기 인식 속에 형성된 정체성의 현재를 보게 한다. 20대인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위협, 북한의 위협을 어느 연령층보다 많이 느끼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현정부,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은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가장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어서이다. 20대가 현실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연령층이기에 연평도, 천안함 사태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안보불안을 어느 연령층보다 느끼면서 대북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상대적 반감을 드러낼 수 있고 경제적 불안정성도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도 가장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연령층이다.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대북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2년 간 통일이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상승세에 있는 20대의 견해²⁾에서도 북한에 대한 위협, 부정적 인식 등이 나타나는 추이와 통일 인식이 맞닿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들에게 있어 통일은 지금까지 윗세대와 충돌해온 성장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등과

1) 총 9개 문항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북한사회인지도(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아리랑축전)',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분야에서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4.19, 5.16, 10월 유신)'에 대한 문항에서였다. 이외에도 2-4개년 연속 세대별 견해차를 드러낸 문항들이 대북인식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 19-29세 청년층은 2010년, 2011년 조사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응답률이 10% 이상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시 충돌하고 새롭게 정리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라 여겨질 수 있다. 3대세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권위주의, 핵개발을 통해 단번도약하겠다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는 성장주의 등 일련의 북한 현상을 볼 때 지금까지 윗세대와의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갈등의 골로 들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윗세대에 비해 열악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비용 압박은 통일에 대해 불필요 인식, 무관심을 야기하는 배경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19-29세의 평가가 문항이 신설된 2010년 이래 2년간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의견 수렴과정도 요구되고 있다. 19-29세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어느 연령대보다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지어 보면,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과 군사적 긴장상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 파악해 볼 수 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주로 군사적 긴장 상황에 기인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낸 것이라 파악해 볼 수 있다.

세계경제가 하나로 묶여가고 있는 가운데서 ‘촛불세대’가 되었던 그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국으로서의 인식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자라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느끼는 위기 인식은 통일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지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통일에 대해 정서적 동기가 희석되어가고 있는 이들 세대에 있어 통일이 야기할 국내 뿐 아니라 대외적 위기가 어떻게 과급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이들의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고착화시킬 우려를 갖게 한다.

볼 글의 서두에서 현재의 20, 30대 포스트모던세대의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로 ‘정치사회적 무관심’ 등을 들었었다. 이들을 특징짓는 소비지향, 산업화된 대중문화에의 몰입 등은 ‘정치사회적 무관심’을 부추기는 주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치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잃어가게 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현 20-30대 청년층들에게 있어 통일 뿐 아니라 전반적 정치·사회적 무관심, 이해도 부족 현상의 배경으로도 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 20-30대 청년층과 더불어 이번 통일의식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층의 통일의식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20대의 통일의식

으로 이들 청소년층에서 나타날 대북, 통일 인식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 청(소)년 층에 대한 사회적 통합 노력과 더불어 우리사회 내부와 통일, 북한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반적 사회교육이 요구된다. 교육이라 칭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콘텐츠 확보와 접근성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최근 대두되는 대중성 가운데 하나로 통일교육의 대상이 '소극적 수용자에서 비판자, 참여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P세대(participation, passion, potential power, paradigm-shifter)의 등장은 이와 같은 적극적 자기 표출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교육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교육 방법 등의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청소년에 대한 통일교육에 있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고 주입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의 한계가 그것이다. 게임, 놀이 등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유형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제시되어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 통일교육과 관련한 행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전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강한 추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교육 대상자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참여'를 더욱 자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계속되는 대중의 변화에 부응해 나가는 지속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2007-2011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정치지향에 있어 '중도'성향의 비율이 진보와 보수를 앞지르면서 통상적으로 표현되는 진보와 보수 성향의 전형적인 틀이 깨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29세, 40대에서 이와 같은 '틀 깨기'는 분명하다. 40대는 민주화시기라는 그들 세대를 규정하는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지만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현실 상황과 혼재되며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19-29세, 30대 보다 보수적이며,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인식이 19-29세, 30대 보다 낮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대는 주변 국가 중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명박대통령의 직무평가,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 내지 불만족스러움을 가장 많이 드러낸 연령층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 부정적 인식을 가장 많이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의식조사 결과는 더 이상 이념의 대결이 아닌 각세대별로 그들의 생애주기에 놓인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의 가중치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 찬·반 여부가 나뉘기 보다 현시기의 문제들과 어울어져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대변한다.

넷째,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세대별 세분화된 통일교육과 더불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써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정책이 장기적 추진력을 요하는 공공정책임을 고려하면 통일의식과 관련해서 세대간에 나타나는 의식의 차는 통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어느 것보다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통일은 장기적인 국민적 합의와 결단, 실천을 요한다는 점에서 세대간에 나타나고 있는 대북관, 통일관 등의 차이를 파악하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경험, 남북갈등과 교류협력의 경험들이 세대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비전이 비단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2·3세대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실감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과정, IMF,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주자의 증가와 다문화 수용 요구 등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세대별 의식과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록]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ANOVA) 결과표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07	08	09	10	11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공통 13문항)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041	.001	.000	.000	.001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	.000	.000	.081	
	○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003	.010	.003	.000	-	
	○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	-	.018	-	-
		㉡ 학술인·예술인· 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	-	.035	-	-
		㉢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	-	.033	-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	-	.009	-	-
	○ 대북 시안별 시급성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	-	.044	-	-
		㉥ 북한의 개방과 개혁	-	-	-	-	-
		㉦ 군사적 긴장 해소	-	-	-	-	-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002	-	.047	.001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	-	-	-	-
		㉩ 북한의 인권 개선 (2008년 신설-2011까지)	-	.008	-	-	-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	-	-	-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공통 10문항)	○ 통일의 이익 정도	㉠ 남한	.005	.004	-	.005	-
		㉡ 자기 자신	-	.004	-	-	-
	○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	㉢ 빈부격차	-	-	-	-	-
		㉣ 부동산투기	-	-	-	-	-
		㉤ 실업문제	-	.002	-	-	-
		㉥ 범죄문제	-	.017	-	-	-
		㉦ 지역갈등	-	-	-	-	-
		㉧ 이념갈등	.046	-	-	-	-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029	-	-	-	-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001	-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07	08	09	10	11	
북한에 대한 인식 (공통 20문항)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	-	-	.001	.042	
	○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2009-2010)	×	×	-	.018	×	
	○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	.044	-	.003	.045	-	
	○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	-	-	-	-	
	○ 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2007-2008)	.010	.000	×	×	×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2007-2008)	-	-	×	×	×	
	○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015	.000	.000	.000	.004	
	○ 북한 사회 인지도	㉠ 선군정치	-	-	.001	-	.017
		㉡ 주체사상	.000	.002	.000	.000	.000
		㉢ 천리마운동	.000	.000	.000	.000	.000
		㉣ 고난의 행군	.002	.000	.000	.000	.000
		㉤ 장마당(2009-)	×	×	.000	-	.001
		(2007-2008) 꽃제비	-	.000	×	×	×
		㉥ 아리랑 축전	.001	.000	.000	.000	.000
	○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	.039	.006	-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	-	-	-	-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	.009	.008	-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	-	-	-	-
	○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	㉪ 선거방식	.048	-	-	.038	-
		㉫ 생활수준	-	-	-	-	-
		㉬ 법률제도	-	-	-	.003	-
		㉭ 언어사용	-	-	-	.001	-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	.039	-	.043	-
㉯ 가치관(2009년 신설-2011)		×	×	-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	.033	-	-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	-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ANOVA)				
		07	08	09	10	11
	○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 (줄여야 할 시 그 이유)	-	.014	-	.022	.038?
	○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2008년도 신설-2011)	×	-	-	-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	-	.002	.000	.009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	.003	-	-	-
	대북문제관련 찬반 - 찬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떠한 교류도 해서는 안된다.(2011년)	×	×	×	×	-
	○ 지난 정부의 남북한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동의 정도 (2008년도 신설-2011)	×	-	-	.000	-
	중국과 북한의 협력에 대한 견해(2011년)	×	×	×	×	-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4문항)	○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㉗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2009신설-2011)	×	×	-	.002	-
	남북관계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인도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2008)	×	-	-	-	-
	㉘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08신설-2011)	×	.032	.022	-	-
	㉙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2009신설-2011)	×	×	-	-	-
	㉚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2009년신설-2011)	×	×	-	-	-
	㉛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2009신설-2010까지)	×	×	-	-	-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는 안된다.(2008)	×	-	×	×	×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의 책임(2008)	×	-	×	×	×
	금강산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2010-2011)	×	×	×	-	-

○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2009년 신설-2011)	㉔ 북한의 책임	×	×	.000	-	004
	㉕ 한국의 책임	×	×	.041	-	-
	㉖ 미국의 책임	×	×	.018	.041	032
	㉗ 중국의 책임	×	×	-	-	-
	㉘ 일본의 책임	×	×	.001	-	04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	-	-	009	-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2011년 신설) (교류협력 vs. 적극적 압박)		×	×	×	×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2011) 남북한 교류협력과 긴장해소,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 신장,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 재원 마련,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	×	×	×	-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ANOVA)					
		07	08	09	10	11	
탈북자 (새터민)에 대한 생각 (10문항)	○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	-	-	-	-	
	○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 이웃	-	-	-	-	-
		㉡ 직장 동료	-	-	-	-	-
		㉢ 사업 동업자	-	-	-	-	-
		㉣ 결혼상대자	-	.003	.003	-	-
	○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	.009	.027	-	-	
	○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	.026	.031	-	-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001	-	-	-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	-	-	-	-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	-	-	-	-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공통 16문항)	○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	.000	.000	.000	018	
	○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000	.029	.000	.013	-	
	○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	-	-	-	-	
	○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 미국	-	.006	-	.025	.006
		㉡ 일본	.008	-	-	-	-
		㉢ 중국	-	-	-	-	-
		㉣ 러시아	.010	.003	.034	.028	-
	○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 미국	.000	-	.000	.041	-
		㉡ 일본	-	.005	-	-	-
		㉢ 중국	-	-	-	-	-
		㉣ 러시아	-	-	-	-	-
	○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미국	-	-	.001	-	000
		㉡ 일본	.003	-	-	-	-
		㉢ 중국	-	-	-	-	-
		㉣ 러시아	-	-	-	-	-
	○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2008년 신설 - 2011)	㉠ 미국	-	-	.007	-	011
㉡ 일본		-	-	.006	-	-	
㉢ 중국		-	-	.043	.000	-	
㉣ 러시아		-	-	.033	-	-	
○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	-	-	.034	-	-		
○ 주변국 비협조시 남북한 통일가능정도 (2007)	-	×	×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분	내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ANOVA)					
		07	08	09	10	11	
해방 이후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4문항)	○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4.19	.013	.000	.000	.000	.020
		㉡ 5.16	.000	.000	.000	.000	.004
		㉢ 10월유신	.000	.001	.000	.000	.003
		㉣ 광주민주화운동	.038	-	.001	-	-
		㉤ 6월 항쟁(1987년)	-	.001	-	.002	-
		㉥ 남북 정상회담 2007-2008년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2008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2010-11년 남북 정상회담	-	-	-	.035	-
	○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000	.000	.000	.000	-	
	○ 197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견해(2007-2008년)	-	-	×	×	×	
	○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	㉦ 빈부격차	-	-	.004	.022	-
		㉧ 부동산투기	-	-	-	-	-
		㉨ 실업문제	-	.015	.004	-	-
		㉩ 범죄문제(2007-2009)	-	-	-	×	×
		㉪ 지역갈등	-	-	-	-	-
		㉫ 이념갈등	-	-	.013	-	-
		㉬ 반미정서(2008-2009)	×	-	.018	×	×
		○ 환경파괴(2010-2011)	×	×	×	.003	-
		○ 표현의 자유제약(2010-2011)	×	×	×	-	-
		○ 종교갈등(2010-2011)	×	×	×	-	-
		○ 반미정서 우려수준 평가(2007)	-	×	×	×	×
		○ 부정부패 (2011년신설)	×	×	×	×	-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공통 8문항)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017	.002	.006	-	-
		○ 이명박대통령 직무 평가(2010년 신설-2011)	×	×	×	.000	.000
	○ 정치적 성향	-	-	.000	.000	.012	
	○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	-	-	-	-	
	○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000	.001	.001	-	-	
	○ 2007 대선 시 투표 후보(2010년-2011)	×	×	×	.000	-	
	○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000	.000	.000	.000	-
		○ 항의 시위와 데모(2007-08)	.000	.000	×	×	×
㉮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000	.000	.000	.000	-	

	㉔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 판하는 행위(2009-2010)	×	×	-	.001	-
○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2008-2009)	×	.000	.000	×	×
○	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	-	-	-	-	-
○	한반도 전쟁 가능성	-	.000	.001	-	-
○	천안함 침몰원인 정부조사 신뢰도 (2010-2011)	×	×	×	.000	.000
○	천안함 사건 해결 적절성 (2010)	×	×	×	-	×
○	천안함 사건 현 정부 대북정책에 원인 있다는 주장 동의 정도(2010)	×	×	×	.012	-
○	2007년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2010)	×	×	×	-	×
○	지지정당 (2011)	×	×	×	×	-
○	차기 대선 주요 쟁점 (2011)	×	×	×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토론 1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토론 2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



1.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김병로)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유의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반수가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다행.
- 통일의식 감소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
 -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식화사업효과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부주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배경일 가능성
 - 여성의 통일의식, 젊은층의 통일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과 사회적 경험의 편차가 초래했을 가능성
 - 지역적 편차도 정치적 관심의 영향일 수 있음.
 - 통일전망은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에 동의
- 통일의 이익 기대는 반반씩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음.
 - 집단과 개인간 차이는 이익과 비용 발생의 시기적 차이때문일 수 있으며 통일의 기대감은 저자의 주장대로 통일의 실리적 활용도 개선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386세대의 진보적 통일의식으로 보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를 이념적 잣대로 치환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통일세 논의는 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앞선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남한체제를 중심으로한 통합에 대한 견해가 많은 것을 흡수통일로 간주하는 것은 체제적 지향을 통일형태적 선호도로 대체하는 잘못을 초래할 수 있음.
- 북한인식 : 협력대상이면서 적대대상, 경계대상으로 답변하는 것은 북한의 정체성을 그대로 잘보여주는 것. 북한의 실제적 이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이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때문이며 이는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행동에 의해 객관적으로 북한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협력의 대상이라는 답변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3,40대에서 협력적 대상이라는 답변이 일부 증가한 것은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경계심이 다른 측면을 보라고 주장하는 것일 수 있음.
 -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이 감소한 것은 북한지원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높지 않아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념적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북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 전반적으로 불신의 정도가 높아졌고 이는 세대, 지역, 이념에 관련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며 그 추세는 북한이 자초한 것.
 -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특정방향으로 이끌려 할 경우 오히려 반발하거나 의심하게 되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객관적인 Fact 중심의 정책이 가장 효율적임을 시사.
 - 대북신뢰 및 불안의식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의 도발이 남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보다는 더 나쁜 환경을 초래한 것을 시사하므 대남 압박이 목적이었다면 도발은 실패로 보임.

- 대북정책면에서는 정부에게 안보의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 수호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안보불안이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기 보다는 질책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신뢰할 수 있는 안보상황을 보여주지 못했고 협력을 통한 충돌잠재성을 저하시키지도 못했기 때문.

2.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외인식 변화 (이상신)

-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안보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것은 동의하나 변화의 원인을 정치적인 요소에서만 찾는 것은 경계할 필요.
 - 미국에 대한 친밀도 상승이 오바마대통령의 당선때문으로 보는 것은 명확한 근거 부재.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찾아야. 특히 중도그룹의 대미인식은 실리적 측면에서 불 필요.
 - 예) 2008년 미국의 통화스왑으로 외환위기 극복, 2009년 G20 한국지원, 2010, 2011 미국의 안보지원, 그러나 미국의 환율압박, 양적완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도 고려해야.

-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하락한 이유를 미국에 대한 친밀감 증가를 주요 이유로 보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볼 필요도 있음.
 - 북한이 MB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대남 도발, 혹은 압박수위를 높여온 것이 친밀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킨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음.
 - 예)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폭파와 연평

도 포격 등,

- 북한의 도발이 진보와 보수간 대북친밀도의 차이를 축소할 측면도 있음.
- 위협적인 나라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국민들의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위협과 개인에 대한 위협, 군사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등 위협의 내용에 따라 다른 응답의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미국의 위협은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위협을 상정했을 가능성 존재.
- 중국의 경우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위협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와 군사 외교부문에 대한 위협을 포괄하는 것일 수 있음.
-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은 북한과 중국에 가장 많이 있다고 답변한 것은 현 남북경색의 해소도 이 국가들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한미공조 못지않게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향후 통 정책 혹은 대북정책에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실.

3.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박정란)

- 세대간 차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 세대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의 수가 감소한 것은 공통의 인식을 초래한 사건들이 발생한 탓으로 보임. 예)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 세대간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이 외부환경일 가능성이 높음.
예) 반공교육, 세대적 성취도, 실업의 정도, 빈부격차등 사회적 여건이 차이
 - 해소가능한 원인과 그렇지 못한 원인을 구별하여 사회통합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 통일관련 교육의 차별적 접근 필요성 동의, 전반적인 교육강도, 교육내용의 일관성 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

1. 대북정책의 방향과 여론

- 짧게는 지난 1년간, 길게는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표출된 것으로 보임.
-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현정부의 원칙적 관여정책을 모두 겪으면서 국민들은 관여의 전체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반드시 막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대북 포용과 원칙적 관여 모두의 장점을 살리고 제3의 대북 정책 패러다임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은 관여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에 기반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 및 외교활동을 벌이면서 장기적이고 명확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큰 변화가 없고, 단기적 통일에 대한 기대가 약하며, 통일이 개인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정책과 연결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됨.
-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면 통일정책에 대한 정치적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임. 고연령층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민족주의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인식, 현재 경제문제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생각할 때 앞으로 지속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통일한국의 성장동력 창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지구적 중견국으로 한국의 성장 등 새로운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임.

3. 국제환경과 주변국에 대한 인식

-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은 한미관계의 발전이 대북 정책과 통일정책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인식된 결과라고 보여짐. 그러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미중에 대한 인식이 대략 제로섬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엿보임.
- 향후 통일정책을 추구해 나가는데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민들의 인식이 양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정책을 전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 미중 간 한국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개별사안으로 인한 주변국 인식 때문에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행위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4.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 한국 국내정치 지형상 정권 초기의 대북정책 기조가 5년간 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따라서 내년 대선 과정의 대북정책 내용이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임.
-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대북, 통일정책은 중요한 선거 쟁점은 아니나, 정파성에 따라 매우 다른 의견을 나타내므로 선거과정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담론 제시가 매우 중요함. 특히 무당과 부동표의 향배가 초당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과거 김대중 정부 이후 15년간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북한이 처하게 될 상황,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세대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방향이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젊은 층의 대북, 통일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학술심포지움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토론 6

최진이 (림진강 발행인)



통일개념의 모순, 통일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와 그 극복방도

두 발제문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외인식변화”는 그 주제가 국민의 통일의식 주도보다 현 국민의 통일의식 조사에 머무르다보니 통일담론이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통일의식 주도 변수들, 실례로 북한관련 경험지수¹⁾와 통일문제 담당 여부에 따른 세대별 인식차 등을 간과한 점은 이 두 발제문이 기존의 통일담론에 묶여있게 하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토론문에서는 우선 통일개념의 형성과정을 다루고 통일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 이 극복을 위한 방도에 대해 간단히 보려고 한다.

1. 통일개념의 모순

1945년 8.15 광복 직후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있는 당사국도 아닌 조선반도는 파쑈독일과 함께 분단되고 말았다. 당시 남북은 “분단되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다”고 생각한 듯이 여겨진다. 물론 애써 “총선”이요, “국토(완정)헌법²⁾”이요, 자취는 꼼꼼히 남겨 두었지만 결국 “한일합병” 이전 하나이던 정상은 1948년 유엔의 감독 아래 서울과 평양에 각각의 단독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두개의 정상으로 되어버렸다. 폭발적 해방의 취기로 하여 스며드는 분단의 의미를 민중은 읽어 내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균정을 실시한 남북 주둔 대국들의 무책임도 깔려 있다. 그 중 하나였던 소련은 고작 허상의 귀신만이 현재에 남았을 뿐이다.

피어린 동족상쟁인 1950년 6.25 전쟁도 통일의지는 커녕 어떤 의미에서는 분단지속 개념 강화용도에 불과하였다. 결과 국제정치의 랭전시대의 서막에 조선반도를 제공한 꼴로 되고 말았다.

그 쓰라린 교훈에 이은 1970년대 이후 남북의 통일개념은 북에서는 “모든 불행과 긴장의 근원”으로 정착하였고, “자주통일”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더욱이나 “통일하겠다”

1) 지능 검사의 결과로 지능의 정도를 총괄하여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

2) 국토완정은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한 나라의 영토를 단일한 주권밑에 완전히 통일하는 것”이다.

가 정치활동의 대명사로 되어 있었다. 가령 김정일위원장이 새로이 “나는 이 동무들과 조국통일을 하겠소”라는 말했다면 그들이 이제 최고신임을 부여 받았다는 뜻으로 전달 되었다. 즉 “민족의 불행과 긴장의 근원을 없앤다”는 대의명분이 늘 정상과 그 정치의 정당성을 받쳐 주게 되는 셈이었다. 당시 남에서의 통일개념은 “반공(승공)”으로 정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는 9월 18일(뉴욕시간 17일)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승인, 확정함으로써 남북한은 분단 46년 만에 북한이 160번째, 남한이 161번째로 가입하여 별개의 의석을 가진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³⁾ 즉 남북은 2개의 국가로 공식 인정됨으로써 분단이라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한 셈이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의 주장은 북도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이 국민의 옹바로 된 통일의식을 형성시키자면 바로 이 모순에서부터 접근하여 통일인식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통일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

현재 북 사회는 자주통일에서 급격히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 고작 남았다는 자주통일의 형체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중과 멀고 먼 대남구호 속에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릴 뿐이다. 북에서 민중의 통일개념은 개방, 조미관계 개선의 3위일체 속에 얽혀 돌아가고 있다. 통일개념은 북남의 문제이고 개방은 조중간의 문제이다. 중국과 미국은 민중의 의식 속에서 떠나버린⁴⁾ 통일개념 속에 다시 들어 와 든든히 앉고 있다. 소련은 잠깐 왔다가 조선의 분단을 남기고 떠난 허한 아리랑 그 존재이지만, 중국은 전통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큰 린국이였다. 한반도, 특히 북한의 사대주의는 주로 중국으로 하여 발생 고착된 기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어쨌거니와 과거 쏘미를 대신하는 중미가 새로운 통일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3) 동서독의 경우 양자간에 기본 조약을 체결하여 그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임을 내외에 선포한 뒤 유엔에 가입하였다.

4) 북 주민들은 현재 한국은 너무 번덕이 많아 믿지 못하겠다. 즉, “통일은 안되겠다” 쪽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 북 당국의 통일=반당국 식의 여론몰이도 주민들의 반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세분단으로부터 자주통일로 통일개념이 변하기까지의 로정에는 민중의 많은 피와 땀이 스뻐으나 결국 그 자주통일마저도 아무 결과 없이 수십년 지내고 보니 그저 그림의 떡으로나 되고, 오로지 민중만 변함없이 기아에 주리고 있으니 통일개념도 이제 또 새로이 변화하는 중이다. 분명 민중은 지금 개방의 기쁨에 취하려는 열기로 잔뜩 들떠 있다. 게다가 민중의 개방미래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중국에서 떠서 조선을 찬연히 비쳐지고 있다. 햇볕정책도 있기는 하였지만 남조선은 아직 사회적으로 너무 멀고 또 감추어질 수도 있어 민중에게는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존재이다. 또 아무리 현대적인 미국이라도 조선민중에게는 남조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나 겨우 보이는 멀고도 먼 형체이다.

한국에서 현재 국민의 통일개념은 정치가들의 문제, 혹은 국제문제로 넘겨져 있는 듯이 보여진다.

3. 통일과 시민운동

통일이 더 이상 정치가들의 문제, 국제문제로 남아있지 않게 하자면 통일이 곧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에 형성되어야 한다. 즉 내년부터 개방이 예상되는 북한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국제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청년인력이 대량 요구된다. 북 청년들은 국제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 외국의 청년들에 비해 한국 청년들은 언어가 되고 북에 대해 비교적 이해가 있어 가장 적절한 대상자로 되기는 하나 국제적 경험과 지식을 쌓아 경쟁력을 갖추려는 북 청년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엔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북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기회 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단 청년들에 한한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남북한 통일문제는 결국 내 이익과 결부되는 문제임을 깨닫고 자기 일거리를 찾아내도록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남북의 통일은 시민의 관심 속에, 시민의 참여 하에, 시민의 관찰 속에 이끌어져가는 운동으로 바뀌어져야 그 실질적 미래가 있다.

